

연구보고서 2022-20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김성아

노현주·안수란·이소영·조성은·고든솔·신영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신영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보고서 2022-20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고려씨엔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84-6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2.20>

## 발|간|사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과 압축복지를 이룬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에 진입한 첫 사례가 되었다. 1960년 공무원연금 도입을 필두로 1990년대까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체계를 갖추었다. 1997년 금융위기 이후,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혜적 복지제도의 성격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의 규모가 OECD 가입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그 규모가 증가해왔음은 분명하다. 경제정책에 기여하는 복지정책에서 국민의 삶의 질 증진을 지향하는 사회정책으로 변모해오면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국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전 지구를 뒤덮은 팬데믹으로 위험은 복잡다단해졌고 새로운 위기를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학습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치지만 그로부터 회복하는 탄력성은 인적 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정책의 역할이 다변화되고 적극적이 되어야 할 이유다. 새로운 위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니다. 과거로부터, 세계로부터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향후 나아갈 바를 탐색해야 한다.

사회정책 동향 분석은 지표를 통해 정책 성과의 수준과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게 근거를 생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통해 과학적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이 연구는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책임을 맡았고, 안수란 연구위원, 이소영 연구위원, 조성은 연구위원, 고든솔 부연구위원, 신영규 부연구위원과 노현주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이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적인 자문 의견을 주셨다. 그 외에도 사회정책 동향 분석들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와 자문에 참여하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 목 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론 .....</b>	<b>7</b>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	9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2
<b>제2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b>	<b>15</b>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정의와 범위 .....	17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사례 .....	24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차별성 .....	32
<b>제3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발 .....</b>	<b>35</b>
제1절 분석틀 개발 개요 .....	37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38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안) .....	57
<b>제4장 보건의료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b>	<b>63</b>
제1절 건강수준 .....	65
제2절 건강행태 .....	77
제3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	81

---

<b>제5장 소득보장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b> .....	<b>93</b>
제1절 가계 .....	95
제2절 소득분배 .....	99
제3절 경제활동 .....	109
제4절 정책 수요 및 공급 .....	115
제5절 주거 .....	123
<b>제6장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b> .....	<b>127</b>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	129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	142
<b>제7장 인구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b> .....	<b>151</b>
제1절 인구(정태·동태) .....	153
제2절 가구 .....	161
제3절 혼인·출산 .....	166
제4절 돌봄·양육 .....	171
<b>제8장 사회보장 일반 동향</b> .....	<b>177</b>
제1절 행복·삶의 질 .....	179
제2절 사회인식 .....	184
제3절 사회보장재정 .....	198
제4절 거시지표 .....	207



<b>제9장 결론 및 제언</b> .....	<b>215</b>
제1절 요약 및 결론 .....	217
제2절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 .....	218
<b>참고문헌</b> .....	<b>225</b>
<b>부록</b> .....	<b>239</b>
[부록 1]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발을 위한 전문가조사표 .....	239
[부록 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	253

# 표 목차

---

〈표 1-1〉 전문가 조사 개요	14
〈표 2-1〉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정책 범위	19
〈표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관」에 의한 사회정책 범위	21
〈표 2-3〉 이광희 외(2006, 역)의 성과지표 예시: 1997년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23
〈표 2-4〉 OECD의 주요 동향 분석 보고서	25
〈표 2-5〉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동향 분석 현황 (2022.2. 기준)	31
〈표 2-6〉 소득보장 분야 지표 예시	34
〈표 3-1〉 전문가 조사 개요	38
〈표 3-2〉 1차 조사 결과 수집된 지표 수	39
〈표 3-3〉 2차 조사의 세부 영역 및 조사 대상 지표 수	40
〈표 3-4〉 보건의료 분야 2차 조사 결과	42
〈표 3-5〉 소득보장 분야 2차 조사 결과	45
〈표 3-6〉 사회서비스 분야 2차 조사 결과	48
〈표 3-7〉 인구 분야 2차 조사 결과	50
〈표 3-8〉 사회보장 일반 분야 2차 조사 결과	53
〈표 3-9〉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된 지표들	54
〈표 3-10〉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안)	61
〈표 4-1〉 연령별 자살률 추이(2011~2020년)	74
〈표 4-2〉 경상의료비 재원별 추이(2011~2020년)	88
〈표 5-1〉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2012~2021년)	112
〈표 5-2〉 장기실업률 추이(2012~2021년)	114
〈표 5-3〉 기준 중위소득 추이(2015~2022년)	116
〈표 5-4〉 연금별 수급자 수 추이(2011~2021년)	120
〈표 6-1〉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135
〈표 6-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수정 항목	143
〈표 7-1〉 총인구 및 성별, 연령별 인구 규모: 2020~2021년	155
〈표 7-2〉 성별·연령별 구성비: 2020~2021년	156





〈표 7-3〉 국내이동률 국제비교: 2011~2021년 .....	159
〈표 7-4〉 연령계층별 이동률: 2011, 2020, 2021년 .....	160
〈표 7-5〉 맞벌이 여부별 가사노동 유형별 평균시간 .....	172
〈표 8-1〉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	186
〈표 8-2〉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	186
〈표 8-3〉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	187
〈표 8-4〉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	188
〈표 8-5〉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	189
〈표 8-6〉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	190
〈표 8-7〉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	191
〈표 8-8〉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	191
〈표 8-9〉 신문사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	192
〈표 8-10〉 기관에 따른 국가별 신뢰 정도 .....	194
〈부록 표 2-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수정 체계 .....	253

# 그림 목차

---

[그림 1-1] 주요국의 사회지출과 삶의 질 순위 .....	10
[그림 1-2] 연구내용 및 구조 .....	12
[그림 2-1] 문신용, 윤기찬(2008)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 .....	22
[그림 2-2] 세계은행의 “나은 삶을 위한 DB” 구축 계획 .....	28
[그림 2-3]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통계 분야 및 세부 영역 .....	29
[그림 4-1] 성별 기대여명 추이(2010~2020년) .....	66
[그림 4-2] 기대수명 국제 비교 .....	67
[그림 4-3] 성별 건강수명 추이(2012~2020년) .....	69
[그림 4-4] 성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격차(2012~2020년) .....	69
[그림 4-5]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를 추이(2010~2020년) .....	70
[그림 4-6] 주관적 건강상태 국제 비교 .....	71
[그림 4-7] 우울감 경험률 및 우울증상 유병률 추이(2008~2020년) .....	72
[그림 4-8] 성별 자살률 추이(2001~2021년) .....	73
[그림 4-9] 연령별 자살률 추이(2011~2020년) .....	74
[그림 4-10]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자살률 .....	75
[그림 4-11] 자살률 국제 비교 .....	76
[그림 4-12] 성별 흡연율 추이(2011~2020년) .....	78
[그림 4-13] 성별 음주율 추이(2011~2020년) .....	79
[그림 4-14] 성별 비만 유병률 추이(2011~2020년) .....	80
[그림 4-15] 미충족 의료율 추이(2011~2018년) .....	82
[그림 4-16] 건강보험 보장률(2011~2020년) .....	83
[그림 4-17]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	84
[그림 4-18]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2011~2020년) .....	85
[그림 4-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국제 비교 .....	86
[그림 4-20] 경상의료비 재원별 추이(2011~2020년) .....	88
[그림 4-21]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국제 비교 .....	89
[그림 4-22]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2010~2018년)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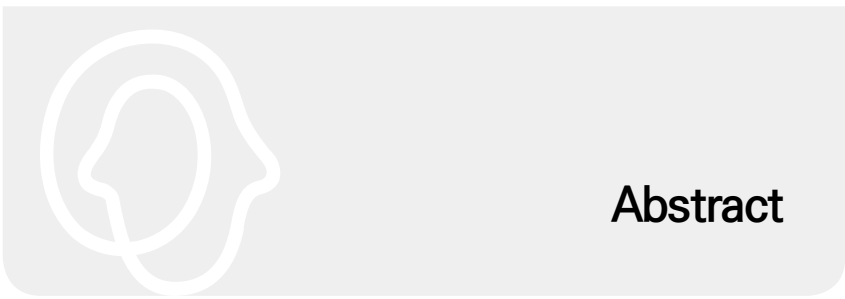
[그림 5-1] 2010년대 가구 소득 .....	96
[그림 5-2] 2010년대 가구 지출 .....	97
[그림 5-3] 2010년대 가구 자산 .....	98
[그림 5-4] 2010년대 가구 부채 .....	99
[그림 5-5] OECD 가입국의 빈곤과 불평등 .....	100
[그림 5-6] 2010년대 국내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	102
[그림 5-7] 2010년대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율 .....	104
[그림 5-8] 2010년대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율 .....	105
[그림 5-9] 2010년대 주요 인구 및 가구 유형별 빈곤율 .....	108
[그림 5-10] 근로빈곤율 추이(2012~2021년) .....	111
[그림 5-11] OECD 주요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2019년) .....	113
[그림 5-12] OECD 주요 국가 장기실업률(2021년) .....	115
[그림 5-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	117
[그림 5-1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	118
[그림 5-15]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추이(2011~2020년) .....	119
[그림 5-1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2011~2021년) .....	121
[그림 5-17] OECD 공적연금 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 from mandatory public, 2014/2020) .....	122
[그림 5-18] 2010년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124
[그림 5-19] 2010년대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부담률 .....	125
[그림 6-1]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	130
[그림 6-2]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	131
[그림 6-3] 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 .....	132
[그림 6-4]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 .....	133
[그림 6-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137
[그림 6-6]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 .....	139
[그림 6-7]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140

[그림 6-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2019년 .....	141
[그림 6-9]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시설), 2019년 .....	141
[그림 6-10] 사회서비스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144
[그림 6-11] 사회서비스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145
[그림 6-12] 종사자 규모, 조직 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중 .....	146
[그림 6-13] 사회서비스 취업자 특성 .....	148
[그림 6-14]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	149
[그림 6-15]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	150
[그림 7-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1960~2021년 .....	154
[그림 7-2] 고령화지수(Aging Index): 1960~2022년 .....	157
[그림 7-3] 국내이동률 및 이동자 수 추세: 1971~2021년 .....	158
[그림 7-4] 연령별 이동률: 2020~2021년 .....	160
[그림 7-5] 가구원 수별 가구 유형: 2010~2021년 .....	161
[그림 7-6] 성별, 연령별 1인 가구 비율(2020년) .....	162
[그림 7-7]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 2017, 2037년 .....	163
[그림 7-8] 총 가구 규모 및 연평균 변화율: 1980~2021년 .....	164
[그림 7-9] 가구 유형별 비율: 2005, 2021년 .....	165
[그림 7-10]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	167
[그림 7-1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1970~2019년 .....	168
[그림 7-12] 결혼이민자 연도별·지역별 현황 .....	169
[그림 7-13] 결혼이민자 연도별·국적별 현황 .....	170
[그림 7-14] 결혼이민자 비율(2017~2021년) .....	170
[그림 7-15] 기혼 남녀의 가사노동 유형별 평균 시간: 2004, 2009, 2014, 2019년 .....	173
[그림 7-16] 성별 육아휴직자 수: 2013~2020년 .....	174
[그림 8-1] 주요국의 행복 수준 국제비교 .....	180
[그림 8-2] 한국인의 행복 추세 .....	181
[그림 8-3] 주요국의 웰빙 지수 .....	182



[그림 8-4]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 .....	183
[그림 8-5]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추세 .....	184
[그림 8-6] 국가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 .....	193
[그림 8-7]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2016~2020년) .....	196
[그림 8-8]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2017~2020년) .....	197
[그림 8-9] 주요국의 사회지출 .....	199
[그림 8-10] 주요국의 1인당 사회지출 .....	200
[그림 8-11] 주요국의 주요 분야별 사회지출 .....	201
[그림 8-12]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	203
[그림 8-13] 2012~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	204
[그림 8-14] 2012~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	206
[그림 8-15]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2011~2021년) .....	207
[그림 8-16] OECD 경제성장률(2021년) .....	208
[그림 8-17]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1~2021년) .....	209
[그림 8-18] OECD 소비자물가지수(2011/2021) .....	210
[그림 8-19] 국내 기온 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2011~2021년) .....	212
[그림 8-20] 전 지구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2011~2021년) .....	213
[그림 8-21] 국내 연평균 해수면 온도와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2011~2021년) .....	213
[그림 9-1] 국민 인식이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	222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f the Social Trends Monitoring

Project Head: Kim, Seonga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ime-series trajectory of the level and gap of social policy performances as indicators, and diagnose the current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omparison, in order to derive a method for preparation of the basis to be produced in a timely mann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first, we developed a framework for monitoring the social trends. To this end, we reviewed literature, conducted expert surveys twice, and discussed the needs for measurement indicators, usability, and availability of data.

Second, using the social policy trends monitoring framework, we analyzed the social policy performances in the fields of health care, income security, social service, population, and general policy conditions. We tried to monitor social trends and policy performances through time series trends over the past 10 years and recent cross-sectional international comparisons.

All findings together, our suggestions for conducting th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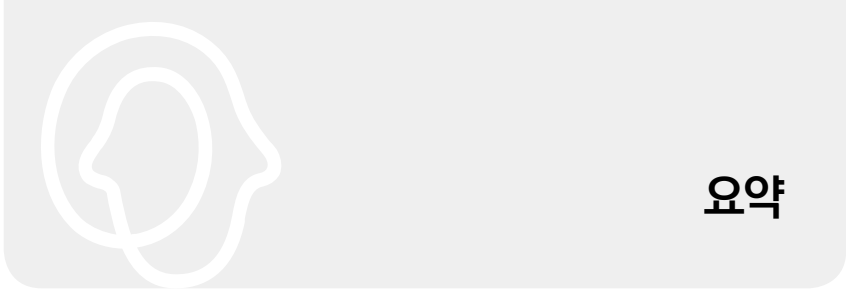
Co-Researchers: Noh, Hyun-ju · Ahn, Suran · Lee, So-Young · Cho, Sungeun · Go, Dun-Sol · Shin, Young-Kyu

## 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social trends monitoring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conduct trend analysis by sector in order to consider the individual policy conditions unique to each policy field and sufficiency of the analysis. Second, practical efforts are needed to alleviate the restrictions on the various secondary data such as administrative data. Third, where raw data are not produced or access is restricted, it may be desirable to conduct surveys to trace social trends. Fourth,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improve the social trends monitoring framework in order to secure timeliness in response to socio-economic changes. Finally,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by experts in various fields of social policies.

Keyword : social policy, social trends, policy monitoring





## 1. 연구목적과 내용

이 연구는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향 분석틀(framework)에 대한 합의와 주기적인 동향 분석은 비어 있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지표로 보는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게 생산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 성과와 동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자료원, 사회정책 분야별 핵심성과지표로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측정지표의 필요성, 활용성,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바탕으로 보건 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 분야의 사회정책 성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최근 10년 동안의 시계열 추세와 최근 횡단면 국제비교를 통해 분야별 사회정책 성과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 2. 주요 연구결과

첫째,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와 전문가 조사 및 자문을 종합하여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사회정책 동향

#### 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분석틀은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 사회보장 일반의 5개 분야별 15개 세부영역과 55개 측정지표로 구성했고,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지표의 성격에 따라 국제비교나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일부 측정지표는 하위지표를 포함할 수도 있다. 둘째,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활용하여 5개 사회정책 분야별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을 도출하였다.

〈요약표 1〉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안)

분야	세부영역	측정지표	국제 비교	시계열 분석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① 기대수명, 건강수명 ② 주관적 건강상태 ③ 자살률 ④ 우울감 경험률	✓ ✓	✓ ✓ ✓ ✓	
	건강행태	① 흡연율 ② 음주율 ③ 비만율		✓ ✓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① 미충족의료 경험률 ②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③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④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	✓ ✓ ✓ ✓	
소득보장 분야	가계	① 가계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②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③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④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 ✓ ✓ ✓	
	소득분배	①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② 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③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	✓ ✓ ✓ ✓	
	경제활동	①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② 구직 취약계층(장기실업자 비율 등)	✓ ✓	✓ ✓	
	정책 수요 및 공급	① 기준중위소득 ②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③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 ✓ ✓	
	주거		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②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	✓

분야	세부영역	측정지표	국제 비교	시계열 분석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 수요	①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②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③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④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⑤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 ✓ ✓ ✓
	사회서비스 공급	① 사회서비스산업적 성과(사업체 및 종사자) ②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 ✓
인구 분야	인구	① (정태) 인구 규모(성별, 연령별, 지역별) ② (정태) 부양비(아동, 노인) ③ (동태) 인구가동률 ④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성별, 연령별)	✓	✓ ✓ ✓ ✓
	가구	① 1인 가구(성별, 연령별) ②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가구원 수별 가구 및 다양한 가구(청년가구, 한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등))	✓	✓ ✓
	혼인·출산	① 합계출산율 ② 결혼이민자 비율	✓	✓ ✓
	돌봄·양육	① 성별 가사노동시간 ② 성별 육아휴직자 수		✓ ✓
사회보장 일반	행복·삶의 질	① 행복 ② 삶의 질 ③ 사회적 고립	✓ ✓ ✓	✓ ✓ ✓
	사회인식	① 갈등 및 차별 인식 ② 사회적 자본(신뢰 등) ③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 ✓ ✓
	사회보장재정	① 총사회지출 ② 분야별 사회지출 ③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④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 ✓ ✓ ✓	✓ ✓ ✓ ✓
	거시지표	① 경제성장률 ② 물가상승률 ③ 기후변화(기온 등)	✓ ✓ ✓	✓ ✓ ✓

자료: 연구진 작성.

### 3.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

이 연구의 결과,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략 수립과 사회 정책 동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분야별

## 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로 고유한 개별 정책 여건을 고려하고, 동향 분석의 충분성도 있기 때문에 분야별 동향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둘째, 접근성이나 생산주기 등 자료의 이용가능성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동향을 분석,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일부 지표를 활용하지 못하였다. 향후 행정데이터 등 다종다양한 2차 자료의 이용가능성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원자료가 미생산되거나 접근성이 제약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차별적이고도 필요한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원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넷째, 국내외 동향분석 선례와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정책적 의의를 도출하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 동향 분석들을 주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다분야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용어 : 사회정책, 동향 분석, 정책 성과 모니터링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전쟁 이후 압축성장을 이루어 온 한국은 현시점에 이르러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sup>1)</sup> 세계 2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으나<sup>2)</sup>, 국민이 누리는 행복 수준과 실질적인 삶의 질의 사회적 성과는 경제적 성과에 이르지 못한다([그림 1-1] 참조).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양적으로 증가하였지만, OECD 평균(20.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OECD 38개 가입국 중에서 35위에 불과하다.<sup>3)</sup>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사회정책을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 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서, ‘사회보험, 실업 구제, 노인 정책, 환경 정책’ 등을 예시로 들고 있어 광의의 개념을 반영한다(국립국어원, 2022a).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에서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으로 정의하고, 동법 제3조(정의)에서 사회보장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

1) IMF. (202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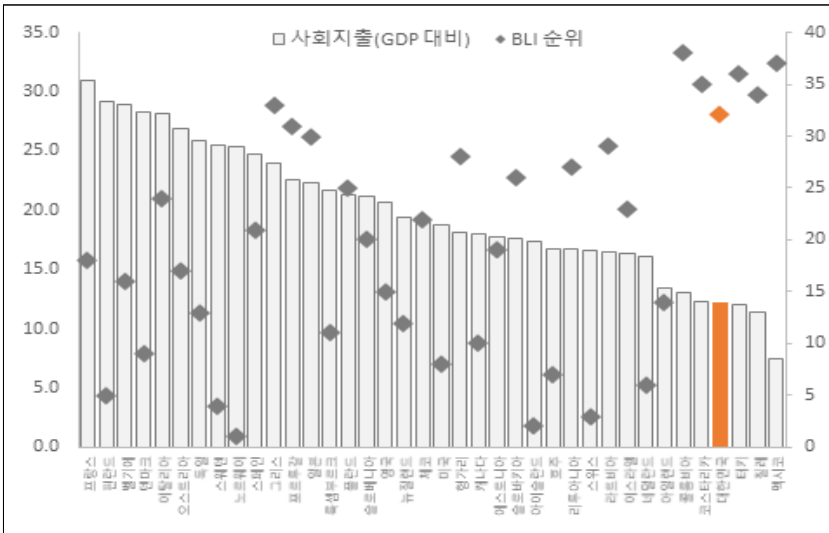
2) IMF. (2022b).

3) OECD. (n.d.a).

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그림 1-1] 주요국의 사회지출과 삶의 질 순위

(단위: %, 위)



자료: 1) (사회지출, 2019 기준) OECD. (n.d.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 2022.3.21.  
 2) (삶의 질 순위) OECD. (n.d.b). Better Life Index.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 Retrieved from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11> 2022.3.21.)

대한민국이 경제정책을 통하여 압축성장을 이룩한 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앞의 [그림 1-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현시점에 이르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리는 양질의 행복한 삶과 사회통합이 경제적 성과에 이르지 못하는 현 상황은 사회정책 구조와 기능의 적절성을 재검토할 필요를 방증한다. 특히 세계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나 코로나 19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국의 맥락에서 사회정책 성과의 발전 궤적과 현주소를 재확인하여 팬데믹 이후 사회정책 비전을 체계적으로 설정



하기 위한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경제적 변화의 속도를 고려한다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시의성과 분석 범위의 포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주요 국제기구로서 OECD에서는 “Society at a Glance”, “Health at a Glance”, “Education at a Glance”, “Pensions at a Glance” 등의 주기적인 발간물을 통해 주요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관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United Nations)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의한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추적, 공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및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생산, 물가, 고용 등 화폐적 성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의 동향과 정책에의 시사점 등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향 분석틀(framework)에 대한 합의와 주기적인 동향 분석은 비어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5년부터 빈곤을 주제로 「빈곤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고 있지만, 사회정책 성과지표의 범위 및 발간 주기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표로 보는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게 생산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

##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 1.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상기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framework) 및 지표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 검토, 전문가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례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그림 1-2] 연구내용 및 구조



자료: 저자 작성

둘째, 개발한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활용하여 사회정책 성과를 분석, 모니터링한다. 우선 세계금융위기 이후 사회정책 성과 수준 및 격차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10년 동안의 시계열 분석을 시도하고,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책 성과의 현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사회정책 성과를 국제비교한다. 사회정책의 비전 도출과 사회정책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발전이 더딘 지점을 발견하고, 시계열 분석 및 국제비교를 통해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첫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사회정책 성과 측정 및 구조화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와 함께 사회정책 성과의 주기적 모니터링의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둘째,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웹 조사의 방식으로, 보건의료 분야 및 사회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조사를 기획했다. 1차 조사에서는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정책 성과·동향 분석 지표 및 자료원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2차 조사에서는 사회정책 분야별 핵심성과지표를 선정했다. 전문가 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1-1>과 같다.

셋째, 국내외 마이크로데이터 등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정책 성과 시계열 분석 및 국제비교를 실시했다. 시계열 분석은 세계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 정도의 시간적 범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국제비교는 주요

## 1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했다. 분석 결과는 표와 그림 등으로 도식화하여 가독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발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 및 공론화를 시도했다. 사회정책 성과 프레임 구성, 사회정책 성과 분석 및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회정책 성과 진단 결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정책 동향 분석의 활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했다.

〈표 1-1〉 전문가 조사 개요

1차 조사	2차 심층조사
Q. 분야별 성과·동향 지표 및 자료원 - 보건·의료 - 소득보장 - 사회서비스 - 인구정책 - 사회보장 일반	Q. 분야별 핵심성과지표 선정 Q. 분야별 핵심성과지표에 대한 정성적 의견

자료: 저자 작성



## 제2장

###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정의와 범위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사례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차별성



## 제 2 장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검토

### 제1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정의와 범위

#### 1. 사회정책 분야 성과와 동향 의의와 정의

정책 “거버넌스는 희소재이다(Governance is a scare commodity. Peters, 1996, p.1)”. 재원과 행정력의 제약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에 불완전한 “공공분야를 개선하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 원칙이다(Change in the public sector is the rule rather than the exception, Peters, 1996, vii)”.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기본이라면, 주어진 여건에서 사회정책의 어느 지점이 부족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시의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는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자원의 제약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을 추적하는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회정책 설계와 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시의성을 확보하면서도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개선 및 수립의 바탕이 되며,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의의이기도 하다.

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범위를 설정하기에 앞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한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성과는 “이루어낸 결실”을, 동향은 “사람들의 사고, 사상, 활동이나 일의 형세 따위가 움직여 가는 방향”을 말한다(국립국어원, 2022b, 2022c). 그렇다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은 사회정책을 통해 이루어낼 결과물로서의 상태를 진단하고 추세를 파악하는 행위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회정책 성과와 동향을 추적하는 데에 있어 시계열 분석과 국제비교의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시계열의 사전적 정의는 “확률적 현상을 관측하여 얻은 값을 시간의 차례대로 늘어놓은 계열”이다(국립국어원, 2022d). 이 연구에서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국제비교는 주요 선진국 등 비교대상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종합하면, 여기에서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사회정책 성과의 시간에 따른 추세(시계열) 및 상대적 위치(국제비교)를 계량적으로 추적하는 것”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사회정책 분야 성과와 동향 분석 범위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슈를 검토해야 한다. 첫째는 개념으로서 사회정책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과와 동향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 가. 정책 범위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정책의 구체적인 범위를 탐색하는 데에 있어 사회보장기본법을 참고하고자 한다. 법률 제3조(정의)에서 정의하는 사회보장은 동법 제2조(기본이념)에 의해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표 2-1)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정책 범위

###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8.>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이 법령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사회보장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정의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제도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제5항에 의해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의 기능을 정책 범위로 참고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득보장과 서비스 보장이 사회정책의 기능이 된다. 특히 사회적 위험이 포괄하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 상황이 출산이나 양육, 노령 등의 생애 사건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더욱이 2항의 사회보험에서 국민의 소득과 함께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건의료정책 분야를 포괄한다. 제6항에 의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신뢰성 있는 자료원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책의 정책 범위는 보건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관 제4조(사업)에 의하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소득보장·사회서비스·인구정책”을 구체적인 정책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건의료 분야, 소득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인구정책 분야를 사회정책 연구 분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제3항에서 관련 제도 평가 및 재정 등을 포함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분야와 함께 제도 여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정책 범위에서 이를 고려할 개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리하면, 사회정책의 범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소득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인구정책 분야와 정책의 제반 여건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에 의한 사회정책 범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소득보장·사회서비스·인구정책 설계 및 분석
2. 사회정책에 대한 미래전망 및 중장기 계획 수립
3. 사회보장 관련 제도 평가 및 재정 추계·재원 분석
4. 사회보장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개발·생산 및 정보인프라 구축·운영
5. 사회보장 관련 국제 협력 연구 및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등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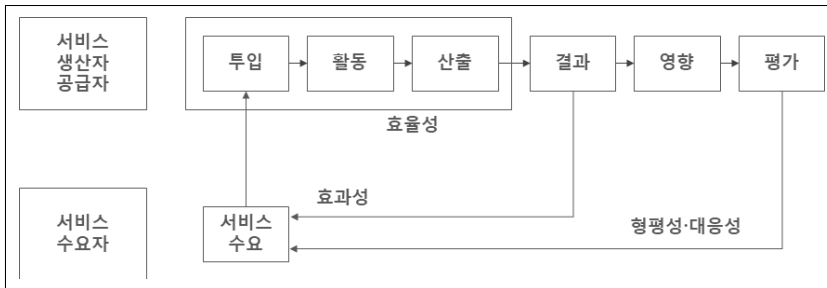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2021).

## 나. 지표 범위

다음은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지표의 범위에 다. 공공정책에서 성과는 정책 투입과 활동, 산출과 결과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투입(input) 지표, 산출(output) 지표, 그리고 결과 (outcome) 지표로 구분한다. 문신용과 윤기찬(2008)은 서비스 생산자 및 공급자에 의한 일련의 정책 과정과 공공서비스 수요자들이 실질

적으로 경험하는 결과 간 관계를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정책, 즉 공공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지점, 혹은 문제상황에서 투입된 자원을 활용하는 정책 운영, 즉 활동과 그 일차적 결과물로서의 산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투입 대비 산출물을 얻기 위한 효율성을 추구하게 된다. 정책의 산출물은 정책 목표이자 결과로 환원되며, 이는 당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문제상황을 완화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악화시키는 등의 정책 효과를 유발한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서비스 수요와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이나 대응성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입 지표와 산출 지표, 결과 지표를 각각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산출 지표와 결과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2-1] 문신용, 윤기찬(2008)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투입과 산출의 관계



자료: 문신용, 윤기찬. (2008). 공공서비스의 통합적 분석: 성과분석 평가의 이해. 삼영사. p.79.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념을 구체화한 예시는 다음 <표 2-3>과 같다. 여기에서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 투입 지표는 예산과 행정력(行政力), 즉 인력 등이 된다. 산출 지표의 예시는 정책에 참여하여 일련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료자 수이다. 예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로서 품질 지표를 제

시하고 있는데, 수료자 중 프로그램의 내용을 우수하다고 응답한 수이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최종 결과로 훈련자의 취업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결과 지표의 예시는 취업에 성공한 훈련자 수이다.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산출 지표인 프로그램 수료자 수 대비 투입 지표인 예산이나 행정 인원수의 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단위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결과 지표인 취업에 성공한 훈련자 수 대비 투입 지표 혹은 산출 지표의 비율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의 효율성 혹은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프로그램의 목표나 지표의 활용에 따라 지표의 산식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3〉 이광희 외(2006, 역)의 성과지표 예시: 1997년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황

공급자	총예산	인원	프로그램 수료자 수	프로그램 우수 평가 수	취업 훈련자 수
	투입 (input)		산출 (output)	품질 (quality)	결과 (outcome)
정부기관1	900,000	15	350	300	90
정부기관2	1,500,000	17	400	375	250
계약자A	1,000,000	11	200	143	143
계약자B	1,400,000	16	400	234	350
계약자C	1,900,000	29	700	190	634

주: 성과지표 내용을 수정, 보완함.

자료: Behn, Robert D., et al. (2006). 정책평가와 성과관리(이광희, 한종희, 윤수재, 강은숙, 공병천, 홍재환 역). 대영문화사. p.210.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통합과 국민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수단으로서 주요 분야별 사회정책의 성과와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분석 범위는 성과 지표 혹은 결과 지표에 집중할 수 있다. 더욱이 정책 성과와 결과는 새로운 정책 수요나 정책 개선지점을 발견하기 위한 실태로서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제도

의 여건 등 분석 영역이나 지표의 활용에 따라 투입 지표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

## 제2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사례

### 1. 해외 사회정책 동향 분석 사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에서는 간헐적으로 분야별 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at a glance) 보고서” 시리즈로 발간한다. 다음 <표 2-4>는 주요 분야별 동향 분석 보고서를 소개하고 있다. 사회 분야는 “Society at a Glance”의 제목으로 2001년부터 2~3년 주기로 발간하고 있다. 시의성 있는 주제와 함께 OECD 가입국의 주요 분야별 동향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그 외 연금은 “Pensions at a Glance”, 교육은 “Education at a Glance”, 건강 분야는 “Health at a Glanc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간 혹은 2년 주기로 발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간헐적인 주기로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는 환경 분야의 “Environment at a Glance”인데, 2005년부터 5~8년 주기로 발표되었다.

각각의 보고서는 분야별 동향과 국제비교를 통한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보고함으로써 각 국가의 취약한 정책 영역을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그런데 OECD 가입국을 포괄할 수 있는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제약받아 일부 지표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표 2-4) OECD의 주요 동향 분석 보고서

구분	보고서명	발간 시기	주요 영역(최근)	주요 지표(최근)
사회	Society at a Glance	2019, 2016, 2014, 2011, 2009, 2006, 2005, 2002, 2001	사회적 위험 인식과 정부 효과성	경제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 정부효과성 및 공정성에 대한 인식, 사회정책 선호도
			일반 지표	가구 소득, 출산율, 이주율, 가족, 인구 추세
			자기효능 지표	고용, 실업, 숙련, 교육 지출, 기대 은퇴 연한
			공평 지표	불평등, 빈곤, 실업급여(out-of-work benefits), 사회지출,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
			건강 지표	기대수명, 건강 분야 지출, HIV/AIDS, 자살률, 흡연 및 주류 소비
			사회통합 지표	삶의 만족, 기관 신뢰, 여성에 대한 폭력, 투표, 온라인 활동
연금	Pensions at a Glance	2021~2005 (2년 주기)	연금정책 설계	국가별 연금정책, 기본/표적/최저연금, 자격기준, 은퇴 연령, 은퇴 연령 전망
			연금 최저기준	총소득대체율, 순소득대체율, 재정구조, 연금자산
			대안적 연금	파트너연금, 자녀돌봄, 실업보조, 소득구조, 자영자
			인구경제적 여건	출산율, 기대수명, 노령화지수, 고령자 고용률, 노동시장 은퇴 연령, 은퇴 후 기대수명
			고령자의 소득과 빈곤	고령자 소득, 노인 빈곤, 노인 불평등, 평균연금
			재정	기여, 공공지출, 사적지출, 장기전망
교육	Education at a Glance	2021~2000 (연간), 1998	교육기관 성과 및 학습효과	성인 교육수준,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 노동시장에서 교육 성취의 영향, 교육수준에 따른 소득, 재정적 인센티브, 교육의 사회적 성과, 성인 교육과 학습
			교육 접근성 및 참여	교육받는 인구, 초기아동 교육체계, 기대 고등교육 이수자, 국제교류학생
			재정	교육기관별 지출, 재정지출, 공·사립 교육기관 지출, 교육 분야 총지출, 고등교육 학생 지원, 교사 급여
			교육환경	교실에서 보내는 시간, 학생 대비 교사 비율, 교사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교사 특성, 공공재정, 교사 퇴직률

2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구분	보고서명	발간 시기	주요 영역(최근)	주요 지표(최근)
건강	Health at a Glance	2021~2001 (2년 주기)	건강상태	기대수명 추세, 성별 및 교육수준별 기대수명, 초과 사망률, 주요 사망원인, 회피가능사망, 순환계에 의한 사망, 암 유병률 및 사망률, 만성질환, 영유아·아동·청소년 건강, 정신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 위협 요소	성인과 청소년의 흡연 및 주류 소비, 성인과 청소년 식단관리 및 신체활동, 성인과 청소년 과체중 및 비만, 환경오염
			의료서비스 접근성	대상자 포괄성, 미충족욕구, 재정적 곤란, 의사와의 면담, 디지털 건강, 병상, 병원 이용 현황, 진단 기술, 외래수술, 대기기간
			돌봄의 질과 성과	주기적 백신 접종, 1차 의료, 외래진료의 사람 중심성, 과다 입원, 당뇨, 정신질환자 돌봄, 유방암환자 돌봄 등
			재정	건강 지출, 가격, 재정구조, 공공지출, 서비스 유형별 지출 등
			종사자	의료진 및 돌봄종사자 현황, 의료진의 지리적 분포, 의대 및 간호대 졸업생, 의료진의 국제이동
			의약품 분야	의약품 지출 및 소비, 약사 등
			고령화 및 장기요양	인구구조, 고령자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및 장애출현율, 치매, 장기요양 접근성, 비공식 돌봄, 장기요양 종사자, 비용, 입종간호
환경	Environment at a Glance	2020, 2015, 2013, 2005	기후변화	탄소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공급량, 재생산에너지
			대기의 질과 건강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식수	공공에 의한 식수 제공량, 물 스트레스, 하수처리
			순환경계	쓰레기 생산량, 재료 소비량, 지자체 쓰레기 처리, 재활용률,
			생명다양성	산림자원 이용률, 보호지역, 초원 및 농경지

자료: OECD iLibrary. (n.d.). <https://www.oecd-ilibrary.org>에서 2022.8.25. 검색한 결과를 저자 정리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환율과 국제 수지를 중심으로 국제 금융 체계를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서, 약 190개 국가를 가입국으로 하고 있다. IMF는 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IMF, 2022.8. 검색 결과 기준), 첫 번째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이다. 연간 4회, 4월과 6월, 10월, 1월에 발표되며, 국가별 거시경제 지표 및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세계 재정 안정 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인데 연간 2회, 4월과 10에 발표된다. 주요 경제지표를 활용하여 국가별 재정 안정성을 평가하고 점검한다. 세 번째는 재정 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이다. 연간 2회 발표되는 시점은 4월과 10월이다. 주요 지표를 활용한 재정 모니터링 평가 결과와 시사점을 보고한다. 마지막 보고서는 대외 부문 보고서(External Sector Report)이다. 매년 8월에 발표되는 것으로, 주요 국가의 대외 경제 여건 평가와 해석을 공개한다.

저개발국가 및 개발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관으로서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표하고 있는 동향 분석 보고서는 찾기 어렵다. 최근 189개 가입국의 범위를 포괄하여 비교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나은 삶을 위한 DB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기반 분야, 법과 규제, 경제정책, 제도 분야의 실태를 국가별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2] 세계은행의 “나은 삶을 위한 DB” 구축 계획

	Infrastructure policies	Laws and regulations	Economic policies	Institutions
National	Universal broadband coverage Domestic data infrastructure	Safeguards Enablers	Antitrust Trade Taxation	Government entities Other stakeholders
International	Global technical standards Regional collaboration	Cybersecurity conventions Interoperability standards	International tax treaties Global trade agreements	International organisation Cross-border cooperation

자료: Foster & Chen. (2021.5.25.).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enabling environment: Global Data Regulation Survey. World Bank Group. p.3.

## 2. 국내 사회정책 동향 분석 사례

국내 주요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에서도 관련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우리나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특수 목적의 공공기관이다. GDP 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를 공개하고 있으며, 월간 금융시장동향에서는 금리 및 주가, 가계대출, 기업자금, 은행 및 자산운용사 자금흐름을 추적한다. 매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하는데, 여기에서는 주가, 금리, 환율, 외국인 증권투자의 동향을 분석한다. 매일 발표하는 지역경제동향에서는 지역별 제조업 생산 증가율, 신용카드 사용액, 소비자심리지수, 수출·입액, 취업자·실업자 수, 소비자물가 상승률, 주택매매·전세가격 상승률 등의 지표와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정책 분야 정부기관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법적 근거를 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있다. 법률에 의해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제2항 제10

호에 의해 ‘사회보장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2-3]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의 구조를 소개하고 있다. 가족과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분야로서 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분야가 있고, 일과 소득 보장을 구성하는 분야로서 근로, 소득보장 및 빈곤 분야가 있고, 삶과 사회서비스를 구성하는 분야로서 건강, 보육 및 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사회재정의 총 14개 분야를 다룬다. 14개 분야는 다시 52개 세부 영역별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필요와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따라 국제비교 및 시계열 추세를 제시하며, 하위 인구집단별 실태를 제시하기도 한다. 각 지표의 정의와 측정 방법, 인포그래픽 및 통계표, 자료원 정보와 간략한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가독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림 2-3]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통계 분야 및 세부 영역



자료: 신정우, 고숙자, 이영숙, 이태진, 정현철, 최현수, ..., 고혜진.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

### 3.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동향 분석 사례

인문사회계열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도 관련 동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 분야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반기별로 경제성장률 전망 및 시사점에 대한 KDI 경제전망과 주요 경제지표를 소개하는 월간 KDI 경제동향, 분기별 부동산시장 동향과 대외경제 관련 월간 Economic Bulletin을 공개하고 있다. 주요 지표의 추세뿐만 아니라 시사점 등을 발표함으로써 동향 분석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외 산업과 무역통상 분야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관련해서 국내외 경제 및 산업 동향에 대한 KIET 산업동향브리프를 매월 발간하고 있다. 주요 지표의 통계표 및 인포그래픽과 함께 해석과 시사점을 공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관계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매월 발간하는 노동리뷰라는 정기간행물에 주요 노동동향을 발표하여 주요 거시지표와 함께 고용 동향과 노동문제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지표의 인포그래픽 및 통계표를 제시하고, 변화량에 대한 해석을 통해 노동동향의 활용도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 등 사회정책 분야 연구를 수행한다. 빈곤통계연보를 통해 매년 빈곤과 불평등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통계표를 통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석 자료의 활용 가능성으로 인하여 발간시기가 연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표 2-5〉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동향 분석 현황(2022.2. 기준)

연구기관	발간물	주요 내용/지표	주기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전망 및 관련 지표, 시사점	반기
	KDI 경제동향	국내총생산, 경기,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입 및 교역조건,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고용 및 임금, 물가, 금융시장, 세계경제 동향, 시사점	월간
	부동산시장 동향	주택매매가격, 거래량, 신규주택 공급, 전월세가 격 및 거래량, 주택담보대출,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분기
	Economic Bulletin	GDP 등 경제활동 지표, 금융시장 지표, 공공경제 지표, 시사점	월간
산업연구원	KIET 산업동향 브리프	해외 실물 경제, 주요국 산업 동향, 국내 실물 경제,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분야 동향, 시사점	월간
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 고용 동향(종사상 지위별/산업별/성별/연령별/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종사상 지위별/사업체 규모별/산업별 임금·임금구성, 근로시간, 노동쟁의 조정사건 및 조정성립률 등	월간
	KLI 노동통계	고용 지표, 임금 및 노동생산성 지표, 근로자 생활 지표, 노사관계 지표 등	연간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비정규직 특성별 추이,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시간·근속기간, 비정규직의 복지, 비정규직의 취업 사유,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고용형태별 근로자 등	연간
	KLI 청년층 고용노동통계	청년층 고용 일반 지표, 청년층 비정규직 지표, 청년층 근로조건 지표 등	연간
	KLI 해외노동통계	경제일반 지표, 인구 및 고용 지표, 임금·노동비용·노동생산성 지표, 근로시간 및 주요 사회지표, 노사관계 지표 등	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빈곤, 불평등, 자산분포	연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di.re.kr>), 산업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et.re.kr>),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li.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의 차별성

### 1. 이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소득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인구·가족 정책 분야 및 사회정책 제반 여건을 사회정책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회정책 성과의 시간에 따른 추세와 상대적 위치를 계량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이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고자 한다.

첫째, 포괄성이다. 이 연구에서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가족 정책 및 관련 제반 여건을 다루고자 하는 만큼 다(多)분야 사회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OECD에서는 사회정책뿐 아니라 연금, 교육, 건강, 환경 등 다양한 분야별 동향 분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둘째, 과학성이다. 앞에서 검토한 국내외 사례를 돌아보면, 주요 분야의 동향을 추적하는 데에 있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원을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생산, 해석한 바 있다. 셋째, 사회정책의 관점이다. 지표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되,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현상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주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도 각 연구기관의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한 동향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며, 추세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타 전문 분야의 동향 결과와는 차별성을 확보한다고 본다.

## 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고려사항

이에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 및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고자 한다. 우선, 지리적 범위는 한국의 상황에 주목하되 국제비교는 주요 선진국인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시도한다. 추세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최근 10년으로 하고, 국제비교는 최근 횡단면 실태에 주목한다. 추세 분석의 단위는 지표에 따라 전체 인구이나 주요 집단, 혹은 지역이 될 수 있다. 국제비교는 국가 단위로 생산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지표는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의 산출(output)이나 결과(outcome) 등 측정하고자 하는 성과와 동향에 따라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등의 수준(level)뿐만 아니라 자원의 결핍(deprivation)이나 빈곤(poverty), 그리고 자원 분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불평등(inequality)과 격차(disparity) 등의 다양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표 2-6>과 같이 예를 들어, 소득보장 분야의 산출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 주요 현금급여의 지원액을 통해 수준을, 수급률을 통해 빈곤 실태를, 주요 집단별 수급률 차이를 통해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소득보장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는 가구의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으로 수준을, 전체 인구 및 주요 인구 집단별 빈곤율을 통해 빈곤 실태를, 지니계수나 분위배율, 주요 인구 집단별 소득 차이 등을 통해 격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분석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자료의 제약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생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중심으로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가독성을 확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보조지표를 활

3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용할 수 있다.

〈표 2-6〉 소득보장 분야 지표 예시

구분		수준	빈곤	격차
소득 보장	산출	주요 현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지원액	주요 현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수급률	주요 현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수급률 차이
	결과	평균/중위 균등화 가구 시장/처분가능소득	빈곤율 (아동/청년/중장년/노 인 등)	지니계수, 분위배율 성별/지역 간 소득 차이

자료: 저자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3장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발

제1절 분석틀 개발 개요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안)



## 제 3 장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개발

### 제1절 분석틀 개발 개요

제2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분야, 소득 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인구·가족 정책 분야 및 사회정책 제반 여건을 사회정책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사회정책 성과를, 대표성 있는 자료원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전문가들 판단으로는 부족하다. 각 영역에서 사회정책과 다양한 지표 분석을 수행한 경험이 축적된 전문가들이 연구 경험을 통해 확인한 지표와 자료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차에 걸친 전문가 조사를 통해 지표와 자료원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논의를 통해 최종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1차 조사는 2022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하여 각 영역의 지표와 자료원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지표와 자료원을 수집하였다. 조사 영역은 보건의료 분야, 소득보장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 인구정책 분야, 사회보장 일반(국민인식, 재정, 보건복지 이슈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지표와 자료원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조사는 7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1차 조사된 지표 중 복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된 지표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 시에는 연구진 및 자문위원들의 1차 결과분석을 반영하여 각 영역의 지표를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는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한 전문가 목록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사 응답을 요청한 후 기일 내에 응답한 전문가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사례 수는 1차 조사 103명, 2차 조사 50명이다.

〈표 3-1〉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1차 기초조사			2차 심층조사		
조사내용	분야별 성과·동향 지표 및 자료원			분야별 핵심성과지표 선정 및 의견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구분	응답자	
		수(명)	비율(%)		수(명)	비율(%)
	보건의료분야	22	21.4	보건의료분야	10	20.0
	사회과학분야	78	75.7	사회과학분야	39	78.0
	기타	3	2.9	기타	1	2.0
	전체	103	100.0	전체	50	100.0
조사기간	2022.6.8.~6.28.			2022.7.27.~7.29.		
조사업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자료: 저자 작성.

##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분석

### 1. 1차 조사 결과

103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수집된 1차 조사 결과, 영역별 지표 수는 다음의 〈표 3-2〉와 같다. 각 지표별로 서로 다른 자료원을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자료원은 대부분 원자료의 출처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분

석을 하지 않았다. 영역별로 수집된 지표 수를 보면 보건의료 분야 148개, 소득보장 분야 113개, 사회서비스 분야 135개, 인구가족 분야 128개, 사회보장 일반 115개 등 총 639개의 지표가 수집되었다.

〈표 3-2〉 1차 조사 결과 수집된 지표 수

(단위: 개)

분야	지표 수
보건의료 분야	148
소득보장 분야	113
사회서비스 분야	135
인구가족 분야	128
사회보장 일반	115
계	639

자료: 저자 작성.

## 2.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결과 수집된 지표들 중 지표명은 다르나 지표의 내용과 자료원이 동일한 경우, 다른 여러 지표들을 결합한 지수의 경우 등을 우선 스크리닝한 후, 지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영역별로 분류하고 복수의 전문가가 추천한 지표, 소수의 전문가가 추천하였으나 해당 영역의 연구진이 검토하여 의미 있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2차 조사 대상 지표를 구성하였다. 1차 조사된 지표 분석 결과 선정된 지표는 보건의료 분야 37개, 소득보장 분야 38개, 사회서비스 분야 29개, 인구가족 분야 34개, 사회보장 일반 27개 등 총 165개 지표이다(〈표 3-3〉 참조).

40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표 3-3〉 2차 조사의 세부 영역 및 조사 대상 지표 수

(단위: 개)

분야	세부 영역	지표 수	소계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9	37
	정신건강	6	
	건강행태	7	
	보건서비스 이용	6	
	정책 수요 및 공급	9	
소득보장 분야	소득분배	9	38
	가계	8	
	경제활동	10	
	정책 수요 및 공급	5	
	주거	6	
사회서비스 분야	(대상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8	29
	(대상별) 장애인	7	
	(대상별) 노인	7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7	
인구가족 분야	인구	11	34
	인구이동	3	
	가족	9	
	일-가정 양립	6	
	인구·가족 분야 국민인식	4	
	이주배경	1	
사회보장 일반	행복, 삶의 질	3	27
	사회인식 및 행태	12	
	재정 및 정책 일반	8	
	거시지표	4	
총계			165

자료: 저자 작성.

2차 조사에서는 50명의 영역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조사 분석 결과 선정된 165개 지표에 대해 세부 영역별로 분류하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에서 ‘매우 필요하다’(4점)까지 4점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 “사회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생산

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지표가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주로 조사하였다. 각 분야의 지표에 대한 전문가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보건의료 분야

보건의료 분야는 건강수준, 정신건강, 건강행태, 보건서비스 이용, 정책 수용 및 공급의 5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총 37개 지표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 결과, 건강수준 영역에서는 기대여명, 건강수명, ADL, IADL 제약 비율(노인, 장애인 등), 주요 질환 발생률(암, 뇌졸중, 고혈압 등),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및 구성비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 검진율, 발생률, 유병률, 영아 사망률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자살률(전체 및 주요 집단별), 정신질환 유병률(전체 및 주요 집단별), 우울감 경험률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생각 비율, 중독률(약물, 인터넷)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건강행태 영역에서는 비만율, 흡연율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영역에서는 미충족의료 경험률(전체 및 주요 집단별), 의료서비스 이용률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예방접종률, 의료서비스 이용현황(평균 입원기간, 내원 횟수 등)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정책 수요 및 공급 영역에서는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국민건강

4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인력, 병상 등),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민간보험 가입률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표 3-4〉 보건의료 분야 2차 조사 결과

(단위: 100점 환산 시 점수)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건강수준	건강수명	90.67	93.33	89.74	100
	기대여명	81.33	80	81.2	100
	노인, 장애인 등 ADL/IADL 제약 비율	80.67	80	81.2	66.67
	암, 뇌졸중, 고혈압 등 주요 질환 발생률	80.67	70	82.91	100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및 구성비	80.67	76.67	81.2	100
	치매 검진율, 발생률, 유병률	77.33	66.67	79.49	100
	주관적 건강상태	76.67	90	73.5	66.67
	영아 사망률	70	60	72.65	66.67
	저체중아 발생률	64	66.67	63.25	66.67
정신건강	자살률 및 주요 집단별 자살률	93.33	96.67	92.31	100.00
	우울감 경험률	82.67	80.00	83.76	66.67
	정신질환 유병률 및 주요 집단별 정신질환 유병률	81.33	73.33	83.76	66.67
	중독률(약물, 인터넷 등)	76.67	66.67	78.63	100.00
	자살생각 비율	74.00	76.67	74.36	33.33
	스트레스 인지율	70.67	63.33	72.65	66.67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건강상태	비만율	83.33	76.67	84.62	100.00
	흡연율	80.67	80.00	80.34	100.00
	음주율	79.33	83.33	77.78	100.00
	신체활동 실천율	72.00	70.00	72.65	66.67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 발생 인구 규모	69.33	63.33	70.94	66.67
	프리젠티즘(아파도 참고 근로한 인구) 규모	64.00	46.67	68.38	66.67
	건강정보 문해력	64.00	60.00	64.96	66.67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미충족의료 경험률 및 주요 집단별 미충족의료 경험률	86.00	90.00	85.47	66.67
	의료서비스 이용률	82.67	63.33	87.18	100.00
	예방접종률	78.67	66.67	81.20	100.00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평균 입원기간, 내원 횟수 등)	76.67	63.33	79.49	100.00
	회피가능 사망률	68.00	76.67	65.81	66.67
	호스피스 이용률	60.67	56.67	61.54	66.67
정책 수요 및 공급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87.33	80.00	88.89	100.00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86.67	70.00	90.60	100.00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인력, 병상 등)	86.67	76.67	88.89	100.00
	공공의료기관 비율	83.33	76.67	85.47	66.67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83.33	70.00	87.18	66.67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81.33	73.33	82.91	100.00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73.33	70.00	74.36	66.67
	민간보험 가입률	70.67	56.67	74.36	66.67
	건강보험 체납률	69.33	60.00	71.79	66.67

자료: 저자 작성.

## 나. 소득보장 분야

소득보장 분야는 소득분배, 가계, 경제활동, 정책 수요 및 공급, 주거의 5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총 38개 지표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소득분배 영역에서는 (상대)빈곤율, 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지니계수(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분위배율(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빈곤갭(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자산 분배지표, 경제적 박탈 경험률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가계 영역에서는 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평균, 중위) 및 구성비, 가계 총지출 및 요소별 지출 수준 및 구성비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가계 총자산 및 요소별 자산 수준 및 구성비, 가계 총부채 및 요소별 부채 수준 및 구성비, 소득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수준 및 구성비, 노후생활 준비 및 조달 방법, 주요 취약집단 소득, 자산, 부채 수준(장애인 등)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고용률 및 주요 집단별 고용률, 실업률 및 주요 집단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평균 노동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율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니트(NEET) 비율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정책 수요 및 공급 영역에서는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공적연금, 기

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사회보험 총가입률 및 주요 집단별 가입률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주거 영역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 및 비율, 임대료 부담률의 필요성 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주거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이용률, 거주지역 만족도(범죄위험, 인프라 등)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표 3-5〉 소득보장 분야 2차 조사 결과

(단위: 100점 환산 시 점수)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소득분배	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92.67	90.00	93.16	100.00
	(상대)빈곤율	91.33	83.33	93.16	100.00
	지니계수(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89.33	90.00	89.74	66.67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88.67	86.67	88.89	100.00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81.33	70.00	84.62	66.67
	분위배율(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80.00	70.00	83.76	33.33
	빈곤갭(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78.00	70.00	80.34	66.67
	자산 분배지표	72.00	66.67	73.50	66.67
	경제적 박탈 경험률	71.33	73.33	71.79	33.33
가계	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평균, 중위) 및 구성비	84.67	76.67	87.18	66.67
	가계 총지출 및 요소별 지출 수준 및 구성비	80.00	70.00	82.91	66.67
	소득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수준 및 구성비	79.33	70.00	82.05	66.67

4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가계 총부채 및 요소별 부채 수준 및 구성비	78.00	63.33	82.05	66.67
	노후생활 준비 및 조달방법	78.00	73.33	78.63	100.00
	주요 취약집단 소득, 자산, 부채 수준(장애인 등)	78.67	73.33	79.49	100.00
	가계 총자산 및 요소별 자산 수준 및 구성비	77.33	66.67	80.34	66.67
	소득 만족도	59.33	56.67	58.97	100.00
경제활동	고용률 및 주요 집단별 고용률	92.00	83.33	94.87	66.67
	실업률 및 주요 집단별 실업률	92.00	86.67	94.02	66.67
	경제활동참가율	89.33	86.67	90.60	66.67
	평균 노동시간	86.00	80.00	87.18	100.00
	비정규직 비율	84.67	76.67	86.32	100.00
	저임금근로자 비율	82.67	76.67	83.76	100.00
	장시간 근로자 비율	82.00	80.00	82.05	100.00
	니트(NEET) 비율	75.33	56.67	80.34	66.67
	공공일자리 참여율(노인일자리 등)	69.33	66.67	70.09	66.67
	자활근로자 수	60.00	60.00	59.83	66.67
정책 수요 및 공급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90.00	86.67	91.45	66.6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89.33	93.33	88.89	66.67
	기준중위소득	88.67	90.00	88.89	66.67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86.00	83.33	87.18	66.67
	사회보험 총가입률 및 주요 집단별 가입률	82.67	76.67	84.62	66.67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 및 비율	92.00	90.00	93.16	66.67
	임대료 부담률	82.00	76.67	83.76	66.67
	주거점유형태	77.33	66.67	80.34	66.67
	공공임대주택 이용률	76.67	63.33	80.34	66.67
	거주지역 만족도(범죄위험, 인프라 등)	72.67	80.00	70.94	66.67
	노숙인 수	62.00	60.00	63.25	33.33

자료: 저자 작성.

#### 다.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 분야는 영유아·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의 4개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총 29개 지표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유아·아동·청소년 영역에서는 학대 발생률, 폭력 피해 경험률, 보육 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주요 돌봄제 공기관(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 보호아동 수(가정위탁보호 등), 학교 밖 청소년 수, 아동복지시설 수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장애인 영역에서는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장애인시설 수, 장애인 학대 발생률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이었고, 장애인 활동 현황(지난 1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 비율 등), 탈시설화율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노인 영역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경험률 및 신고율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독거노인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인력 수급 현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복지시설 수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률, 사회서비스 종사자 현황(종사자 수, 저임금근로자 수, 장시간/초단시간 근로자 수, 종사자 지위별 근로자 수 등)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공급주체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구성 비율, 사회서비스 필요율, 사회서비스 만족도, 사회서비스 인지율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48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표 3-6〉 사회서비스 분야 2차 조사 결과

(단위: 100점 환산 시 점수)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대상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대 발생률	87.33	80.00	89.74	66.67
	폭력 피해 경험률	82.00	80.00	82.91	66.67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80.67	80.00	81.20	66.67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79.33	63.33	83.76	66.67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주요 돌봄제공기관(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	79.33	80.00	79.49	66.67
	보호아동 수(가정위탁보호 등)	78.00	70.00	79.49	100.00
	학교 밖 청소년 수	77.33	73.33	79.49	33.33
	아동복지시설 수	73.33	76.67	71.79	100.00
(대상별) 장애인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85.33	86.67	84.62	100.00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84.67	80.00	86.32	66.67
	장애인시설 수	80.67	76.67	82.05	66.67
	학대 발생률	80.00	80.00	80.34	66.67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종사자 수	80.00	76.67	80.34	100.00
	탈시설화율	78.67	86.67	76.92	66.67
	장애인 활동 현황(지난 1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 비율 등)	78.67	83.33	77.78	66.67
(대상별) 노인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85.33	83.33	85.47	100.00
	학대 발생률	80.67	76.67	81.20	100.00
	노인학대 경험률 및 신고율	80.00	73.33	82.05	66.67
	독거노인보호율	78.00	76.67	78.63	66.67
	장기요양기관 인력 수급 현황	76.67	73.33	76.92	100.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	76.67	70.00	77.78	100.00
	노인복지시설 수	74.67	73.33	74.36	100.00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사회서비스 이용률	85.33	80.00	86.32	100.00
	사회서비스 종사자 현황(종사자 수, 저임금근로자 수, 장시간/초단시간 근로자 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등)	83.33	73.33	85.47	100.00
	공급주체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구성 비율	76.00	70.00	77.78	66.67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사회서비스 필요율	75.33	73.33	76.07	66.67
	사회서비스 만족도	74.67	80.00	72.65	100.00
	사회서비스 인지율	70.00	66.67	70.09	100.00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수	66.67	66.67	66.67	66.67

자료: 저자 작성.

## 라. 인구가족 분야

인구가족 분야는 인구, 인구이동, 가족, 일-가정양립, 인구·가족 분야 국민인식, 이주배경의 6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 총 34개 지표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구영역에서는 주요 집단별 인구수(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성비 등), 노인인구 비율(고령화지수), 합계출산율, 총인구(세대) 수 및 지역별 인구(세대) 수, 부양비(아동, 노인), 생산가능 인구수 및 평균 연령, 지역별 인구수, 수도권 등 지역별 인구 구성비, 혼인율 및 연령별 혼인율, 사망률 및 지역별 사망률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모의 연령별 출산율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인구이동 영역에서는 인구이동 및 연령별 이동, 지방소멸지수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지역별 전출입 비율 및 사유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가족 영역에서는 주요 유형별 가구 비율(청년, 노인 등), 1인 가구 전체 비율 및 구성비(청년, 노인, 지역 등), 가구원 수 및 주요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

으로 응답되었으며, 다양한 가족 출현율(노인, 한부모, 다문화 등), 미혼 부모 가족 비율, 미혼인구 비율, 조이혼율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일-가정 양립 영역에서는 성별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인구 비율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성별 육아휴직자 수, 자녀 연령별 여성의 평균 취업시간, 출산 전후 모의 취업률, 지역별 맞벌이 가구 비율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인구-가족 분야 국민인식 영역에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이주배경 영역에서는 이주민 규모(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표 3-7〉 인구 분야 2차 조사 결과

(단위: 100점 환산 시 점수)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인구	주요 집단별 인구수(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성비 등)	92.67	90.00	93.16	100.00
	노인인구 비율(고령화지수)	92.00	90.00	92.31	100.00
	합계출산율	90.67	86.67	91.45	100.00
	부양비(아동, 노인)	89.33	86.67	89.74	100.00
	총인구(세대) 수 및 지역별 인구(세대) 수	89.33	93.33	88.03	100.00
	생산가능 인구수 및 평균 연령	86.00	83.33	86.32	100.00
	지역별 인구수	86.00	90.00	84.62	100.00
	수도권 등 지역별 인구 구성비	82.00	76.67	83.76	66.67
	사망률 및 지역별 사망률	80.67	86.67	79.49	66.67
	혼인율 및 연령별 혼인율	80.67	76.67	81.20	100.00
	모의 연령별 출산율	72.67	73.33	71.79	100.00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인구이동	인구이동 및 연령별 이동	81.33	80.00	82.05	66.67
	지방소멸지수	80.67	83.33	80.34	66.67
	지역별 전출입 비율 및 사유	79.33	76.67	79.49	100.00
가족	1인 가구 전체 비율 및 구성비(청년, 노인, 지역 등)	92.67	93.33	92.31	100.00
	주요 유형별 가구 비율(청년, 노인 등)	87.33	76.67	89.74	100.00
	가구원 수 및 주요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86.67	76.67	88.89	100.00
	가구원 수별 가구 수	85.33	73.33	88.03	100.00
	다양한 가족 출현율(노인, 한부모, 다문화 등)	78.67	73.33	80.34	66.67
	미혼인구 비율	74.00	66.67	75.21	100.00
	미혼부모 가족 비율	76.00	63.33	78.63	100.00
	조이혼율	70.00	63.33	71.79	66.67
	임신중절 경험률	54.67	53.33	54.70	66.67
	일-가정 양립	성별 가사노동시간	88.00	76.67	91.45
가족돌봄인구 비율		84.67	76.67	86.32	100.00
성별 육아휴직자 수		78.67	66.67	82.05	66.67
자녀 연령별 여성의 평균 취업시간		76.67	63.33	79.49	100.00
출산 전후 모의 취업률		76.00	66.67	77.78	100.00
지역별 맞벌이 가구 비율		74.00	66.67	75.21	100.00
인구-가족 분야 국민 인식	출산에 대한 인식	80.00	83.33	78.63	100.00
	결혼에 대한 인식	79.33	83.33	77.78	100.00
	가족관계 만족도	71.33	70.00	70.94	100.00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	71.33	70.00	70.94	100.00
이주배경	이주민 규모(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85.33	96.67	82.91	66.67

자료: 저자 작성.

## 마. 사회보장 일반

사회보장 일반 분야는 행복·삶의 질, 사회인식 및 행태, 재정 및 정책 일반, 거시지표의 4개 세부영역으로 나누어 총 27개 지표에 대해 2차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복·삶의 질 영역에서는 전체 인구 및 주요 집단별 행복 수준, OECD Better Life Index,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 및 주요 집단별 비율의 필요성이 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사회인식 및 행태 영역에서는 갈등 및 차별 인식(성별, 장애 등), 불평 등에 대한 인식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국민연금 등), 사회이동가능성,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증세에 대한 인식,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적 자본(일반 및 기관신뢰 등), 사회보장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부패 인식, 공정성 인식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재정 및 정책 일반 영역에서는 GDP 대비 총사회지출 및 분야별 사회지출,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지출, 1인당 사회지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및 분야별 사회복지지출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생애주기별 수혜율, 급여형태별 사회지출 등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거시지표 영역에서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후변화 등의 필요성이 100점 환산 시 8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으며, 보건복지 이슈의 필요성이 70점 이상으로 응답되었다.

〈표 3-8〉 사회보장 일반 분야 2차 조사 결과

(단위: 100점 환산 시 점수)

세부 영역	지표	전체 평균	전공분야		
			보건의료	사회과학	기타
행복·삶의 질	전체 인구 및 주요 집단별 행복 수준	85.33	80.00	87.18	66.67
	OECD Better Life Index	82.00	80.00	82.91	66.67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 및 주요 집단별 비율	81.33	83.33	82.05	33.33
사회인식 및 행태	불평등에 대한 인식	86.67	90.00	85.47	100.00
	갈등 및 차별 인식(성별, 장애 등)	84.00	83.33	84.62	66.67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국민연금 등)	79.33	76.67	80.34	66.67
	사회이동가능성	79.33	76.67	81.20	33.33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78.67	83.33	76.92	100.00
	사회적 자본(일반 및 기관신뢰 등)	78.67	86.67	77.78	33.33
	증세에 대한 인식	78.67	80.00	78.63	66.67
	사회보장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78.00	80.00	77.78	66.67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	74.67	80.00	72.65	100.00
	부패 인식	74.00	80.00	72.65	66.67
	공정성 인식	73.33	83.33	70.94	66.67
	기부 및 자원봉사 인식 및 경험률	69.33	60.00	71.79	66.67
재정 및 정책 일반	GDP 대비 총사회지출 및 분야별 사회지출	93.33	90.00	94.02	100.00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지출	92.67	93.33	92.31	100.00
	1인당 사회지출	86.00	80.00	88.03	66.67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86.00	90.00	85.47	66.67
	지방자치단체 총 사회복지지출 및 분야별 사회복지지출	81.33	76.67	82.91	66.67
	생애주기별 수혜율	75.33	76.67	75.21	66.67
	급여형태별 사회지출	73.33	63.33	76.07	66.67
	1인당 공무원 수	52.67	53.33	52.14	66.67
거시지표	물가상승률	89.33	86.67	89.74	100.00
	경제성장률	88.67	90.00	88.03	100.00
	기후변화	82.00	90.00	79.49	100.00
	보건복지 이슈	73.33	70.00	73.50	100.00

자료: 저자 작성.

### 3. 2차 조사 결과 종합

앞 절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표와 자료원을 분석틀의 안(案)으로 선정했다. 다음 표는 2차 조사 결과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을 분석,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2차 조사에서는 사회정책 분야 및 세부영역별로 제시한 지표 외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견과 추가해야 할 핵심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정성적 의견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여 제3절에서 최종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안)”을 제시했다.

〈표 3-9〉 필요성에 대해 높게 응답된 지표들

(단위: 개)

분야	세부영역	80% 기준	70% 기준(추가)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기대여명, 건강수명, ADL/IADL 제약 비율(노인, 장애인 등), 주요 질환 발생률(암, 뇌졸중, 고혈압 등),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및 구성비	주관적 건강상태, 치매 검진율, 발생률, 유병률, 영아 사망률
	정신건강	자살률(전체 및 주요 집단별), 정신질환 유병률(전체 및 주요 집단별),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생각 비율, 중독률(약물, 인터넷)
	건강행태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 실천율
	보건서비스 이용	미충족의료 경험률(전체 및 주요 집단별), 의료서비스 이용률	예방접종률, 의료서비스 이용현황(평균 입원기간, 내원 횟수 등)
	정책 수요 및 공급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인력, 병상 등),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민간보험 가입률
소득보장 분야	소득분배	(상대)빈곤율, 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빈곤갭(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자산

분야	세부영역	80% 기준	70% 기준(추가)
		등),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지니계수(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분위배율(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분배지표, 경제적 박탈 경험률
	가계	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평균, 중위) 및 구성비, 가계 총지출 및 요소별 지출 수준 및 구성비	가계 총자산 및 요소별 자산 수준 및 구성비, 가계 총부채 및 요소별 부채 수준 및 구성비, 소득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수준 및 구성비, 노후생활 준비 및 조달방법, 주요 취약집단 소득, 자산, 부채 수준(장애인 등)
	경제활동	고용률 및 주요 집단별 고용률, 실업률 및 주요 집단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비정규직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율, 평균 노동시간, 장시간 근로자 비율	니트(NEET) 비율
	정책 수요 및 공급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기준중위소득,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사회보험 총가입률 및 주요 집단별 가입률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 및 비율, 임대료 부담률	주거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이용률, 거주지역 만족도(범죄위험, 인프라 등)
사회서비스 분야	(대상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학대 발생률, 폭력 피해 경험률,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주요 돌봄제공기관(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 보호아동 수(가정위탁보호 등), 학교 밖 청소년 수, 아동복지시설 수
	(대상별) 장애인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장애인시설 수, (장애인 학대 발생률)	장애인 활동 현황(지난 1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 비율 등), 탈시설화율

5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분야	세부영역	80% 기준	70% 기준(추가)
	(대상별) 노인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노인학대 발생률, 노인학대 경험률 및 신고율	독거노인보호율, 장기요양기관 인력 수급 현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 노인복지시설 수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사회서비스 이용률, 사회서비스 종사자 현황 (종사자 수, 저임금근로자 수, 장시간/초단시간 근로자 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등)	공급주체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구성 비율, 사회서비스 필요율, 사회서비스 만족도, 사회서비스 인지율
인구가족 분야	인구	주요 집단별 인구수(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성비 등), 노인인구 비율(고령화지수), 합계출산율, 총인구(세대) 수 및 지역별 인구(세대) 수, 부양비(아동, 노인), 생산가능 인구수 및 평균 연령, 지역별 인구수, 수도권 등 지역별 인구 구성비, 혼인율 및 연령별 혼인율, 사망률 및 지역별 사망률	모의 연령별 출산율
	인구이동	인구이동 및 연령별 이동, 지방소멸지수	지역별 전출입 비율 및 사유
	가족	주요 유형별 가구 비율(청년, 노인 등), 1인 가구 전체 비율 및 구성비(청년, 노인, 지역 등), 가구원 수 및 주요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다양한 가족 출현율(노인, 한부모, 다문화 등), 미혼부모 가족 비율, 미혼인구 비율, 조이혼율
	일-가정 양립	성별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인구 비율	성별 육아휴직자 수, 자녀 연령별 여성의 평균 취업시간, 출산 전후 모의 취업률, 지역별 맞벌이 가구 비율
	인구가족 분야 국민인식	출산에 대한 인식	결혼에 대한 인식, 가족관계 만족도,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
	이주배경	이주민 규모(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보장 일반	행복, 삶의 질	전체 인구 및 주요 집단별 행복 수준, OECD Better Life Index,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 및 주요 집단별 비율

분야	세부영역	80% 기준	70% 기준(추가)
	사회인식 및 행태	갈등 및 차별 인식(성별, 장애 등), 불평등에 대한 인식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국민연금 등), 사회이동가능성,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증세에 대한 인식,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 사회적 자본(일반 및 기관신뢰 등), 사회보장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부패 인식, 공정성 인식
	재정 및 정책 일반	GDP 대비 총사회지출 및 분야별 사회지출,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지출, 1인당 사회지출,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및 분야별 사회복지지출	생애주기별 수혜율, 급여형태별 사회지출
	거시지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기후변화	보건복지 이슈

자료: 저자 작성.

### 제3절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안)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전문가 조사 결과 그리고 필요도와 활용도, 산출용이성 등을 검토한 전문가 자문을 종합하여 정책 성과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정책 영역과 측정지표를 구조화하여 동향 분석틀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정책 관점을 견지하여 대표성 있는 지표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세부 영역별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보조지표를 제안하거나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다측면의 현상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종합한 최종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은 <표 3-10>과 같다.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정책 분야

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세부 영역은 건강수준,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이다. 건강수준 영역은 사회정책 동향을 분석, 관리하기에 필요성이 높고, 국제비교와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자살률을 핵심성과지표로 포함하고, 우울감 경험률은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지표이다. 건강행태 영역은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을 핵심지표로 한다.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영역에는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미충족의료 경험률과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이 있고, 국제비교 및 시계열분석이 모두 가능한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소득보장 분야는 소득과 자산 등 가구의 경제력과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소득보장정책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가계 영역은 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부채의 실태를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계열분석을 시도한다. 소득분배 영역의 대표적인 측정지표로서 빈곤율과 지니계수는 국제비교와 시계열분석을 모두 실시한다. 특히 빈곤율은 주요 연령집단과 가구 유형의 빈곤율을 시계열 추적하고, 소득보장정책, 즉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를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경제활동에서는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이 필요한 근로빈곤층과 저임금근로자, 장기실업자 등 구직 취약계층의 동향을 분석한다. 소득보장정책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주요 정책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주요 소득보장제도의 수급률을 시계열분석한다. 그리고 주요 노후소득보장정책으로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국제비교 및 시계열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주거 영역의 측정지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과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를 주요 정책 분야로 한다. 법률에 따르면,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법령으로 규정된 서비스 분야(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와 제공수단(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의 광범위성으로 인해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범위는 매우 확장되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성과와 동향을 몇 가지 선택적 지표로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있어야 할 사회서비스의 종류는 다종다양하고, 서비스 제공의 목적도 문제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득보장이나 보건의료 영역과 같이 빈곤, 불평등, 건강수준 같은 성과(outcome)로 정책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사회서비스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고 본다면, 정책의 성과는 삶의 질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사회보장 일반 분야의 동향 지표로 측정한다. 결국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성과와 동향은 서비스 대상별, 기능별로 세분화하거나, 전체 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일관된 기준을 만들어 추상성을 높여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성과 측정에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된 지표들은 대부분 대상별 사회서비스 공급(시설, 인프라, 인력) 현황과 주요 서비스 제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여기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수요와 공급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서비스 수요 영역은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과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을 측정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자료의 이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은 최근 자료로 횡단면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서비스 공급 영역은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성과, 그리고 노동시장 성과 측정지표로 구성된다.

인구 분야는 전문가조사 결과, 필요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자료의 이용가능성과 활용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영역과 측정지표를 재구조화하였다. 우선, 인구(정태) 영역에서는 인구 규모(성별, 연령별, 지역별)와 부양비의 지표를 포함하여 시계열분석을 시도한다. 인구(동태) 영역에서는 시계열분석과 국제비교가 가능한 인구이동률과 함께 지역별 인구 전출입 규모를 측정지표로 선정하였다. 가구 영역에서는 1인 가구의 동향과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을 측정지표로 포함하였다. 혼인 및 출산 영역에서는 국제비교와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합계출산율과 시계열분석이 가능한 결혼이민자 비율을 측정지표로 포함한다. 돌봄과 양육 영역에서는 성별 가사노동시간과 육아휴직자 수를 시계열분석한다.

사회보장 일반은 다(多)분야를 아우르는 정책의 종합적인 결과와 여건을 포괄하고 있다. 행복과 삶의 질 영역은 행복과 삶의 질, 사회적 고립을 주요 측정지표로 하여, 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국제비교와 시계열분석을 시도한다. 사회인식은 갈등 인식, 신뢰 등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인식,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등 사회정책과 관련된 국민 인식과 주요 현상을 추적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시계열분석과 국제비교를 시도한다. 사회보장재정은 국가 단위 총사회지출과 분야별 사회지출,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 그리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지출을 측정지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책 관련 거시지표로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기후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표 3-10〉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안)

분야	세부영역	측정지표	국제 비교	시계열 분석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① 기대수명, 건강수명	✓	✓
		② 주관적 건강상태	✓	✓
		③ 자살률	✓	✓
		④ 우울감 경험률		✓
	건강행태	① 흡연율		✓
		② 음주율		✓
③ 비만율			✓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비용	① 미충족의료 경험률		✓	
	②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	
	③ 가구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	✓	
	④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	
소득보장 분야	가계	① 가계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구성		✓
		② 가계 총지출 및 주요 요소별 지출 수준·구성		✓
		③ 가계 총자산 및 주요 요소별 자산 수준·구성		✓
		④ 가계 총부채 및 주요 요소별 부채 수준·구성		✓
	소득분배	①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	✓
		② 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
		③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
	경제활동	① 근로빈곤층, 저임금근로자	✓	✓
② 구직 취약계층(니트, 장기실업자 비율 등)		✓	✓	
정책 수요 및 공급	① 기준중위소득		✓	
	②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국민기초생활보장, 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	
	③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	
주거	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②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	✓	✓	

62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분야	세부영역	측정지표	국제 비교	시계열 분석
사회 서비스 분야	사회서비스 수요	①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② 주요 대상별 학대 피해 발견율 ③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④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⑤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 ✓ ✓ ✓
	사회서비스 공급	① 사회서비스산업적 성과(사업체 및 종사자) ②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 ✓
인구 분야	인구	① (정태) 인구 규모(성별, 연령별, 지역별) ② (정태) 부양비(아동, 노인) ③ (동태) 인구이동률 ④ (동태) 지역별 전출입 규모(성별, 연령별)	✓	✓ ✓ ✓ ✓
	가구	① 1인 가구(성별, 연령별) ②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가구원 수별 가구 및 다양한 가구(청년가구, 한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등))	✓	✓ ✓
	혼인·출산	① 합계출산율 ② 결혼이민자 비율	✓	✓ ✓
	돌봄·양육	① 성별 가사노동시간 ② 성별 육아휴직자 수		✓ ✓
사회보장 일반	행복·삶의 질	① 행복 ② 삶의 질 ③ 사회적 고립	✓ ✓ ✓	✓ ✓ ✓
	사회인식	① 갈등 및 차별 인식 ② 사회적 자본 인식 ③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 ✓ ✓
	사회보장 재정	① 총사회지출 ② 분야별 사회지출 ③ 조세부담률·국민부담률 ④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 ✓ ✓	✓ ✓ ✓ ✓
	거시지표	① 경제성장률 ② 물가상승률 ③ 기후변화(기온 등)	✓ ✓ ✓	✓ ✓ ✓

자료: 연구진 작성.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4장

## 보건의료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제1절 건강수준

제2절 건강행태

제3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 제4장 보건의료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 제1절 건강수준

#### 1.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 기대수명: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
- 기대여명: 정확한 연령 x세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
- 자료원: 「생명표」,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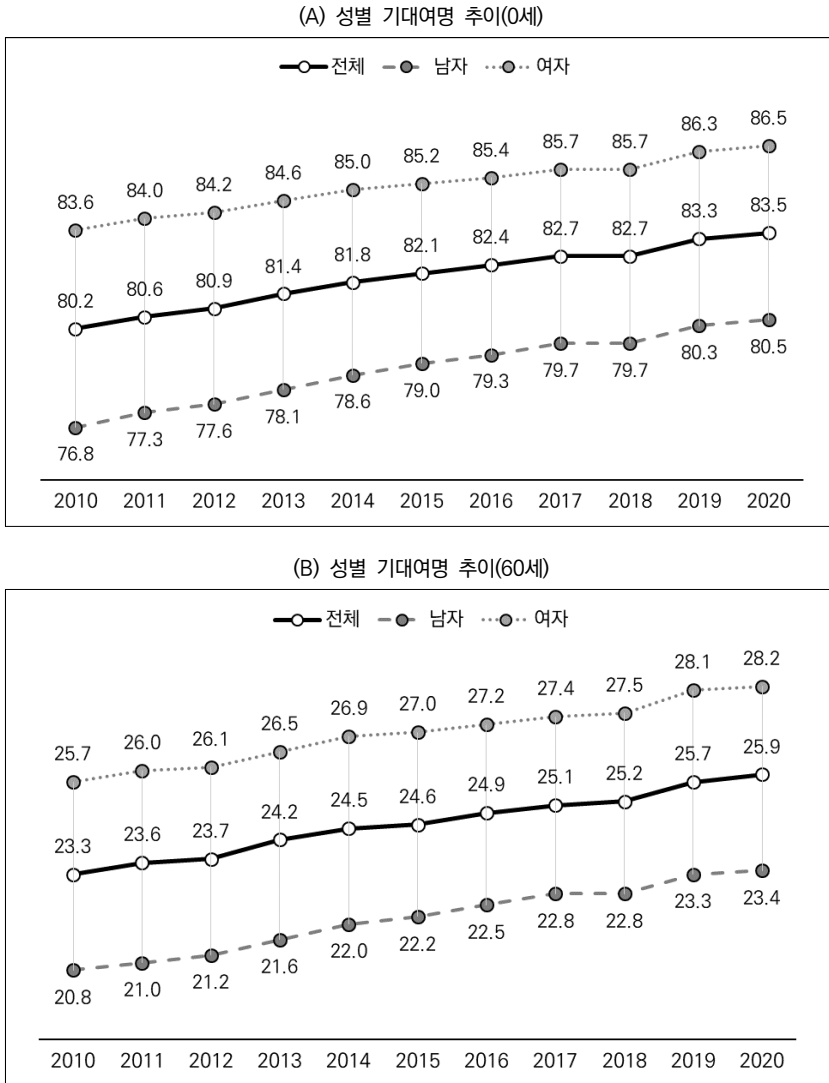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0세의 기대여명'을 의미하며, 평균수명이라고도 한다. 기대여명은 정확한 특정 연령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뜻한다. 연령별 총 생존 연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생명표를 통해 산출한다.

한국인 기대수명은 2020년 기준 남녀 전체 83.5년, 남자 80.5년, 여자 86.5년이었다[그림4-1(A)]. 전년 대비 남녀 전체 0.2년, 남자 0.2년, 여자 0.2년 증가하였으며, 2010년 남녀 전체 80.2세(남자 76.8세, 여자 83.6세) 대비 3.3년(남자 3.7년, 여자 2.9년) 증가하였다. 남녀 기대수명 격차는 2010년 6.8년에서 2017년 6.0년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2020년까지 6.0년을 유지하고 있다.

60세 기대여명은 남녀 전체 25.9년(남자 23.4년, 여자는 28.2년)으로 2010년 대비 2.6년(남자 2.6년, 여자 2.5년) 증가하였다[그림4-1(B)].

[그림 4-1] 성별 기대여명 추이(2010~2020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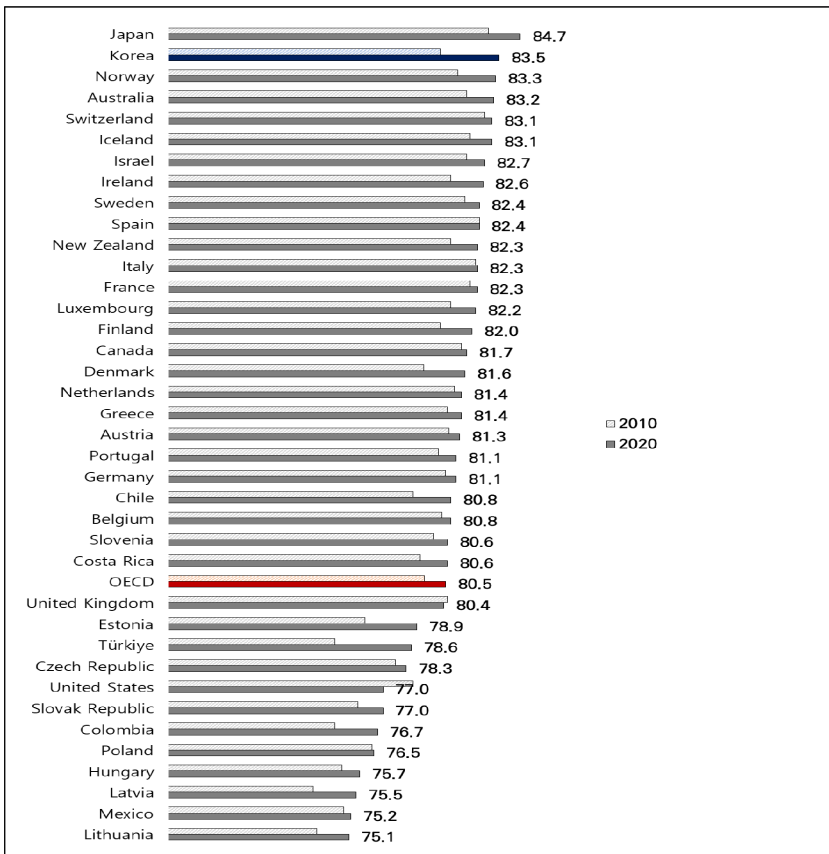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12.6.). 완전생명표(1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 에서 2022.12.14. 인출.



OECD 국가 간 기대수명을 비교해보면,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일본의 84.7년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80.5년보다 3.0년 긴 수준이다. 한국은 2010년 대비 3.3년 증가하여 OECD 평균 1.2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다[그림4-2].

[그림 4-2] 기대수명 국제 비교

(단위: 년)



주: 결측값은 인접 연도로 대체, OECD 값은 2020년(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2022a). OECD Health Statistics 2022.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2022.10.24.

- 건강수명: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
- 자료원: 「생명표」,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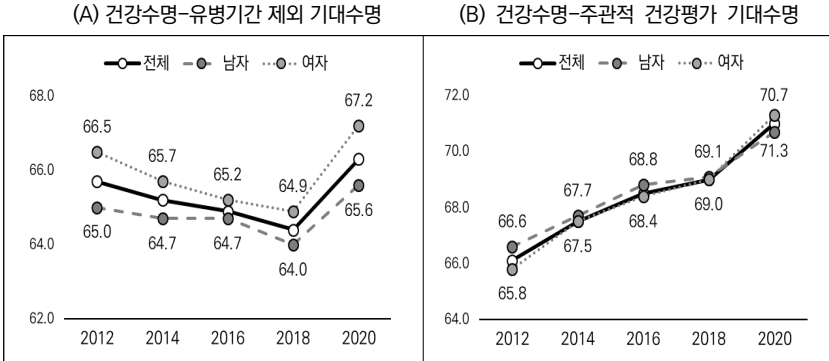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기간을 제외한 수명으로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산출 방법 및 결과가 달라진다. 통계청에서 2년 단위로 발표하는 건강수명의 경우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과 '주관적 건강 기대수명'으로 구분된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연령별 기대여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아프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건강한 상태로 살 것이라 기대되는 연수를 계산하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의 유병기간으로 장애 유병률을 산출하며, 생명표의 정지인구를 이용하여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산출한다(통계청, 2021a). 2020년 남녀 전체 66.3세(남자 65.6세, 여자 67.2세)였다. 2012년 남녀 전체 65.7세로 2018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 증가하였다(그림 4-3(A)).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연령별 기대여명 중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2020년 기준 남녀 전체 71.0세(남자 70.0세, 여자 71.3세)였다. 2012년 남녀 전체 66.1세(66.6세, 65.8세) 이후 지속 증가하였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으나,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은 남자보다 여자가 낮았다(그림 4-3(B)).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건강수준 자체는 높다고 평가되나, 기대수명 대비 건강수명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유병기간 제외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2012년 15.2년(남자 12.6년, 17.7년)에서 2018년 18.3년(남자 15.7년, 여자 20.8년)으로 증가하였다가 2020년 17.2년(남자 14.9년, 여자 19.3년)으로 감소하였다(그림 4-4(A)). 주관적 건강평가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2012년 14.8년(남자 11.0년, 여자 18.4년)에서 2020년 12.5년(남자 9.8년, 여자 15.2년)으로 감소하였다(그림 4-4(B)).

[그림 4-3] 성별 건강수명 추이(2012~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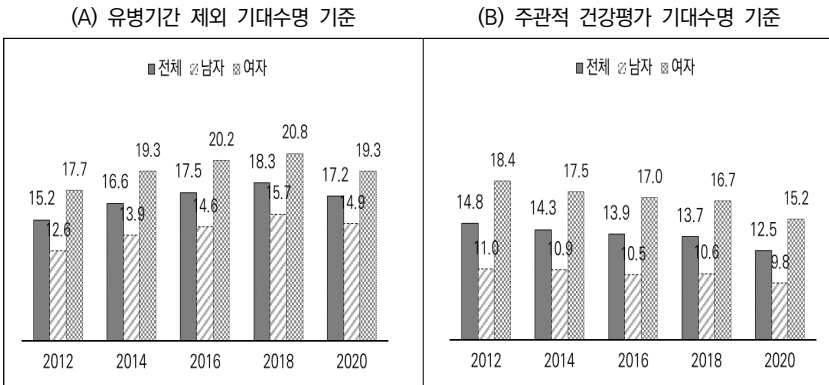
(단위: 년)



자료: 통계청. (2021.12.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 에서 2022.12.24. 인출.

[그림 4-4] 성별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격차(2012~2020년)

(단위: 년)



자료: 통계청. (2022.12.6.). 완전생명표(1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 에서 2022.12.14. 인출 및 통계청. (2021.12.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 에서 2022.12.24. 인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 주관적 건강인지율

$$\text{주관적 건강인지율} = \frac{\text{평소 본인 건강이 '매우 좋음' 또는 ' 좋음'으로 응답한 사람 수}}{\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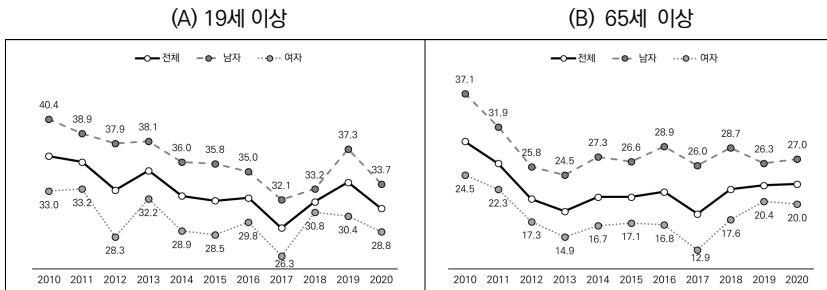
-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주관적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질병관리청), 사회조사(통계청), 의료서비스경험조사(보건복지부) 등이 있다. OECD 보건통계 중 '주관적 건강 상태(percieved health status)' 수집에 활용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평소에 귀하의 건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으로 응답하며, 이 중 좋다(매우 좋음 또는 좋음)고 응답한 비율을 주관적 건강인지율로 정의한다.

2020년 19세 이상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31.2%(남자 33.7%, 28.8%)로, 2010년 36.6%(남자 40.4%, 여자 33.0%) 대비 감소하였다([그림 4-5(A)] 참고).

[그림 4-5] 성별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2010~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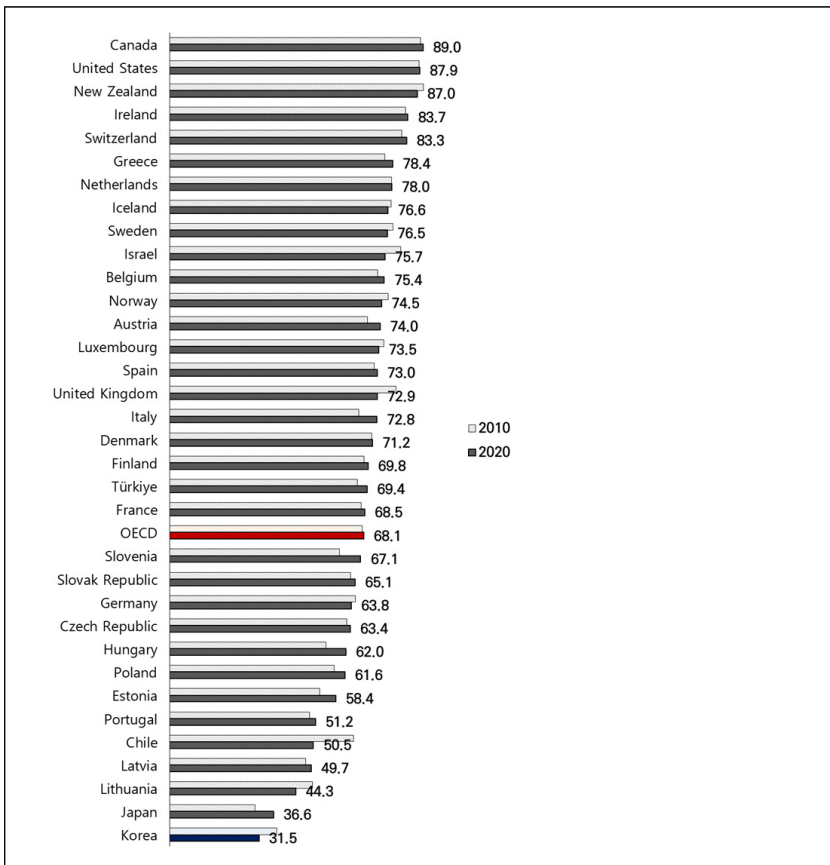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4.12.a). 주관적 건강인지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에서 2022.10.25. 인출.

OECD 국가 간 주관적 건강상태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2020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을 양호(좋음 및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1.5%였으며, OECD 평균은 68.1%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그림 4-6].

[그림 4-6] 주관적 건강상태 국제 비교

(단위: %)



주: 결측값은 인접 연도로 대체, OECD 값은 2020년(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4개국 평균.  
 자료: OECD. (2022a). OECD Health Statistics 2022.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2022.10.24.

### 3. 우울감 경험률 및 우울증상 유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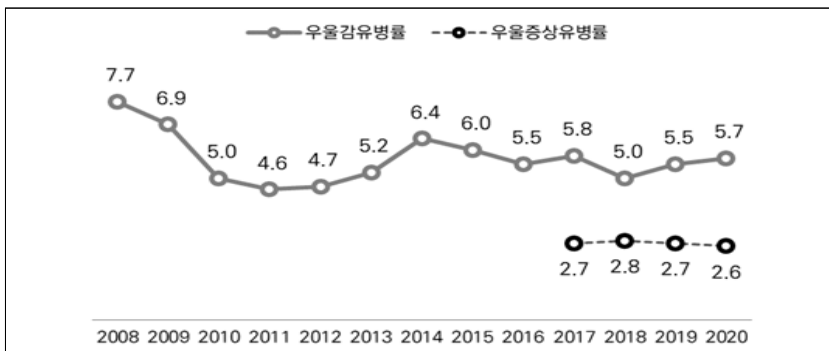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주관적 건강인지율} &= \frac{\text{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 사람 수}}{\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
 \text{우울증상 유병률} &= \frac{\text{우울증선별도구 10점(27점) 이상인 사람 수}}{\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
 \text{자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질병관리청}
 \end{aligned}$$

우울감 경험률은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청)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로 산출한다. 2020년 우울감 경험률은 표준화율 5.7%로, 2011년 이후 증가하다가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 5.0%, 2019년 5.5%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울증선별도구(PHQ-9)를 통해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우울증상 유병률을 산출한다. 2020년 우울증상 유병률은 표준화율 2.6%로, 2018년 2.8%, 2019년 2.7%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림 4-7] 우울감 경험률 및 우울증상 유병률 추이(2008~2020년)

(단위: %)



자료: 질병관리청. (2021). 우울감 및 증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건강통계.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pblcVis/details.do?ctgrSn=65> 에서 2022.10.25.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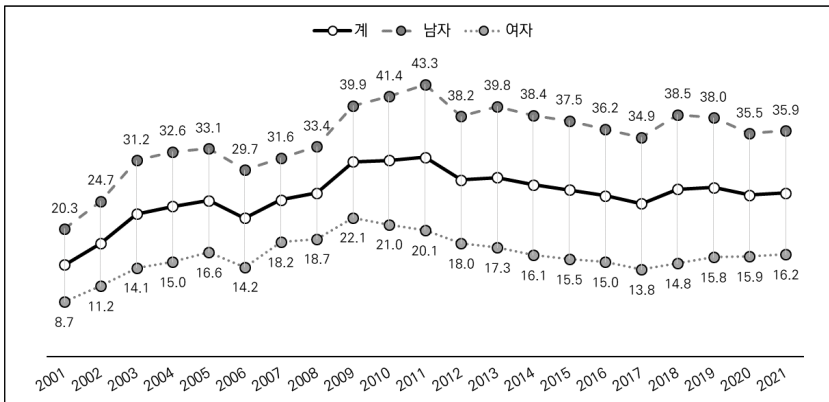
## 4. 자살률

-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 (자살 사망자 수 / 주민등록연앙인구) × 100,000
- 자료원: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01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1년 31.7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였으며, 남성은 2011년에 43.3명, 여성은 2009년에 22.1명으로 자살률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2021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6.0명(남자 35.9명, 여자 16.2명)으로 전년 대비 1.2%(남자 1.1%, 여자 1.9%)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높으며, 2021년 전체 자살사망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8.9%,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자살사망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 수준이었으며, 작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그림 4-8] 성별 자살률 추이(2001~2021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자료: 통계청. (2022.9.27.).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74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고, 80세 이상 초고령층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 기준 80세 이상(62.6명), 70대(38.8명), 50대(30.5명) 순으로 높았다.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 30대 이하 연령층의 자살률은 증가하고, 그 외 연령층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4-1〉 연령별 자살률 추이(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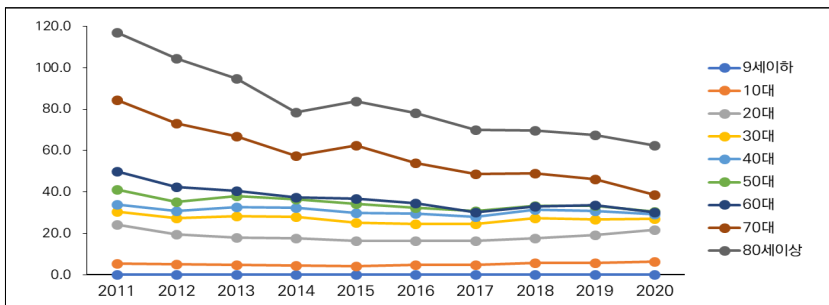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평균증가율	
											11-20	16-20
9세 이하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
10대	5.5	5.1	4.9	4.5	4.2	4.9	4.7	5.8	5.9	6.5	1.7%	5.8%
20대	24.3	19.5	18.0	17.8	16.4	16.4	16.4	17.6	19.2	21.7	-1.1%	5.8%
30대	30.5	27.3	28.4	27.9	25.1	24.6	24.5	27.5	26.9	27.1	-1.2%	2.0%
40대	34.0	30.9	32.7	32.4	29.9	29.6	27.9	31.5	31.0	29.2	-1.5%	-0.3%
50대	41.2	35.3	38.1	36.4	34.3	32.5	30.8	33.4	33.3	30.5	-3.0%	-1.3%
60대	50.1	42.4	40.7	37.5	36.9	34.6	30.2	32.9	33.7	30.1	-5.0%	-2.7%
70대	84.4	73.1	66.9	57.6	62.5	54.0	48.8	48.9	46.2	38.8	-7.5%	-6.4%
80세 이상	116.9	104.5	94.7	78.6	83.7	78.1	70.0	69.8	67.4	62.6	-6.1%	-4.3%
계	31.7	28.1	28.5	27.3	26.5	25.6	24.3	26.6	26.9	25.7	-2.1%	0.1%

자료: 통계청. (2022.9.27.).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그림 4-9〕 연령별 자살률 추이(2011~2020년)

(단위: 인구 10만 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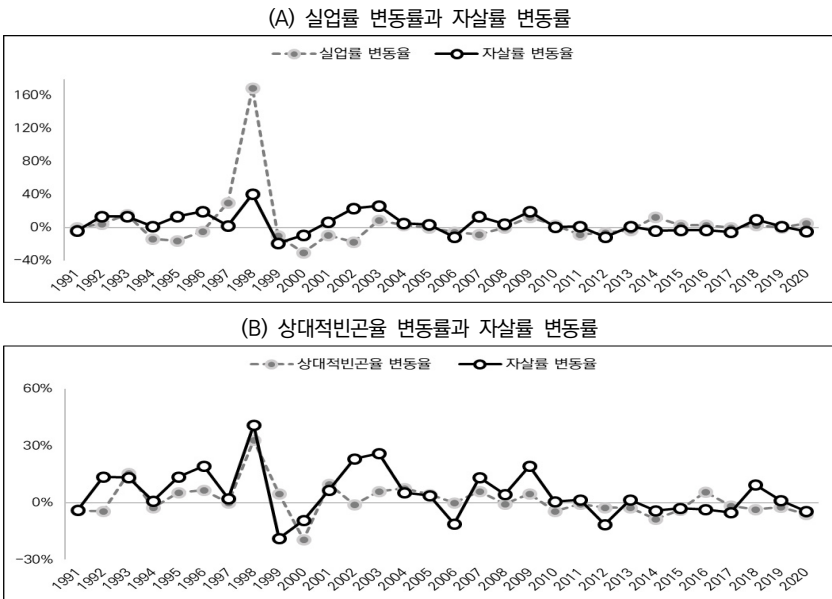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9.27.).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자살률은 사회적인 경기변동,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된다. 실업률의 변동과 자살률 변동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상대적 빈곤율 변동 역시 자살률 변동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간 외환위기, 카드대란, 미국발 금융위기 등의 사건을 계기로 자살률은 수직으로 상승한 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10]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자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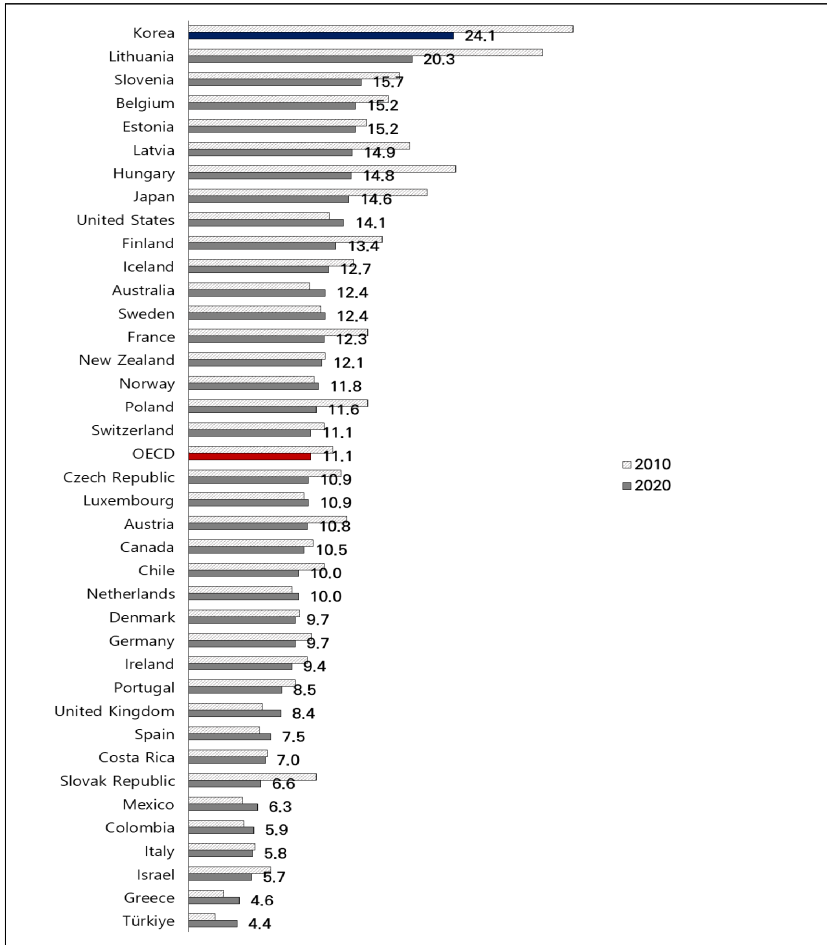
- 주: 1) 상대적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 2) 2016년까지는 가계금융조사 도시 2인 가구 기준, 2017년 이후 변동률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함.

자료: 1) 통계청. (2022.9.29).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3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35&conn_path=I2) 에서 2022.10.24. 인출,  
 2) 통계청. (2022.9.27).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3) 통계청. (2018.7.3.).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에서 2022.10.24. 인출,  
 4) 통계청. (2022.12.1.).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에서 2022.12.23. 인출.

OECD 국가 간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2020년 한국 연령표준화자살률은 24.1명으로 OECD 회원 38개 국가(평균 11.1명) 중 가장 높다.

[그림 4-11] 자살률 국제 비교

(단위: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주: 결측값은 인접 연도로 대체, OECD 값은 2020년(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2022b). Health Status :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Retrieved from [http://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health-data-en&doi=data-00540-en#](http://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health-data-en&doi=data-00540-en#) 2022.10.25.

## 제2절 건강행태

### 1. 흡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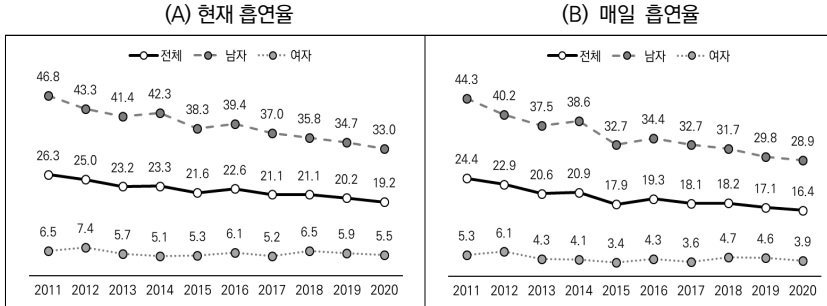
$$\begin{aligned}
 \text{- 현재 흡연율} &= \frac{\text{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times 100 \\
 \text{- 매일 흡연율} &= \frac{\text{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times 100 \\
 \text{-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end{aligned}$$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현재 흡연율은 성인의 경우(만 19세 이상) 평생 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흡연자 비율(%)로 정의하고, 매일 흡연율은 평생 담배(궐련)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매일 담배를 피우는 비율(%)로 정의한다.

2020년 현재 흡연율은 19.2%로 2011년 26.3% 대비 연평균 3.1% 감소하였다[그림 4-12(A)]. 여자보다 남자 흡연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남자의 2020년 현재 흡연율은 33.0%로 2011년 46.8% 대비 연평균 3.4% 감소 경향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2020년 현재 흡연율은 5.5%이며, 2011년 6.5% 대비 연평균 1.7% 감소하였다. 매일 흡연율은 2020년 16.4%로 2011년 24.4% 대비 연평균 3.9% 감소하였다[그림 4-12(B)].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의 2020년 매일 흡연율은 28.9%로 2011년 44.3% 대비 연평균 4.2% 감소, 여성의 2020년 매일 흡연율은 3.9%로 2011년 5.3% 대비 연평균 3.0% 감소하였다.

[그림 4-12] 성별 흡연율 추이(2011~2020년)

(단위: %)



자료: 1) 통계청. (2022.4.12.b). 현재 흡연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2) 통계청. (2022.4.12.c). 매일 흡연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3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35&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2. 음주율

- 연간음주율 =  $\frac{\text{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times 100$

- 고위험음주율 =  $\frac{\text{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만 19세 이상 분석대상자 수}} \times 100$

-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연간음주율은 만 19세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음주한 비율(%)로 정의하고, 고위험음주율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의 경우 7잔 이상, 여자의 경우 5잔 이상인 경우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한 비율(%)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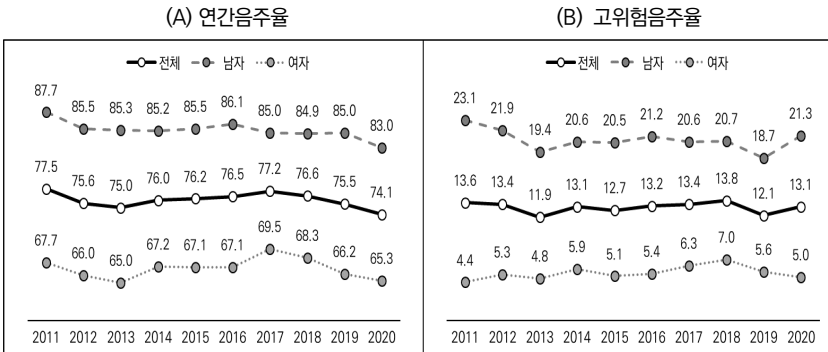
연간음주율은 2020년 74.1%로 남자 83.0%, 여자 65.3%였으며, 전년

대비 남자, 여자 모두에서 감소하였다[그림 4-13(A)]. 연간음주율은 2011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연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3년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11년 77.5% 대비 연평균 0.4% 감소하였다. 남자 음주율은 2011년 87.7% 대비 연평균 0.5% 감소, 여자 음주율은 2011년 67.7% 대비 0.3% 감소하였다.

1회 평균 음주량이 남자 7잔 이상, 여자 5잔 이상으로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고위험음주율은 2020년 13.1%(남자 21.3%, 여자 5.0%)였다[그림 4-13(B)]. 전년 대비 남자 고위험음주율은 증가하였으며, 여자 고위험음주율은 감소하였다. 2011년 대비 2020년까지 고위험음주율은 연평균 0.4% 감소하였고, 남자는 연평균 0.8% 감소하였으나 여자는 연평균 1.3% 증가하였다.

[그림 4-13] 성별 음주율 추이(2011~2020년)

(단위: %)



자료: 1) 통계청. (2022.4.12.d). 연간음주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1&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2) 통계청. (2022.4.12.e). 고위험음주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8&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3. 비만 유병률

$$\text{비만 유병률} = \frac{\text{체질량지수 } 25\text{kg}/\text{m}^2 \text{ 이상인 대상자 수}}{\text{분석대상자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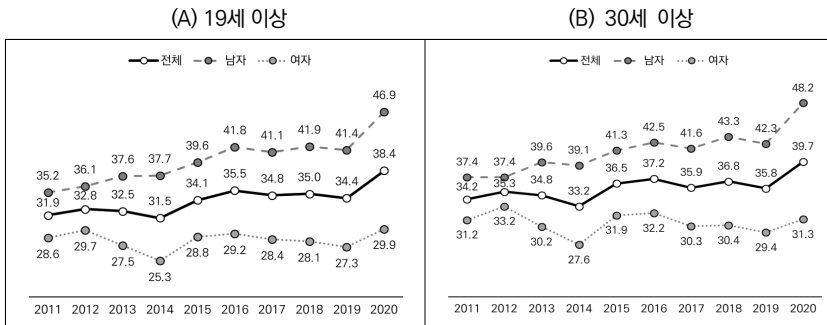
-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 유병률은 체질량지수가 25kg/m<sup>2</sup> 이상인 사람의 비율(%)로 정의한다.

2020년 비만 유병률은 19세 이상에서 38.4%로 남자 46.9%, 여자 29.9%였다. 이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는데, 남자 비만 유병률이 전년 41.4%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31.9%(남자 35.2%, 여자 28.6%) 대비 연평균 1.9%(남자 2.9%, 여자 0.4%) 증가하였다. 30세 이상 비만 유병률은 2020년 39.7%로 남자 48.2%, 여자 31.3%였으며, 전년 대비 남자 비만 유병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34.2%(남자 37.4%, 여자 31.2%) 대비 연평균 1.5%(남자 2.6%, 여자 0.03%) 증가하였다.

[그림 4-14] 성별 비만 유병률 추이(2011~2020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2. 4. 12.f).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path=I3) 에서 2022. 10. 25. 인출.

## 제3절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비용

### 1. 미충족 의료율

$$\text{미충족 의료율} = \frac{\text{지난 1년간 병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치료 및 검사 제외)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 수}}{\text{전체 응답자 수}}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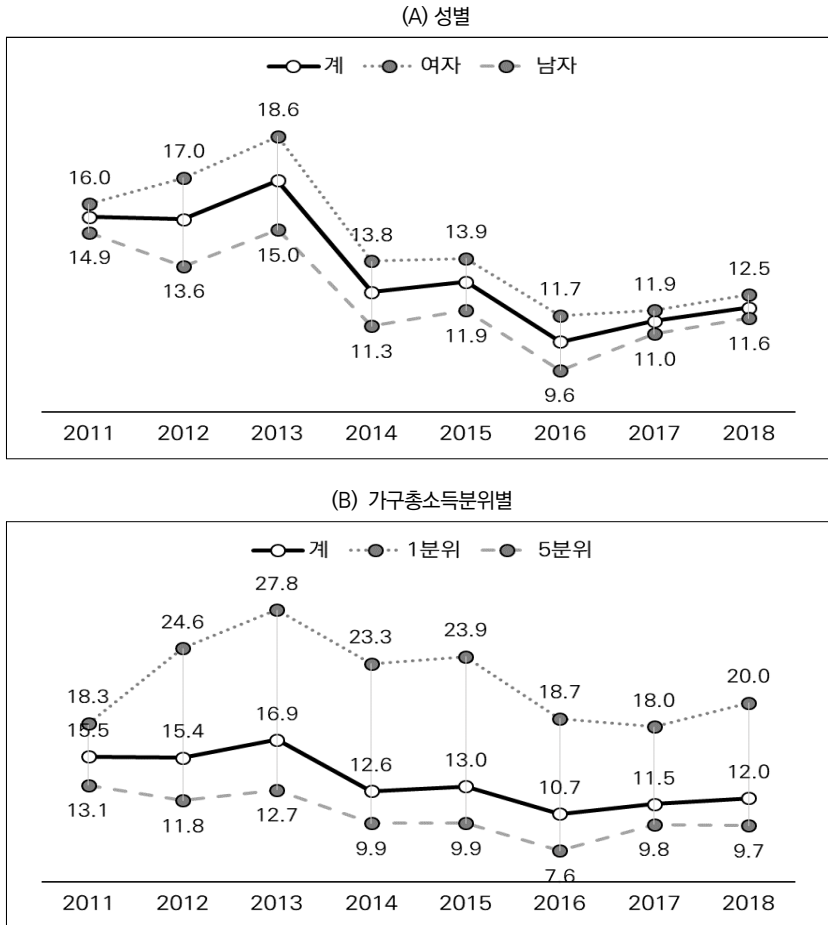
- 자료원: 「한국의료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미충족 의료율은 지난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치료, 치과 검사 제외)를 받아 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로 정의된다. 한국의료패널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8세 이상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를 통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2018년 미충족 의료율은 12.0%로 남자 11.6%, 여자 12.5%였으며, 가구총소득분위에 따라서는 1분위 기준 20.0%, 5분위 기준 9.7%였다. 연도에 따라 2013년까지 증가하다 이후 201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하였다. 2011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은 3.1%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분위에 따라서 1분위는 연평균 1.1% 증가, 4분위 2.8%, 3분위 2.9%, 5분위 3.7%, 2분위 5.1%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01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에 따르면, 2019년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14.9%, 여자 15.3%였으며,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율은 남자 2.3%, 여자 3.2%였다(박은자 외, 2021).

[그림 4-15] 미충족 의료율 추이(2011~2018년)

(단위: %)



자료: (A) 통계청. (2021.4.21.a). 성별 18세 이상 성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4&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4&conn_path=I2) 에서 2022.10.24. 인출.

(B) 통계청. (2021.4.21.b). 연간 가구총소득분위별 18세 이상 성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6&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 2. 건강보험 보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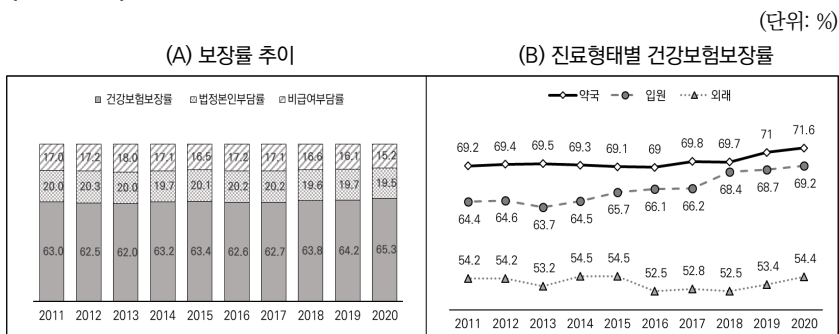
- 건강보험 보장률 = (공단부담금 /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진료비) × 100
- 자료원: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률은 건강보험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전체 보장률을 산출하기 위해서 우선 요양기관 중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을 추정하고, 이들의 평균값을 통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 등을 추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65.3%였고, 비급여 부담률은 15.2%로 전년 대비 0.9%p 감소하여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4-16(A)].

진료형태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입원 69.2%, 외래 54.4%, 약국 71.6%로, 2019년에 비해 약국은 0.5%p 증가했으며, 입원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하였고, 외래는 1.0%p 증가하였다[그림 4-16(B)].

[그림 4-16] 건강보험 보장률(2011~2020년)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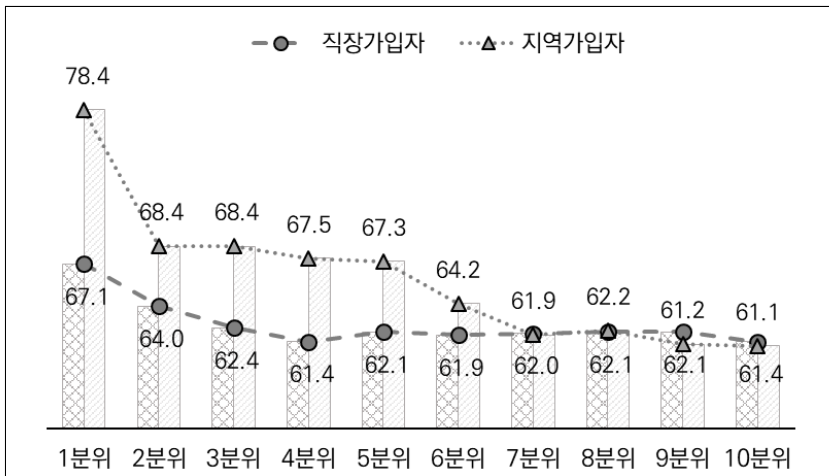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각 소득분위 내에서 발생한 전체 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소득계층 건강보험 보장률 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체 보장률에는 현금급여(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환급금 등)가 포함된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가입자 구분별 수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을 살펴보면, 2020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1분위 67.1%, 2분위 64.0%, 3분위 62.4%, 4분위 61.4%, 5분위 62.1%, 6분위 61.9%, 7분위 62.0%, 8분위 62.1%, 9분위 62.1%, 10분위 61.4%로 1분위에서 가장 높았고 10분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20년 1분위 78.4%, 2~3분위 68.4%, 4분위 67.5%, 5분위 67.3%, 6분위 64.2%, 7분위 61.9%, 8분위 62.2%, 9분위 61.2%, 10분위 61.1%였다.

[그림 4-17]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2020년)

(단위: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의 통계표를 인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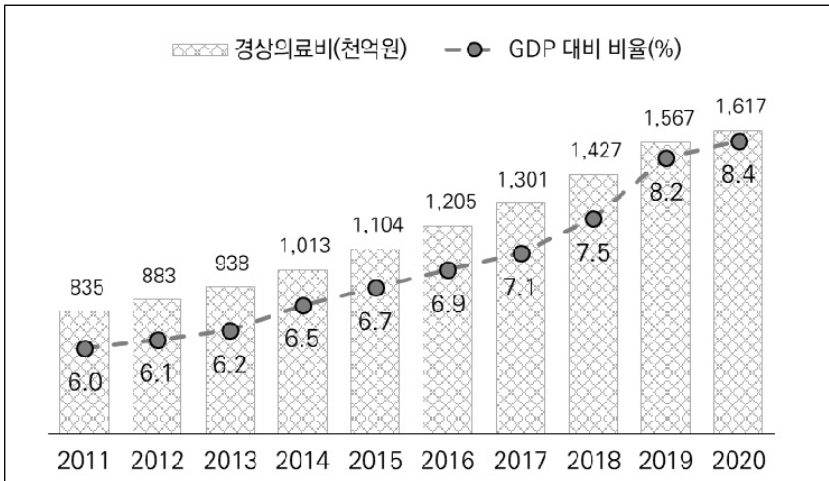
### 3.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 ( 경상의료비 총액 / 국내총생산 ) × 100
-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
- 자료원: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국내총생산 대비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한다. 2020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8.4%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한 수준이며, 2011년 6.0%에서 지속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은 3.4%였다 ([그림 4-18] 참고).

[그림 4-18]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2011~2020년)

(단위: 천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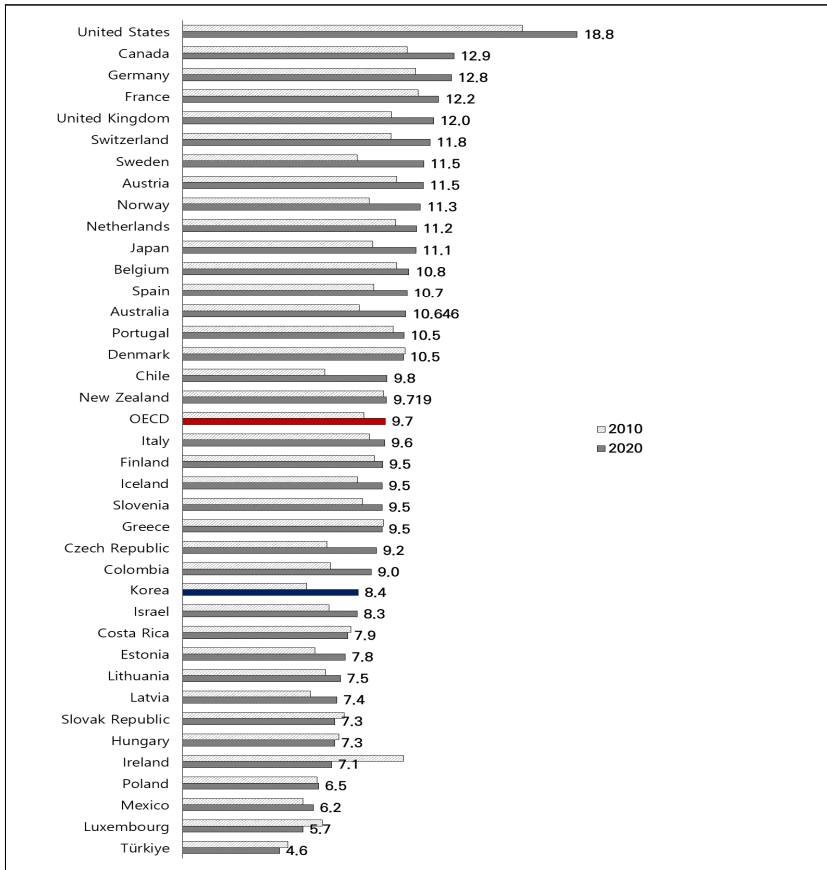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9.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4&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OECD 국가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20년 평균 9.7%였으며, 한국(8.4%)은 OECD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38개국 중 26위였다. 한국은 2010년 대비 2020년 비중이 2.45%p 증가하여 스웨덴(3.18%p), 칠레(2.98%p), 미국(2.62%p) 다음으로 많이 증가하였다[그림4-19].

[그림 4-19]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국제 비교

(단위: %)



주: 결측값은 인접 연도로 대체, OECD 값은 2020년(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2022c).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2022.10.26.)

#### 4.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 ( 가계직접부담 금액 / 경상의료비 총액 ) × 100
- 경상의료비: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
- 자료원: 「국민보건계정」, 보건복지부

‘가계직접부담(Private Household Out-of-pocket Expenditure)’은 가계가 의료를 이용하는 단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지불액을 의미하며, ‘보험급여가 되는 항목에 대한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정현성 외, 2021, p.33). 경제총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본으로 가계(동향)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등 다양한 서베이 데이터를 혼합하여 추정하고 있다(고경환 외, 2018).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20년 27.7%로 2011년 34.1% 대비 감소 추세에 있다. 경상의료비 총액은 2011년부터 2020년간 연평균 6.8% 증가하였으나, 가계직접부담 비용은 연평균 4.6% 증가하여 그 비중이 감소하였다(〈표 4-2〉, [그림 4-20]).

OECD 국가의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20년 평균 18.1%였다. 한국(27.8%)은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38개 국가 중 7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2010년 대비 2020년 OECD 평균은 20.3%에서 18.1%로 2.19%p 감소한 반면, 한국은 34.0%에서 27.8%로 6.27%p 감소하였다[그림 4-21].

〈표 4-2〉 경상의료비 재원별 추이(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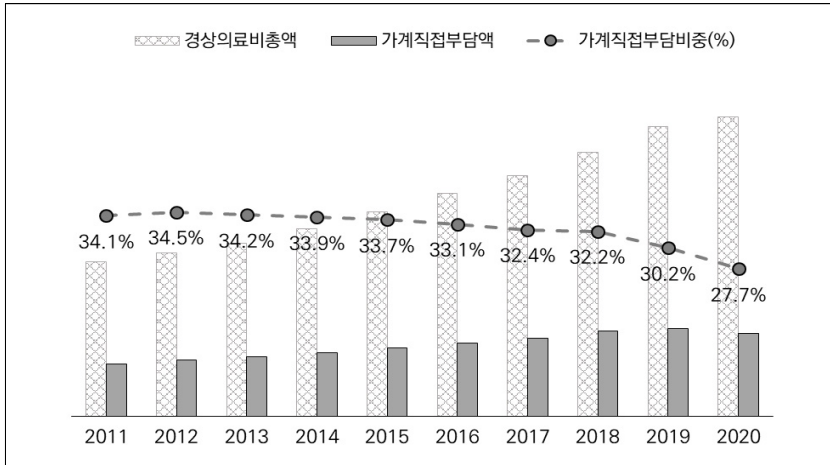
(단위: 천억 원, %)

연도	(All HF) 재원별 합계	(HF.1) 정부·의무 가입제도	(HF.2) 임의가입제도	(HF.3) 가계직접부담	(All HF/HF.3) 가계직접부담 비중
2011	834.5	501.0	48.6	284.9	34.1%
2012	883.2	522.2	55.9	305.1	34.5%
2013	937.8	554.4	62.4	321.0	34.2%
2014	1,012.6	595.5	73.7	343.3	33.9%
2015	1,103.9	649.7	82.7	371.5	33.7%
2016	1,204.6	710.6	95.3	398.7	33.1%
2017	1,300.7	775.1	103.8	421.8	32.4%
2018	1,427.4	857.4	109.8	460.3	32.2%
2019	1,566.7	955.4	137.5	473.9	30.2%
2020	1,616.9	1,011.7	156.5	448.7	27.7%
연평균 증가율	6.8%	7.3%	12.4%	4.6%	-2.1%

자료: 통계청. (2022.9.6.). 기능별-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그림 4-20〕 경상의료비 재원별 추이(201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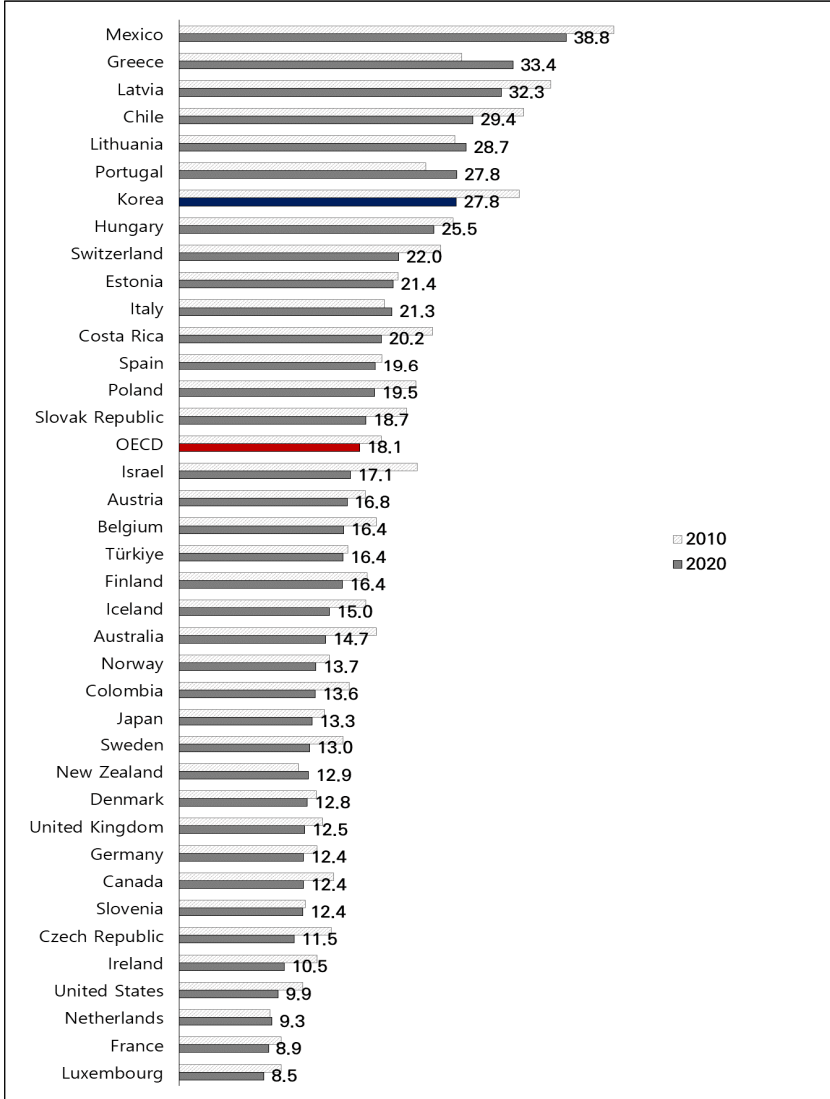
(단위: 천억원, %)



자료: 통계청. (2022.9.6.). 기능별-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그림 4-21]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국제 비교

(단위: %)



주: 결측값은 인접 연도로 대체, OECD 값은 2020년(혹은 인접 연도) 통계가 있는 38개국 평균.  
 자료: OECD. (2022c).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9> 2022.10.26.

## 5.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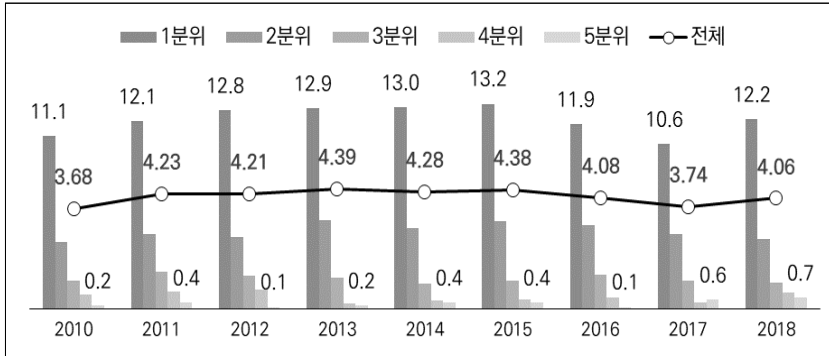
- 재난적 의료비 = 가계지출의료비 / 생활비(가계총소비지출=식료품비) × 100
- 자료원: 「한국의료패널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일정 수준(40%)을 넘어가게 될 경우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손실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은 2018년 4.06%로 2010년 3.68% 대비 2013년 4.39% 및 2015년 4.38%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 3.74%로 소폭 감소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그림 4-22]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2010~2018년)

(단위: %)



-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a). 가구 생활비 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한국의료패널.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7](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7) 에서 2022.10.26. 인출.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b).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한국의료패널.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6](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6)에서 2022.10.26. 인출.



소득수준에 따라 파악하면, 1분위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이 낮았다. 1분위 가구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은 2018년 12.2%로 5분위 0.7% 대비 11.5%p 높은 수준이었다.





# 제5장

## 소득보장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제1절 가계

제2절 소득분배

제3절 경제활동

제4절 정책 수요 및 공급

제5절 주거



## 제 5 장 소득보장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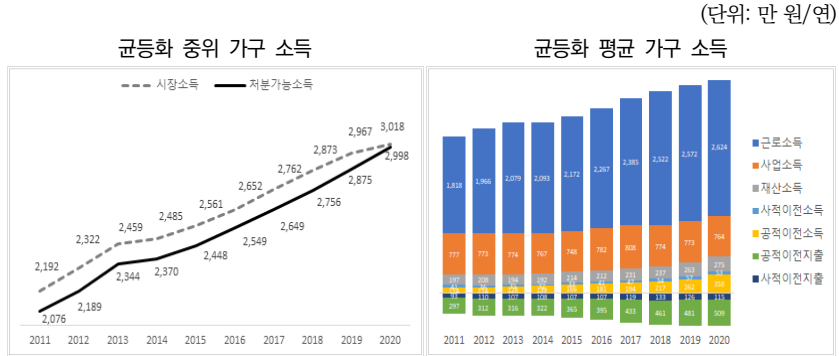
### 제1절 가계

#### 1. 가계소득

[그림 5-1]의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수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1년 가구의 균등화 중위 시장소득은 연간 2,192만 원이었는데, 점차 증가하여 2020년에는 3,018만 원 수준으로 연평균 3.8% 정도씩 증가하였다.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지출과 공적이전소득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연간 2,076만 원에서 2,998만 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하여 시장소득 증가 폭에 비해 다소 크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지출 및 공적이전지출 수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로소득은 2011년 1,818만 원에서 2020년 2,624만 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같은 기간 777만 원에서 764만 원으로 연평균 0.2% 감소하였다. 재산소득은 2011년 197만 원에서 2020년 275만 원으로 연평균 4.0% 증가, 사적이전소득은 41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였는데, 공적이전소득은 같은 기간 114만 원에서 358만 원으로 연평균 21.4%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2020년에 확대된 재정지원이 반영된 것이다. 공적이전지출은 2011년 297만 원에서 2020년 509만 원으로 연평균 7.1% 증가, 사적이전지출은 같은 기간 93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하였다.

[그림 5-1] 2010년대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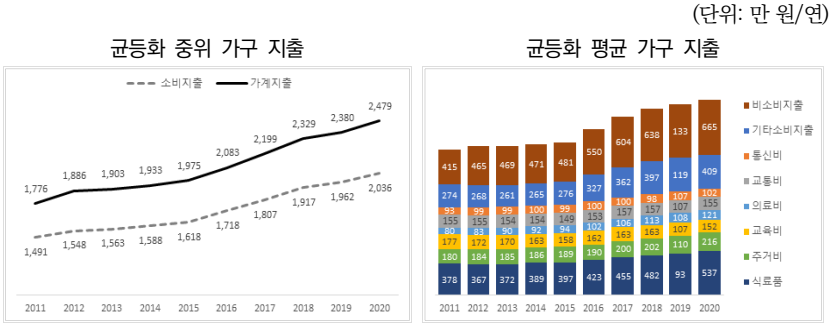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12.1.).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2)에서 2022.12.23. 인출.

## 2. 가계 지출

[그림 5-2]의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 가구 지출 수준의 추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가구의 2011년 균등화한 가계지출 중위값은 연간 1,776만 원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연간 2,479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서 비소비지출을 감한 소비지출은 같은 시기에 연간 1,491만 원에서 2,036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가계의 지출을 구성하는 요소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에서 외식을 포함하는 식료품비는 2011년 378만 원에서 2020년 537만 원으로, 주거비는 180만 원에서 216만 원으로, 의료비는 80만 원에서 121만 원으로, 기타소비지출은 274만 원에서 409만 원으로, 비소비지출은 415만 원에서 665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통신비는 2011년 93만 원에서 2020년 102만 원으로 다른 요소에 비해 조금 증가하였고, 교통비는 지난 10년 동안 평균 155만 원 내외에서 유지되었다. 보육료를 포함하는 교육비는 177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5-2] 2010년대 가구 지출



주: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균등화하여 가구규모에 의한 효과를 통제함.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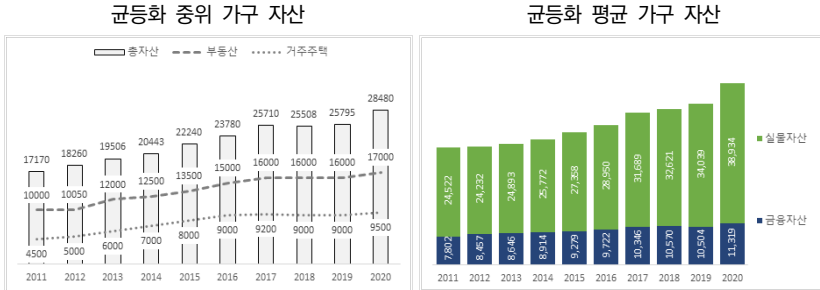
### 3. 가계 자산

[그림 5-3]의 왼쪽 그림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가구 자산 수준의 추이를 도식화하고 있다. 가계 총자산의 균등화한 중위값은 2011년 1억 7,170만 원에서 연도에 따라 점차 증가해 2020년 2억 8,48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균등화한 중위값은 같은 시기에 1억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부동산 중에서도 거주주택의 균등화한 중위값은 2011년 4,500만 원에서 2020년 9,5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오른쪽 그림에서는 자산을 구성하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으로 구분하여 평균 가구 자산액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균등화한 평균 금융자산은 2011년 7,802만 원에서 2020년 1억 1,319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실물자산은 같은 시기 2억 4,522만 원에서 3억 8,934만 원으로 그 증가폭이 금융자산의 증가폭에 비해 크다. 거주주택 등 부동산 자산액이 증가한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3] 2010년대 가구 자산

(단위: 만 원)



주: 가구원 수의 루트 값으로 균등화하여 가구규모에 의한 효과를 통제함.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4. 가계 부채

[그림 5-4]는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계 부채는 균등화한 중위값과 평균값을 함께 확인하였다. 원자료에 따르면, 부채가 있는 가구가 2011년 65.2%, 2012년 67.0%, 2013년 65.9%, 2014년 64.6%, 2015년 64.6%, 2016년 63.5%, 2017년 64.1%, 2018년 63.8%, 2019년 63.7%, 2020년 63.6%로 추정되어, 부채가 없어 부채의 실제값이 0인 가구가 35%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가구 부채 중위값은 2011년 750만 원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 1,700만 원 수준에 이른다. 연간 약 1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이다. 반면, 가구 부채 평균값은 2011년 5,450만 원에서 2020년 8,801만 원으로 증가하여, 연간 약 5.5%의 증가율을 보였다. 가구 부채의 중위값에 비해 평균값이 높은 것은, 특정 가구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부채액의 규모가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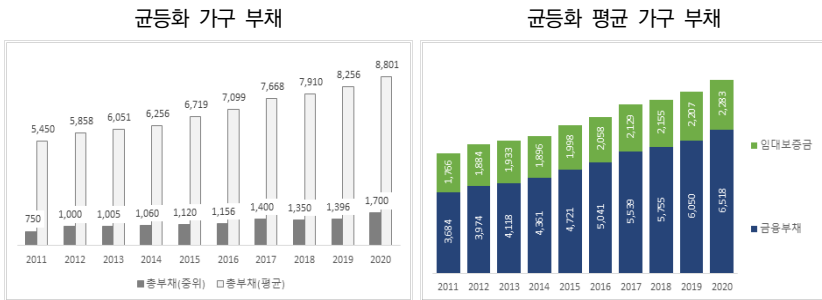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평균 가구 부채를 구성하



는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으로 구분하면, 평균 금융부채는 2011년 3,684만 원에서 점차 증가해 2020년 6,518만 원에 이른다. 연평균 증가율은 약 6.6%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은 2011년 1,766만 원에서 2020년 2,283만 원으로 연평균 약 3% 정도 증가하였다.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에 비해 금융부채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거주주택 마련이나 자산 증식 등 가구 부채의 요인이 다양해진 현상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림 5-4] 2010년대 가구 부채

(단위: 만 원)



주: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하여 가구규모에 의한 효과를 통제함. 가구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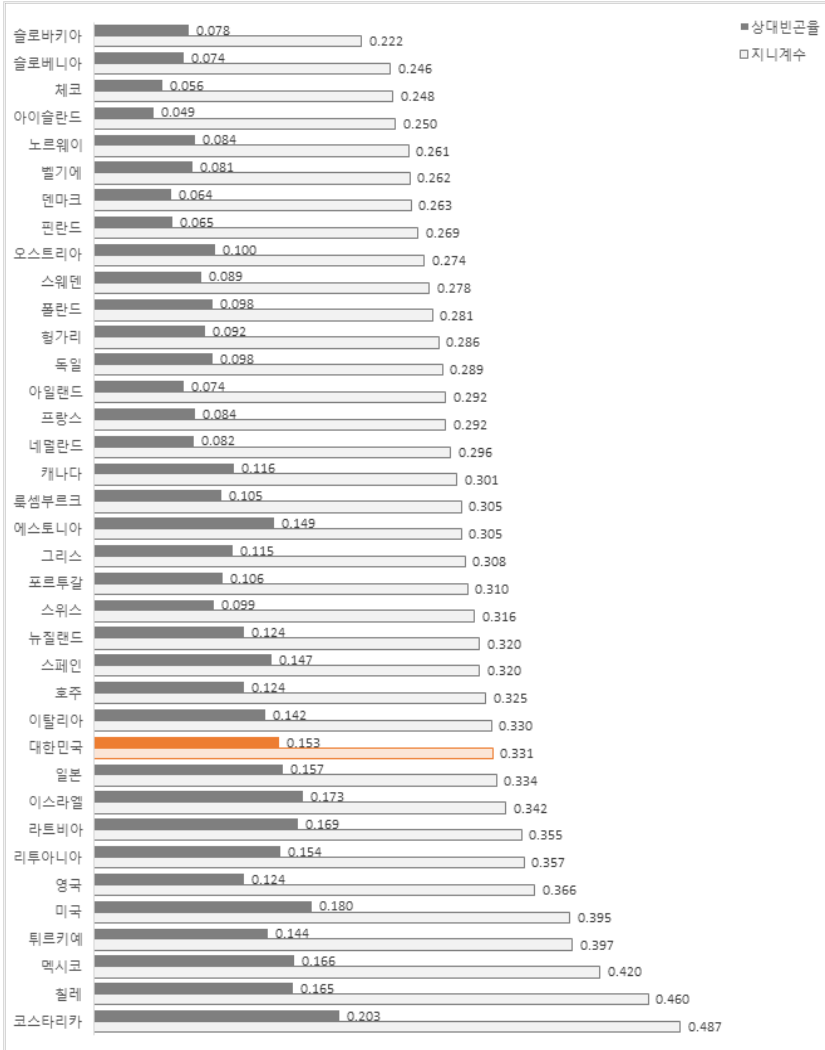
## 제2절 소득분배

### 1. 빈곤과 불평등 국제비교

최근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15.3%로 37개 국가 중 9번째로 높다. 지니계수는 0.331로 11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와의 비교 관점에서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림 5-5] OECD 가입국의 빈곤과 불평등

(단위: ×100=%)



주: 2017~2021년 중 가장 최근 유효값임. 빈곤은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하는 상대빈곤율임. 조세부담 및 공적이전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임. 지니계수로 측정하는 불평등을 기준으로 내림차순함.

자료: OECD. (2022d).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2.8.22.

빈곤율과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등 구소련연방 붕괴 이후 형성된 중동부 유럽 국가들이다. 노르웨이와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빈곤과 불평등 또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시리아 내전과 인플레이션 등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에 이어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의 빈곤과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 2. 빈곤 및 불평등

빈곤율 =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 수 / 전체 인구수) × 100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시장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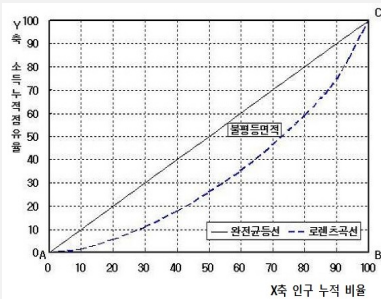
- 빈곤선: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50%

빈곤 완화 효과 = ((시장소득 빈곤율 -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 시장소득 빈곤율) × 100

지니계수 = 불평등면적 / △ABC

불평등 완화 효과 = {(시장소득 불평등 - 처분가능소득 불평등) / 시장소득 불평등} × 100

자료: e-나라지표. (2022.12.19.). 지니계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에서 2022.12.2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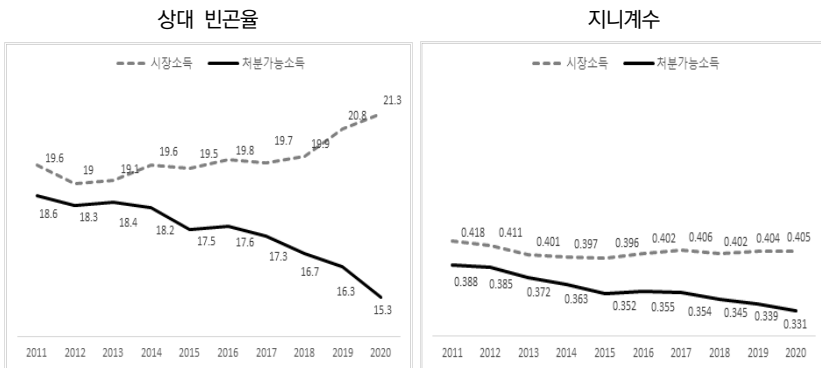
다음 [그림 5-6]은 우리나라의 빈곤과 불평등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왼쪽 그림의 전체 인구 빈곤율은 2011년 19.6%에서 2022년 21.3%로 전반적으로 다소 악화되었다.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특히 저소득층이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공적이전과 조세 부담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18.6%에서 2020년 15.3%로 완화되어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에 있어 소득보장정책의 역할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지니계수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2011년 0.418에서 다소 개선되어 2020년에 0.405에 이른다. 소득보장정책에 의한 공적이전소득과 조세정책의 효과를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0년 0.331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감소폭보다 크게 감소했다. 특히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차이가 공적이전 및 조세의 사회보장정책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라는 점에서 두 종류의 지니계수 간 차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사회보장정책의 역할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6] 2010년대 국내 상대빈곤율 및 지니계수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자료: 통계청. (2022.12.1.).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12)에서 2022.12.23. 인출.

### 3.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

$$\text{연령집단별 빈곤율}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 수}}{\text{전체 해당 연령대 인구수}} \times 100$$

우리나라 0~18세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11년 10.8%에서 2016년 14.6%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소 완화되어, 2020년 12.8%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아동·청소년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12.0%에서 2016년에 15.3%까지 증가하였지만, 점차 완화되어 2020년 9.9% 수준이다. 2018년까지는 공적이전소득 및 공적이전지출이 고려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2019년부터는 역전되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낮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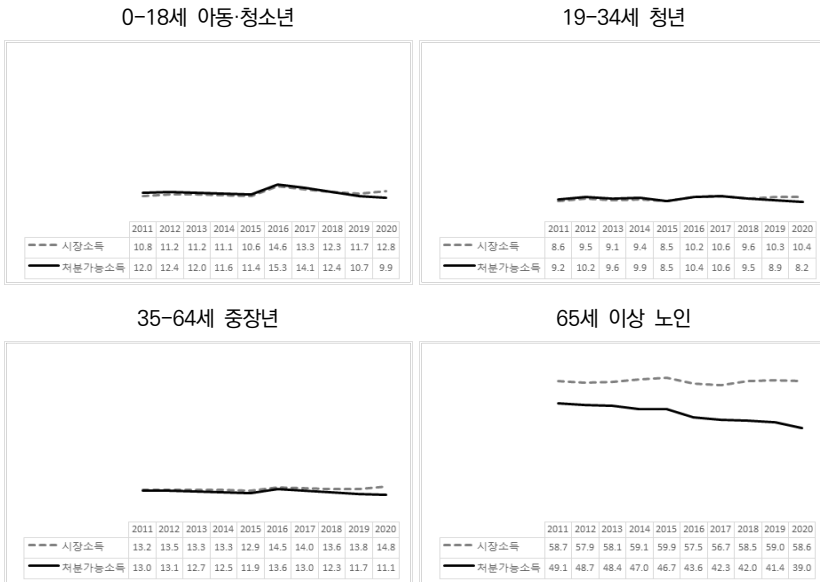
19~34세 청년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8.6%에서 2020년 10.4%로 전반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9.2%에서 2017년 10.6%로 증가했다가, 2020년에는 8.2%로 점차 완화되었다. 아동·청소년 빈곤율과 유사하게 2017년까지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높았다. 2018년부터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낮아져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의 소득보장정책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35~64세 중장년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13.2%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2020년 14.8%로 다소 높아졌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기간 13.0%에서 2016년에 13.6%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여, 2020년에는 11.1%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2010년대 중반까지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약간씩 낮아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에 의한 빈곤율 완화 효과가 존재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2018년부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의 차이가 1%p 이상 나기 시작하면서 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림 5-7] 2010년대 주요 연령집단별 빈곤율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 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수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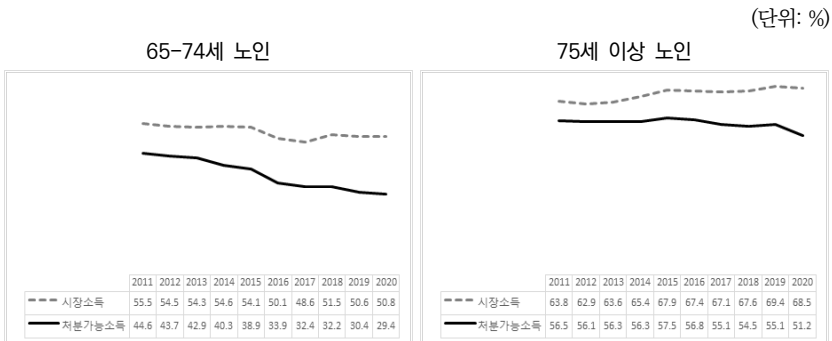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로 악명<sup>4)</sup>이 높은 노인 인구의 시

4) OECD 노인 빈곤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  
 - OECD. (2022d).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에서 2022.8.22.

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8.7%에서 2020년 58.6%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인구의 빈곤율이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감소하였으며,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의 차이, 즉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정책의 빈곤 완화 효과도 점차 확대되었다.

[그림 5-7]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의 빈곤율이 높다. 이에 다음 [그림 5-8]에 65~74세 초기 노인과 75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을 각각 제시하였다. 65~74세 노인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5.5% 수준에서 점차 감소해 2017년에 48.6%까지 감소했다가, 2018년에 다소 증가하여 2020년에는 50.8%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점차 감소하여 2011년 44.6%에서 2020년 29.4%로 30% 이하 수준을 보여 공적이전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8] 2010년대 노인 연령집단별 빈곤율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반면, 75세 이상 노인 집단의 빈곤율은 초기 노인의 빈곤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0년 63.8%이다. 7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지난 10년 동안 다소의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하여, 2020년에는 68.5%에 이르러 후기 노인 10명 중 약 7명이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6.5%에서 2019년 55.1%까지 55~57% 범위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 51.2%로 전년 대비 3.9%p 감소하여, 공적이전의 빈곤 완화 효과가 다소 확대되었다.

#### 4. 주요 인구 집단 및 가구 유형별 빈곤

$$\text{유형별 빈곤율} = \frac{\text{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가구의 해당 유형 가구원 수}}{\text{전체 해당 유형 인구수}} \times 100$$

[그림 5-9]에 주요 인구 집단과 가구 유형에 따른 빈곤율 추세를 제시하였다. 우선, 노인가구는 가구원이 모두 65세 이상인 가구이다. 2011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79.0%에 달하였으며, 2015년까지 8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6년 76.7%로 약간 감소한 이후 등락을 보이다가, 최근 시점인 2020년에는 75.6%를 보였다. 공적이전소득 및 지출이 고려된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은 2011년 67.1%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노인 가구 가구원 10명 중 7명 정도가 빈곤한 수준이었다. 2013년까지 68%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부터 약간씩 감소하여 2020년에는 52.3%로 감소하였다.

1인 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로 정의하였다. 1인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2.4%로 거의 절반 정도가 빈곤한 것으로 나



타났다. 2020년까지 약간의 등락을 보였으나, 2020년 최근에는 55.7%로 2011 대비 약간 증가하였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50.3%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약 2.1%p 차이에 불과했다. 이후 50% 내외를 유지하다가 2020년에는 47.2%로 약간 감소하여,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8.5%p 정도의 차이를 보여,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완화 효과가 다소 확대되었다.

장애인가구는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이다. 장애인 가구 가구원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41.2% 수준이었고, 약간씩 감소하여 2016년에는 35.9%로 낮아졌지만, 다시 증가하여 2020년 최근에는 41.7% 수준이었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시기에 35.6%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6년에는 29.1%로 줄어들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하였지만, 2020년에 다시 다소 감소하여 28.5% 수준을 나타내었다.

등록장애인 개인의 빈곤율은 가구원 빈곤율에 비해 높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2012년부터 확인하면,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3.5%로 등록장애인 2명 중 1명 정도가 빈곤하다.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54.7%에 이른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2년 47.0%였다가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40.3%로 줄었다가, 2019년까지 소폭 증가한 이후 2020년에 다시 39.5%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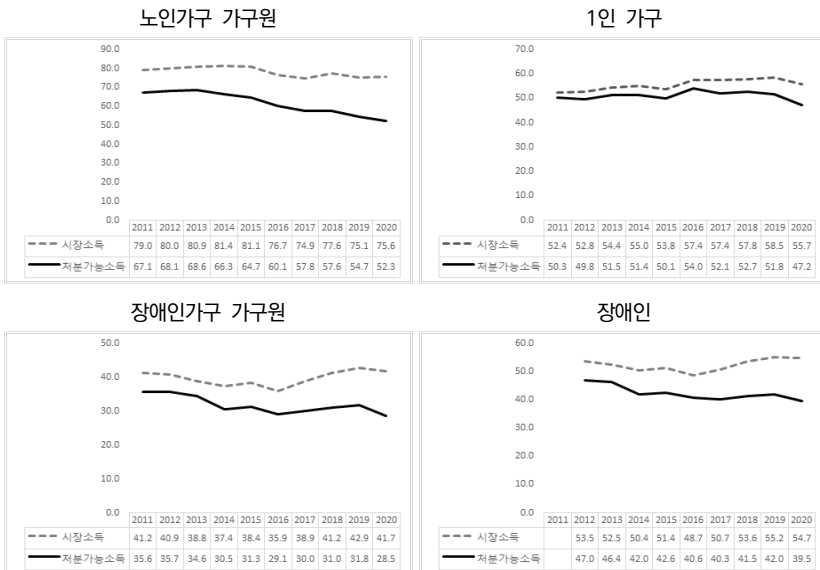
한부모가구 가구원은 부모가 1명이고 18세 미만 미혼자녀 1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이다. 이들의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38.0%에서 오히려 증가해 2018년에는 47.7%에 이르렀다. 이후 다소 감소하여 2020년에는 39.7% 수준을 나타내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2011년 36.7%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에 비해 불과 1.3%p 작은 수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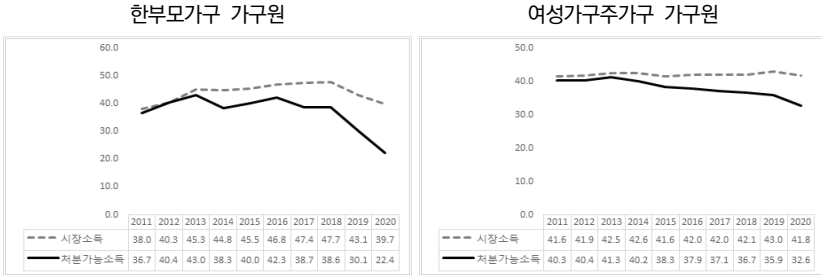
었다. 2013년까지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이 소폭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20년 기준 빈곤율은 22.4%로 줄었다. 이는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대비 17.3%p 정도 낮은 수준으로, 한부모가구 빈곤율을 완화하는 데에 공적이전 소득 및 지출에 의한 소득재분배 기제가 일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주 성별이 여성인 여성가구주 가구 가구원의 빈곤율을 확인하였다. 2011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41.6%로 나타났는데, 지난 10년 동안 등락을 보였으나 2020년 기준 41.8%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은 같은 기간 40.3%에서 32.6%로 감소하여, 공적이전소득과 지출의 빈곤율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9] 2010년대 주요 인구 및 가구 유형별 빈곤율

(단위: %)





주: 상대 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이 균등화된 중위 처분가능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해당 연령대 가구원을 빈곤 인구로 정의함. 통계청 소득분배지표에 의한 2011~2015년 원자료는 행정자료가 보완된 미공개 자료이므로, 조사자료에 의한 공개 자료를 분석한 상기의 결과는 통계청에 의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 제3절 경제활동

#### 1. 근로빈곤

$$\text{근로빈곤율} = \frac{\text{가구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15-64세 취업 인구수}}{\text{15-64세 취업 인구수}} \times 100$$

- 가구 소득: 가구원 수의 루트값으로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 빈곤선: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60%
- 취업 인구: 조사 시점에 고용 상태에 있는 인구(무급가족종사자 포함)

근로빈곤은 일하지만 빈곤한 상태를 뜻하고, 근로빈곤율은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분 가능한 가구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근로빈곤율을 공식적으로 혹은 정기적으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기관은 없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빈곤과 근로빈곤율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조작적 정의도 찾아보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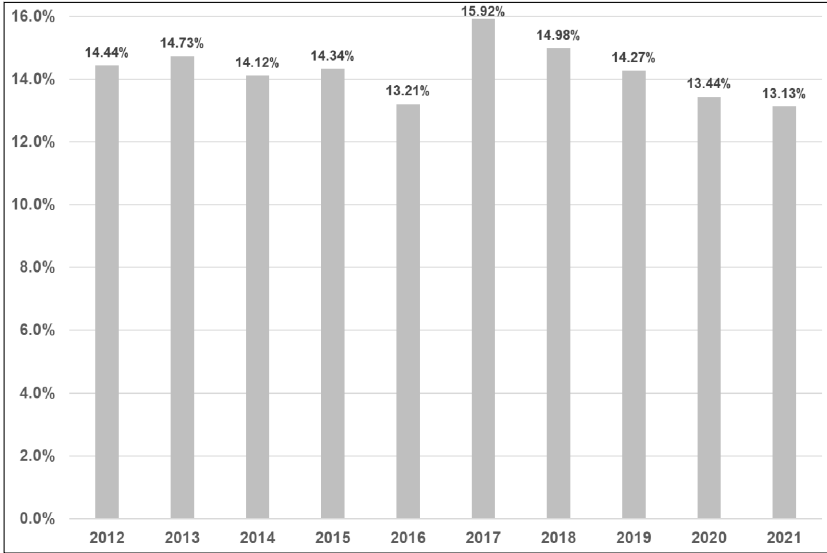
근로빈곤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개념 정의는 유

럽연합(European Union)의 조작적 정의다. 이 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을 겪는 사람은 취업 상태에 있으면서 가구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때 취업 여부는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고용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빈곤선은 해당 국가의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60%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령 측면에서 분석 대상은 15~64세로 제한한다(Peña-Casas, Ghailani, Spasova, & Vanhercke, 2019).

현재 국내에는 유럽연합의 근로빈곤 개념을 적용하여 근로빈곤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데이터는 활용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 시점에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율을 추정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다. 국내 대부분의 연구가 빈곤선으로 균등화한 소득 중위값의 50%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근로빈곤은 일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빈곤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하는 것, 즉 노동시장에 참여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구의 규모를 적극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정의처럼 균등화한 처분가능소득 중위값의 60%를 빈곤선으로 이용한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근로빈곤율은 14.44%를 나타낸 후, 2015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6년에는 1%p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하여 13.21%를 기록했지만, 2017년에는 반대로 2.7%p 이상 증가하여 15.92%를 나타냈다. 이후 2021년까지 꾸준히 하락하여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13.44%와 13.13%로 집계되었다.

[그림 5-10] 근로빈곤율 추이(2012~2021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각 연도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하여 추정함.

## 2. 저임금근로자

$$\text{저임금근로자 비율} = \frac{\text{월 임금 중위값의 2/3 미만 임금근로자 수}}{\text{전체 임금근로자 수}} \times 100$$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월 임금 중위값 2/3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2013년 24.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 2017년에 22.3%를 나타낸 후, 2018년에는 19%를 기록해 10%대로 낮아졌다.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17%와 16%로 집계되었고, 2021년에는 15.6%까지 낮아졌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격차는 크다. 남성 저임금근로자 비율

은 2012년 16.5%에서 2021년 10.2%로 줄어든 반면, 여성의 경우 2012년 37.3%였던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2018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2021년에는 그 수치가 24.3%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남성과 비교하면 2.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표 5-1〉 저임금근로자 비율 추이(2012~2021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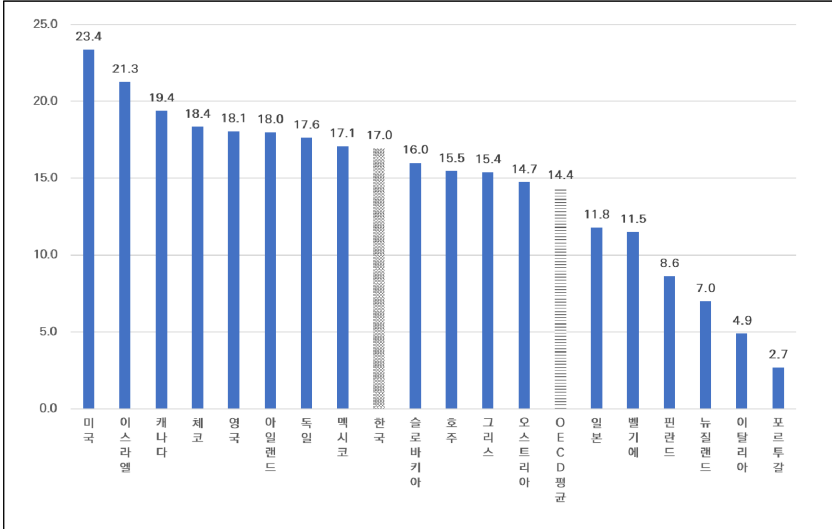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23.9	24.7	23.7	23.5	23.5	22.3	19.0	17.0	16.0	15.6
남성	16.5	16.6	15.4	15.2	15.3	14.3	12.1	11.1	10.5	10.2
여성	37.3	38.9	37.8	37.6	37.2	35.3	30.0	26.1	24.7	24.3

자료: OECD. (2022e).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2.10.30.

최근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지만,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율 평균은 14.4%였지만, 우리나라는 17.0%를 나타내 평균보다 2.6%p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는 미국(23.4%), 캐나다(19.4%), 영국(18.1%), 아일랜드(18.0%) 등 영미권 국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1] OECD 주요 국가 저임금근로자 비율(2019년)

(단위: %)



자료: OECD. (2022e).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2.10.30.

### 3. 장기실업

$$\text{장기실업률} = (\text{1년 이상 실업자} / \text{전체 실업자}) \times 100$$

장기실업률은 전체 실업자들 가운데 1년 이상 실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12년 0.3%를 기록한 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1.4%까지 올랐다. 이후 2019년과 2020년에는 1% 미만으로 다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상승하여 1.2%로 집계되었다.

국제 비교는 우리나라의 공식 장기실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2012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장기실업률은 28.4%이고, 회원국

대부분이 20%를 넘는 장기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터키, 독일, 일본은 30%대를 나타내고, 이탈리아는 58%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장기실업률은 1.2%를 나타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10% 미만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 멕시코, 이스라엘 3개국뿐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장기실업률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공식 통계에 장기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대학 졸업 후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규모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 일반적으로 6개월, 특정 조건의 실업자에게는 최대 8개월까지만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지적할 수 있다. 실업급여 최대 지급 기간이 8개월 미만이므로 그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실업자 관리와 추적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장기실업자 관련 통계의 정확도 역시 낮아지는 것이다.

공식적인 장기실업률이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는 장기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지표로 인해 마치 장기실업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켜 장기실업자가 더 취약한 상황을 겪도록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장기실업률 지표와 그 집계 방식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데이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요청된다.

〈표 5-2〉 장기실업률 추이(2012~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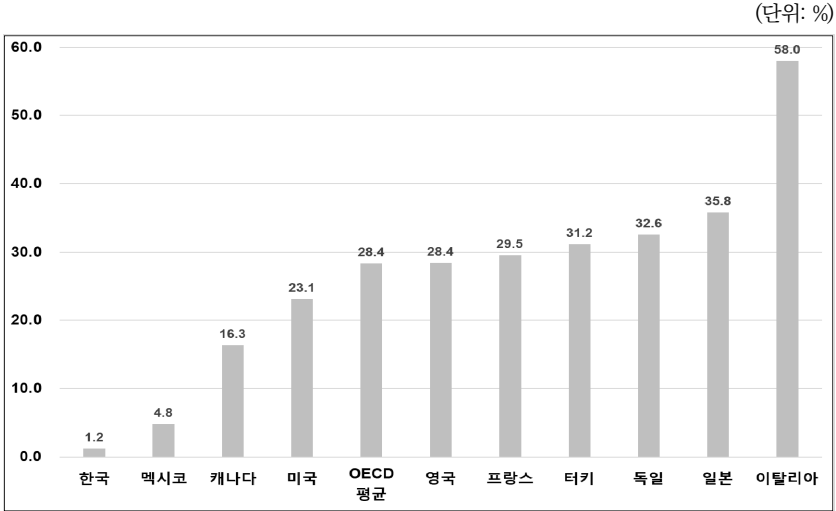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0.3	0.4	0.2	0.4	0.9	1.3	1.4	0.9	0.6	1.2

자료: OECD. (2022f).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 2022.10.30.



[그림 5-12] OECD 주요 국가 장기실업률(2021년)



자료: OECD. (2022f).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 2022.10.30.

## 제4절 정책 수요 및 공급

###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급여 기준을 정하는 지표이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7.29.).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심의와 의결을 통해 매년 7월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부터

정해졌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표 5-3>과 같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부터 지속해서 인상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5,121,080원(4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5.02% 증가하였다. 이는 역대 전년도 대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코로나19 상황과 이로 인한 경제상황을 감안해 인상된 것으로 보인다.

<표 5-3> 기준 중위소득 추이(2015~2022년)

(단위: 원/월)

연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15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016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2017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2018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2019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202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021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022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자료: e-나라지표. (2022.8.1.).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에서 2022.11.21.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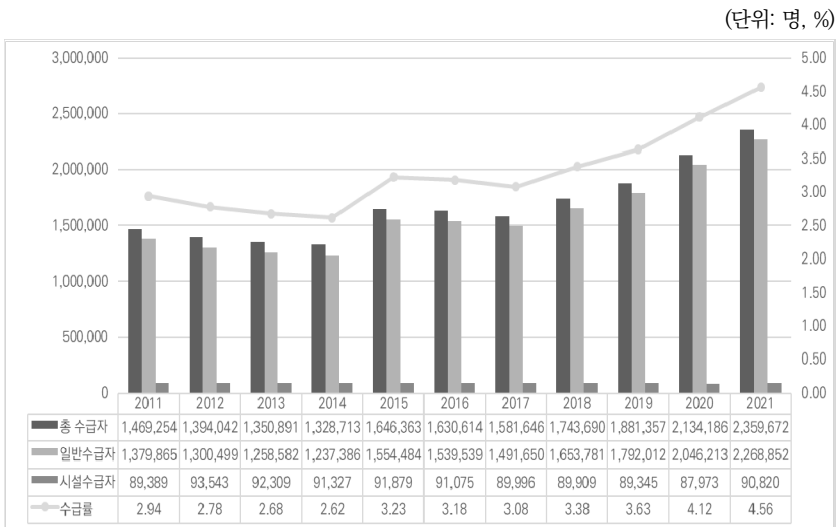
## 2.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수급자로서 일반 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의 합
-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전 국민 인구수) × 1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2000년부터 도입된 공공부조 제도이다(e-나라지표, 2022). [그림 5-13]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수급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도 말부터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으로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증가했다. 이후 증가 추세는 2017년도까지 완화추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부터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빈곤층 규모의 증가로도 볼 수 있지만, 2017년도 말부터 진행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5-1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자료: 1) 통계청. (2022.7.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 시설)- 시도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13)에서 2022.10.28. 인출.

2) e-나라지표. (20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에서 2022.10.2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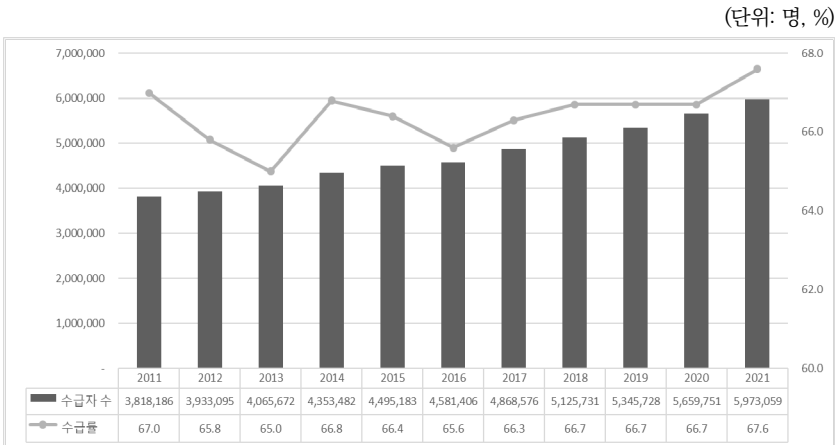
## 나. 기초연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
-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노인인구 ÷ 기초(노령) 연금 수급자) × 100
- 65세 이상 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및 거주불명자) 현황 기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22a).

[그림 5-14]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률을 보여준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인 2011년~2013년에 수급자 수는 증가 추세였지만, 수급률은 67.0%(2011년)에서 65.0%(2013년)로 감소했다. 그 다음해 2014년도부터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수급자 수와 수급률이 증가했으며,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급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5-1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 추이(2011~2021년)



자료: 1) 2011년도: 보건복지부. (2012). 2011 보건복지 통계 연보. 보건복지부. p.382.

2) 2012~2021년도: 보건복지부. (2021b). 2021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p.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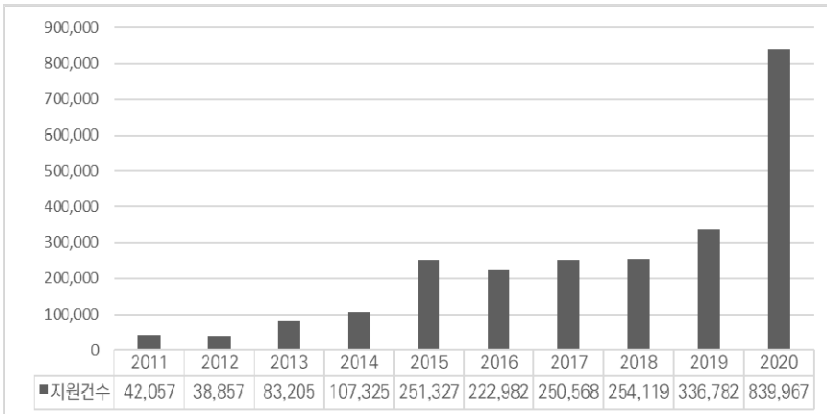
## 다.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 및 장제비 등)에 대한 지원  
횟수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림 5-15]의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 초기에는 지원 건수가 낮았으나, 2014년 107,325건에서 2015년에 251,32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수급률의 증감이 반복하다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경제 침체의 여파로 2019년 약 34만 건에서 2020년 약 84만 건으로 지원 건수가 급증하였다.

[그림 5-15] 긴급복지지원 지원 건수 추이(2011~2020년)

(단위: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2021b). 2021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p.401.

## 라. 공적연금

- 연금별 수급자 수 = 각 연금의 노령/장애/유족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 수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 =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 65세 이상 추계 인구)×100

국내 공적연금으로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이 있다. <표 5-4>를 보면, 모든 연금에서 2011년도 대비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자 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은 약 3백만 명(2011년)에서 약 586만 명(2021년)으로 증가했다. 공무원연금도 약 33만 명(2011년)에서 약 60만 명(2021년)으로 증가했으며, 이 외에도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수급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표 5-4> 연금별 수급자 수 추이(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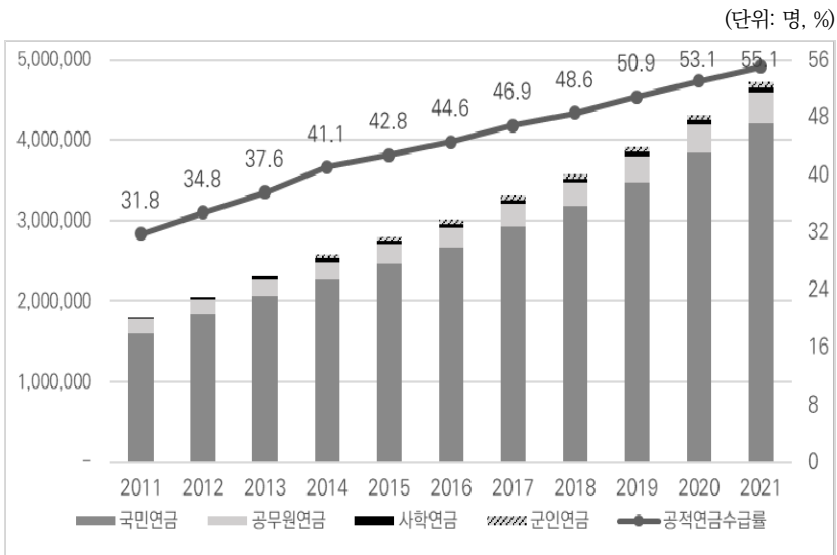
(단위: 명)

연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2011	3,015,244	326,509	40,576	78,103	1,094
2012	3,310,211	348,493	44,357	80,262	1,173
2013	3,440,693	366,482	48,407	82,313	1,256
2014	3,586,805	395,630	53,040	84,565	1,429
2015	3,832,188	426,068	59,059	87,134	1,545
2016	4,135,292	452,942	63,782	89,098	1,652
2017	4,475,143	480,096	69,218	91,071	1,746
2018	4,596,690	506,550	75,914	93,126	1,868
2019	4,961,143	535,992	83,176	95,282	1,986
2020	5,388,022	567,770	90,989	97,153	2,157
2021	5,864,373	599,485	98,730	99,454	-

- 자료: 1) 국민연금공단. (2022). 국민연금 공표 통계(2022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 연금공단. (2022.10.13.). 공무원연금공단 연금 수급자 추이. <https://www.data.go.kr/data/15052972/fileData.do> 에서 2022.10.25. 인출.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2). 2021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p.98.  
 4) 국방부. (2022.8.9.). 군인연금 현황 : 군인연금 수급인원 현황. <https://opendata.mnd.go.kr/openinf/sheetview2.jsp?infId=OA-9534> 에서 2022.10.25. 인출.  
 5) 보건복지부(2021b).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p.420.

[그림 5-16]은 65세 이상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 수와 65세 이상 추계 인구 대비 65세 연금 수급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31.8%에서 2021년 55.1%로 약 24%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수급률의 증가는 국민연금의 수급자 규모의 증가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중이 크진 않지만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5-16]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수 및 수급률(2011~2021년)



주: 1) 각 연금별 노령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임.  
 2) 군인연금은 2014년도부터 포함됨.

자료: 1)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통계표.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A%B3%A0%EB%A0%B9%EC%9E%90](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A%B3%A0%EB%A0%B9%EC%9E%90) 에서 2022.10.28. 인출.  
 2)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통계. 통계청. p.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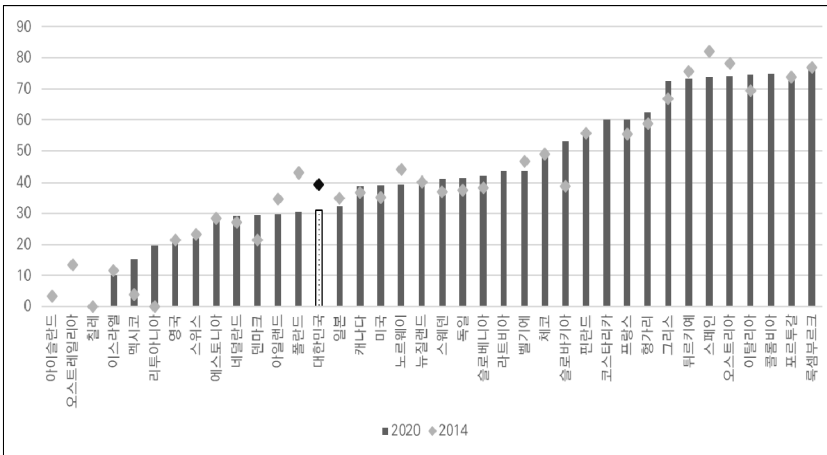
### 3.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의무적 공적 연금액 비율

OECD의 공적연금은 의무적 기초보장(기초연금)과 의무적 소득비례연금(공적, 사적) 중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공적 소득비례연금으로 국민연금이 해당되며, 기초연금은 사회부조로 간주하여 포함되지 않는다(오건호, 2022.2.28.).

[그림 5-17] OECD 공적연금 소득대체율(2014/2020)

(단위: %)



주: 1) 은퇴 전 소득이 평균 수준인 자 기준임.

2) 2014년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는 데이터 없음.

자료: 1) 2014년: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Publishing. p.141.

2) 2020년: OECD. (2021a). Pensions at a Glance 2021. OECD Publishing. p.141.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살펴보기 위해 OECD 회원국 총연금소득대체율(Gross pension replacement rates)을 활용했다. [그림 5-17]은 총연금소득대체율 중 의무적·공적 연금(Mandatory public)만 계산한 소



득대체율이다.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1.2%로 2014년도 소득대체율(39.3%)에 비해 감소했으며,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25위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해당한다. 아울러, OECD 회원국 중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76.6%), 포르투갈(74.9%)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 제5절 주거

###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 (\text{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수} / \text{총 가구 수}) \times 100$$

최저주거기준은 국토교통부 공고인 「최저주거기준」(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5.27., 일부개정)에 따라 가구원 수 및 가구구성에 따라 면적, 침실, 부엌 등 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14㎡의 방 1개에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어야 한다. 2인은 부부 가구, 3인은 부부와 자녀 1명의 가구, 4인 및 5인 가구는 자녀가 1명씩 늘어나는 가구의 형태를 상정하고, 6인은 노부모와 부부 그리고 자녀 2명으로 구성된 가구로 상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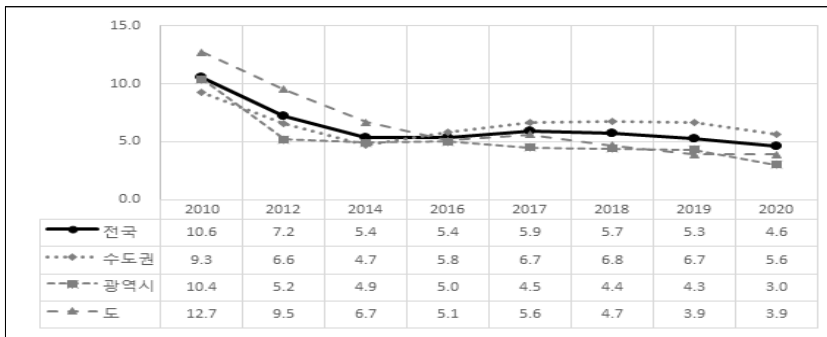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총가구 대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확인하였다. 2010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전국 10.6%로 10가구 중 1가구가 해당하였다. 이 비율은 2014년까지 점차 감소해 5.4%로 줄었지만, 이후 2019년 5.3%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최근 시점인 2020년에는 4.6%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2010년대 초반에는 도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이 가장 높고, 광역시,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는 2014년까지 유지되었는데, 2016년부터는 도 지역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다른 유형에 지역에 비해 감소하였고, 오히려 수도권에서 지표값이 다소 증가하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최근(2020년) 수도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5.6%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3.9%, 광역시가 3.0%로 나타나,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거 여건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8] 2010년대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단위: %)



주: 자료의 원자료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임.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세종시는 2017년까지 충남에, 2018년 이후 광역시에 포함됨. 조사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2년 주기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2a).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4> 에서 2022.10.6. 인출.

## 2. 주택임대료 부담률

$$\text{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 (\text{중위 월 임대료} / \text{중위 월 가구 소득})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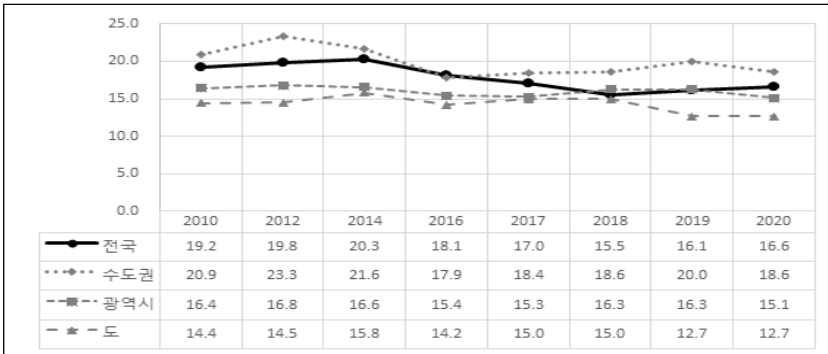
다음 그림에서 보는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ent to Income Ratio, RIR)은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드러내는 대리지표의 수준이다. 주택임대료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다.

2010년 전국 기준 주택임대료 부담률은 19.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이 20.9%로 가장 높고, 광역시가 16.4%, 도 지역이 14.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주택임대료 부담률은 2014년까지 다소 증가해 20.3%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수도권의 주택임대료 부담률은 21.6%로 증가했고, 광역시와 도 지역 역시 2010년 대비 약간씩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주택임대료 부담률이 감소해 전국 기준 18.1%로 낮아졌고, 수도권은 17.9%, 광역시는 15.4%, 도 지역은 14.2% 수준이었다.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최근 기준 전국의 주택임대료 부담률은 16.6% 수준이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특히 도 지역에서 나타난 반면, 그 외 지역, 특히 수도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다시 주택임대료 부담률이 증가하였고, 광역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의 주택임대료 부담 문제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9] 2010년대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부담률

(단위: %)



주: 자료의 원자료는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임.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임. 세종시는 2017년까지 충남에, 2018년 이후 광역시에 포함됨. 조사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는 2년 주기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음.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2b).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5> 에서 2022.10.6. 인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6장

###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 제 6 장 사회서비스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 제1절 사회서비스 수요

#### 1.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text{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 \frac{\text{(영역별) 서비스 이용 가구}}{\text{(영역별) 서비스 필요 가구}} \times 100$$

※ 사회서비스 영역(18개):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기타 성인 돌봄, 출산지원, 보육, 방과 후 돌봄, 신체건강, 정신건강, 재활, 아동교육지원, 성인교육지원, 정보제공, 고용, 직업훈련, 창업지원, 문화 및 여가, 주거지원, 환경

[그림 6-1]은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을 서비스 영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돌봄, 건강, 교육, 고용, 문화, 주거, 환경 분야를 포괄한 18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sup>5)</sup> 필요 대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 영역은 아동 돌봄 및 교육 분야로, 보육이 69.9%로 가장 높으며, 출산지원 58.9%, 방과 후 돌봄 55.3% 순으로 나타났다. 돌봄 분야 중 노인 돌봄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필요 대비 이용률은 각각 49.1%, 39.8%로, 대상별 돌봄 서비스의 욕구 충족률의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무상보육, 온종일 돌봄, 아이돌봄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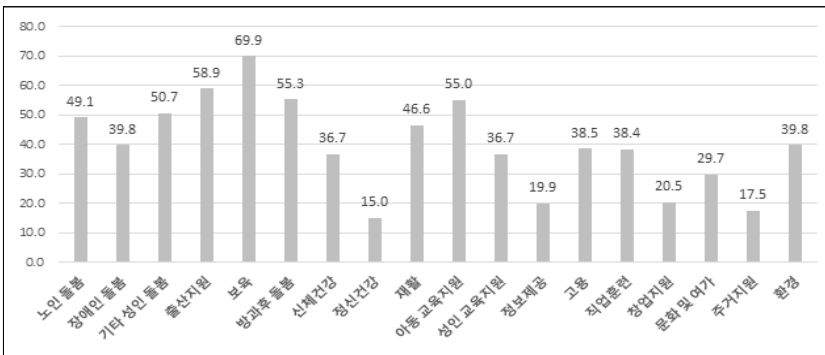
5)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통해 2년 주기로 수요 실태가 조사되지만, 사회서비스 조사 대상 범주의 변동으로 시계열 분석에는 제한이 있다.

스 바우처 등이 도입·확대되면서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공적 돌봄 체계를 강화해 온 정책 성과로 해석된다.

반면, 정신건강, 주거지원, 정보제공 서비스의 경우 20% 미만의 낮은 필요 대비 이용률을 보인다. 이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건강과 주거지원 서비스의 경우 욕구의 위기도는 높으나, 관련 제도와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국가 집중 투자를 통한 보장성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영역이다.

[그림 6-1]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단위: %)



자료: 안수란, 이주민, 서윤경, 김유휘, 어유경, 정세정, 박세경. (2021).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 [그림 3] 재구성.

## 2. 주요 대상별(아동, 노인, 장애인) 학대 피해 발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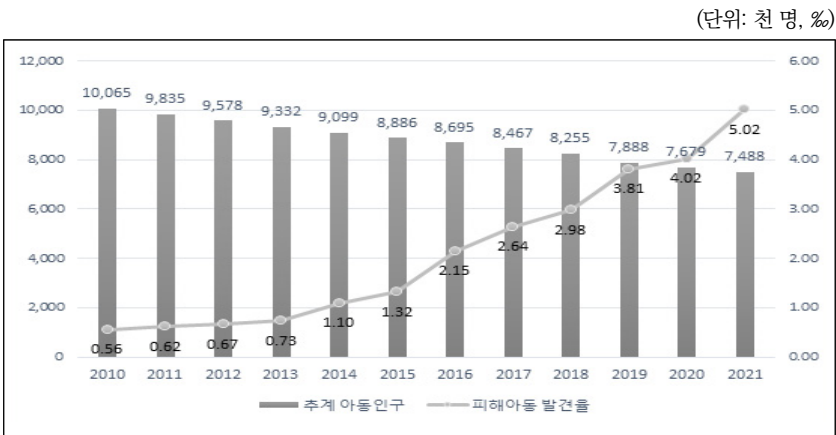
$$\text{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 \frac{\text{만 0~17세 아동학대 판정 피해 아동 수}}{\text{만 0~17세 아동 수}} \times 1,000$$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추계 아동인구(만 0~17세)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정된 피해 아동 수를 의미한다(신정우 외,



2021).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2010년대 이후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은 2010년 0.56%에서 2014년 1.10%, 2016년 2.15%, 2019년 3.81%, 2021년 5.02%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6-2]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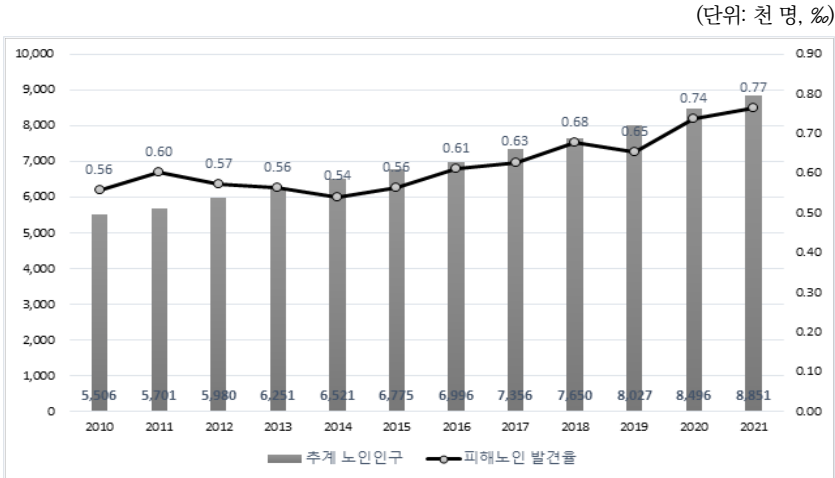


자료: 신정우 외.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p.87의 그림, 통계청. (2022.10.11.). 피해 아동 발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10.23. 인출한 자료 토대로 재구성.

$$\text{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 = \frac{\text{만 65세 이상 학대 판정 피해 노인 수}}{\text{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 \times 1,000$$

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학대로 판정된 피해 노인 수로 산출하였다. 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은 2011년 0.60%에서 2014년 0.54%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 감소하다가 2020년 0.74%로 다시 증가하였다.<sup>6)</sup>

[그림 6-3] 학대 피해 노인 발견율



자료: 통계청. (2022.8.30.).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학대 피해 노인 성별 분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37&vw\\_cd=MT\\_ZTITLE&list\\_id=C\\_8\\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9_H5037&vw_cd=MT_ZTITLE&list_id=C_8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2.10.23.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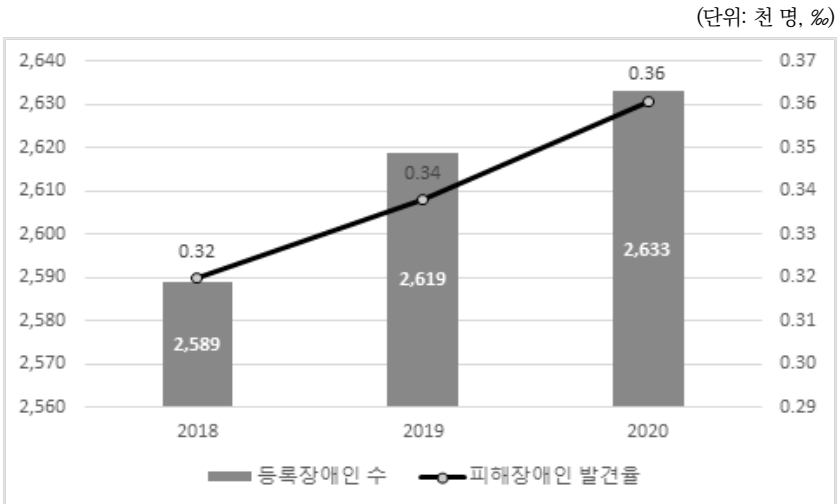
$$\text{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 = \frac{\text{학대 판정 장애인 수}}{\text{등록 장애인 수}} \times 1,000$$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은 등록 장애인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 1,000 명당 학대로 판정된 피해 장애인 수로 산출하였다.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은 2018년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2018년부터 전국 장애인권익옹호 기관에서 장애인학대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장애인 학대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시작되었다. 다만, 학대 피해 장애인 현황은 등록 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도 포함하므로, [그

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에서 노인의 학대 경험률은 노인실태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 수의 비율로 산출된다. 2011년 12.7%에서 2014년 9.9%, 2017년 9.8%로 나타났다(신정우 외, 2021, p.134).

림 6-4)는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학대(전체 학대 건수의 5.8%)를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다.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은 2018년 0.32%에서 매년 0.2% 증가하여 2020년 0.36%로 나타났다.

[그림 6-4] 학대 피해 장애인 발견율



자료: 1) 통계청. (2022.4.25.a). 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MT\\_ZTITLE&list\\_id=G\\_2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MT_ZTITLE&list_id=G_2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에서 2022.10.23. 인출.

2) 통계청. (2022.11.7.). 피해 장애인 주장에 유형.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8\\_C003&vw\\_cd=MT\\_ZTITLE&list\\_id=G\\_002\\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8_C003&vw_cd=MT_ZTITLE&list_id=G_002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2.11.26.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사회 규범의 변화, 인권 의식의 발전과 함께 학대·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 개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김유휘, 최미진, 홍문기, 류진아, 2019), 학대 피해 추이를 살펴보면 대상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의 학대 피해 발견율이 노인과 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은 아동 학대에 대한 비교적 높은 사

회적 관심과, 노인·장애인보다 선제적으로 구축된 아동보호 체계가 더 잘 작동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 3.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 전체 인구 100명당 법정 장애 및 범주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  
 ※ 장애 유형: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은 전체 인구 100명당 법정 장애 유형 및 범주에 해당하는 등록, 미등록 장애인 수로 산출하였다.<sup>7)</sup> 전체 장애출현율은 2011년 5.61%에서 2017년 5.39%로 감소하였다. 장애출현율이 가장 높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로 2011년 2.72%에서 2017년 2.51%로 감소하였다. 장애출현율이 증가하는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2011년 2.28% → 2017년 2.38%), 신장장애(2011년 0.10% → 2017년 0.15%)로 나타났다.

한국의 장애출현율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OECD 국가의 장애출현율은 16세 이상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24.3%로 높다(김현지, 최정원, 김용진, 김태용, 최효임, 2022, p.299). 한국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만 비교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장애출현율이 장애인복지법의 협소한 장애 개념에 따라 의학적 기준의 장애만을 포함하고 있고, 의학적 개념을 넘어선 활동 및 참여제약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조윤화, 서옥영, 2018).

7) 장애출현율은 3년마다 실시되는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해 추정된다. 2020년은 장애인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등록 장애인으로 변동됨에 따라 추정 장애인 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은 시계열 분석의 의미를 희석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애 개념 확대 정책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표 6-1〉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지체장애	2.72	2.71	2.51
뇌병변장애	0.59	0.48	0.52
시각장애	0.51	0.53	0.51
청각장애	0.50	0.50	0.52
언어장애	0.04	0.03	0.03
지적장애	0.28	0.36	0.38
자폐성장애	0.01	0.02	0.03
정신장애	0.23	0.23	0.22
신장장애	0.10	0.12	0.15
심장장애	0.04	0.02	0.01
호흡기장애	0.04	0.03	0.02
간장애	0.02	0.02	0.02
안면장애	0.00	0.01	0.01
장루·요루장애	0.03	0.03	0.03
뇌전증(간질)장애	0.02	0.01	0.02
전체	5.61	5.59	5.39

자료: 통계청. (2022.11.11.).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02&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02&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에서 2022.11.26. 인출.

#### 4.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이동, 주거, 보조기기, 보건 및 의료, 발달재활, 고용·직업재활 등 분야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므로, 하나의 지표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여기서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서비스로 한정하여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을 살펴보았다. 사업별 지원대상이 다르

고 한 명의 장애인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사업별 이용률을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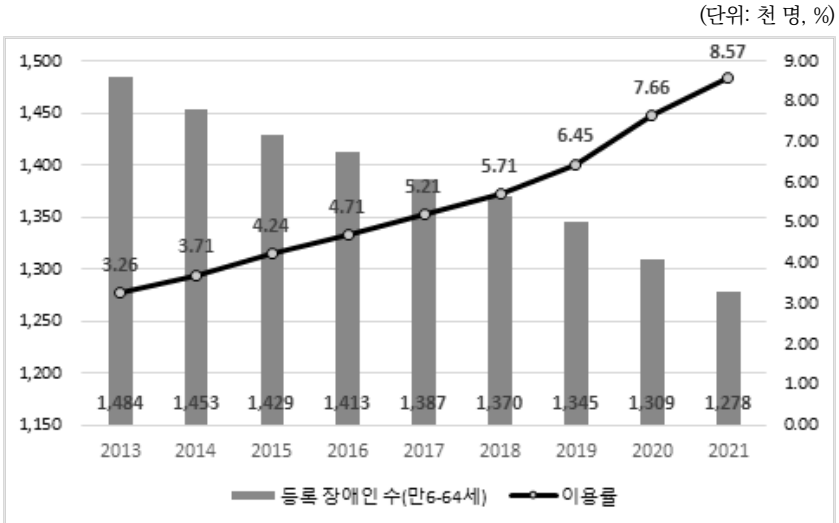
$$\text{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 \frac{\text{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text{만 6~64세 등록 장애인}} \times 100$$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 6~64세 등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단, 장애인이 65세 이상이 되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인 규모에 대한 자료 또는 연령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현황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자료 구득이 어려우므로 대안으로 만 6~64세 등록 장애인을 모수로 활용하였다.<sup>8)</sup>

[그림 6-5]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등록 장애인 수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만 6~64세 등록 장애인 수는 2013년 148만 4천 명에서 2021년 127만 8천 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3.26%에서 2021년 8.57%로 꾸준히 증가한다.

8) 발달재활 서비스와 같이 이용자 수로만 제시할 수도 있음.

[그림 6-5]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률



자료: 통계청. (2022.4.25.a).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 에서 2022.10.23. 인출; 신정우 외.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p.164의 그림; 사회보장정보원. (n.d.). '21년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atistic/view.do?p_sn=15) 에서 2022.10.23. 인출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text{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률} = \frac{\text{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text{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 만 6세 미만 미등록 아동}} \times 100$$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보건복지부, 2022b). 장애 등록이 안 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률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만 6세 미만 미등록 장애인 또는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자료

가 필요하지만, 자료 구득이 어렵다.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중 미등록 장애인이 36.3%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기존 연구(김동일, 이주영, 안예지, 2021)의 결과를 반영하면, 미등록 장애인에 대한 정보 없이 서비스 이용률을 구하는 것은 이용률을 과대 추정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sup>9)</sup> 이에 여기서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등록 장애인 수와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 추이만 제시하였다.

2013년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되는 등록 장애인 수는 6만 8천 명에서 2021년 7만 4천 명으로, 2015년까지는 감소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3년 4만 7천 명에서 2021년 8만 4천 명으로, 2019년 이후 이용자 증가 폭이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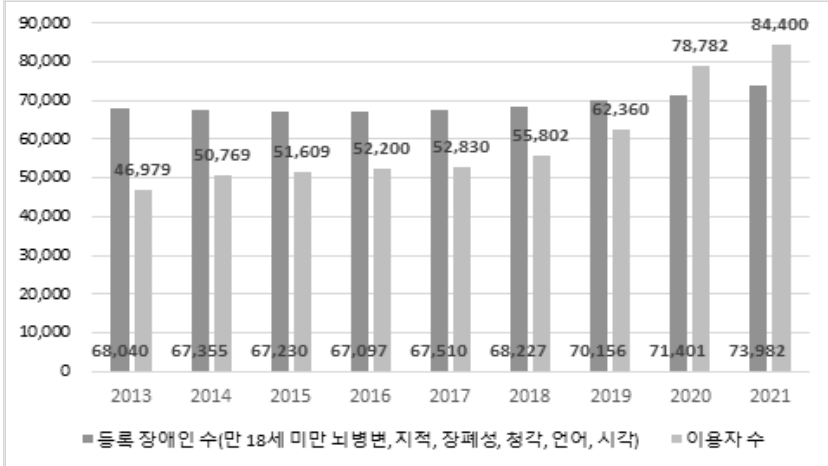
장애인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의 돌봄 체계가 강화되어 가는 정책의 긍정적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사회서비스 필요 대비 이용률 지표와 연계해서 보면,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욕구 충족률이 아동, 노인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어 서비스 포괄성 및 충분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9) 등록 장애인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률을 산출하면, 2020년에 100%를 초과한다.



[그림 6-6]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자 수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2022.4.25.b). 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MT\\_ZTITLE&list\\_id=G\\_2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MT_ZTITLE&list_id=G_2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에서 2022.10.23. 인출; 신정우 외. (2021).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p.164의 그림을 토대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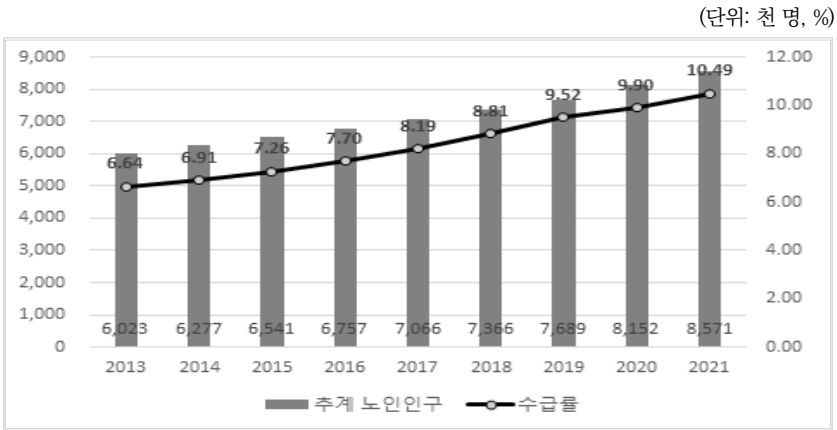
## 5.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text{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 \frac{\text{장기요양급여이용 수급자 수}}{\text{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times 100$$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대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수의 비율로 산출하였다.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인 인구는 2013년 602만 3천 명에서 2021년 857만 1천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수급률은 2013년 6.64%에서 2021년 10.49%로, 노인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 인정점

수 조정을 통한 대상자 확대, 치매 특별등급 도입,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 오면서, 요양의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박종서 외, 2021).

[그림 6-7]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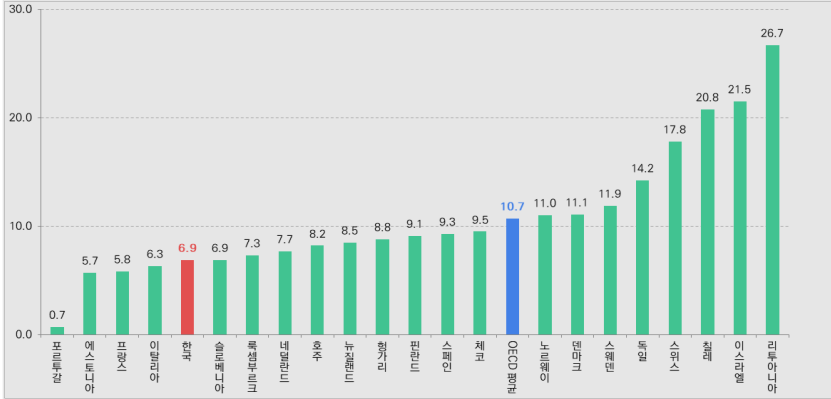


자료: 1) 통계청. (2022.8.23.). 연령별, 자격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3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32) 에서 2022.10.23. 인출.  
 2) 통계청. (2021.12.9.).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BPA00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BPA003) 에서 2022.10.23. 인출.

그러나 최근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의 장기요양 수급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그림 6-8]과 [그림 6-9]는 급여종별 OECD 국가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재가 급여 수급률은 6.9%로, 22개 비교 국가 중 5번째로 낮았으며, 시설 급여 수급률은 2.7%로 26개 비교 국가 중 8번째로 낮았다. 고령화의 가속화와 노년기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향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가 장기요양 수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6-8]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재가), 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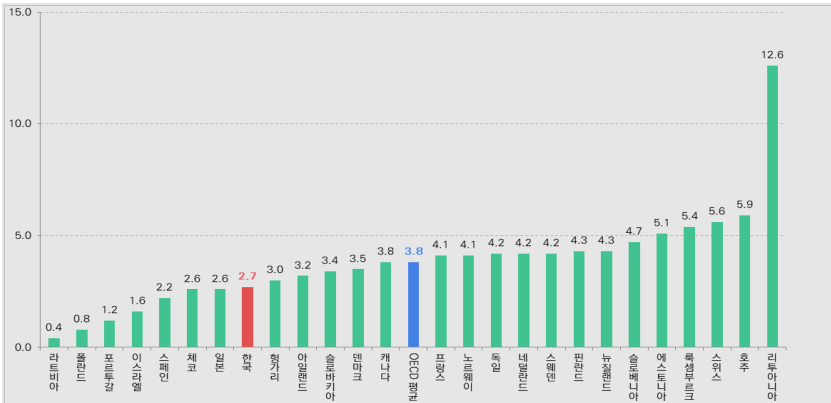


- 주: 1) OECD 평균은 2019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재가 통계를 제출한 22개국 평균임.
- 2) 칠레는 2017년, 네덜란드, 스페인은 2018년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OECD Health Statistics 2021(소책자). <http://doi.org/10.23061/hs2021320>에서 2022.10.26. 인출.

[그림 6-9]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시설), 2019년

(단위: %)



- 주: 1) OECD 평균은 2019년(혹은 인접 과거 연도)에 재가 통계를 제출한 26개국 평균임.
- 2) 네덜란드, 스페인은 2018년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OECD Health Statistics 2021(소책자). <http://doi.org/10.23061/hs2021320>에서 2022.10.26. 인출.

## 제2절 사회서비스 공급

사회서비스 공급 영역의 정책 성과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고려하여 공급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와 지표를 선정하고,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양적으로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2016~2019년)를 토대로 사회서비스산업적 측면에서 성과를 살펴보았다. 질적으로는 지역별 고용조사 원자료(2016~2020년)를 활용하여 종사자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공급 성과 지표 산출을 위한 기준은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Social Service Industrial Special Code, 이하 SSISC)이다. SSISC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관련 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3년 제정안이 마련되었다(통계청, 2013.11.). 현재 공식적 통계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광의의 사회서비스 공급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의미를 지닌다.

〈표 6-2〉는 SSISC의 항목을 대분류 및 중분류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에는 종합 사회서비스업, 돌봄서비스업, 건강지원서비스업,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사회참여지원 서비스업,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의 7개 대분류 항목이 포함된다.<sup>10)</sup>

10) SSISC 대분류 항목별 해당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부록 1]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SSISC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수란, 하태정(2021)이 제안한 수정 분류 체계를 준용한다.

〈표 6-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수정 항목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연번	대분류 항목명	중분류 항목명
1	종합 사회서비스업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그 외 기타 복지서비스업
2	돌봄서비스업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 주거보호서비스업
3	건강지원서비스업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병·의원 공공보건 및 기타 보건업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
4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교육 관련 서비스업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
5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문화 관련 사회서비스업 체육 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업
6	사회참여지원 서비스업	고용지원서비스업
7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사회보장행정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2의 〈표 2-2-2〉 수정.

## 1. 사회서비스산업적 성과

### 가. 사회서비스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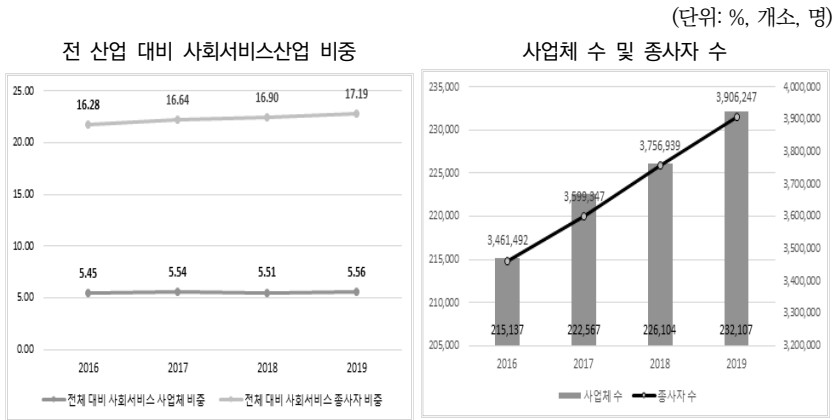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사업체 규모 =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산업 코드 사업체의 합

사회서비스 종사자 규모 = 사회서비스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의 합

[그림 6-10]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서비스산업의 전국 사업체 수는 2016년 21만 5천 개에서 2019년 23만 2천 개로 7.89% 증가하였다. 종사자 수는 2016년 345만 1천 명에서 2019년 390만 6천 명으로 12.85% 증가하였다. 전 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중은 2016년

5.45%에서 2019년 5.56%로, 전 산업 대비 사회서비스 종사자 비중은 2016년 16.28%에서 2019년 17.19%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10] 사회서비스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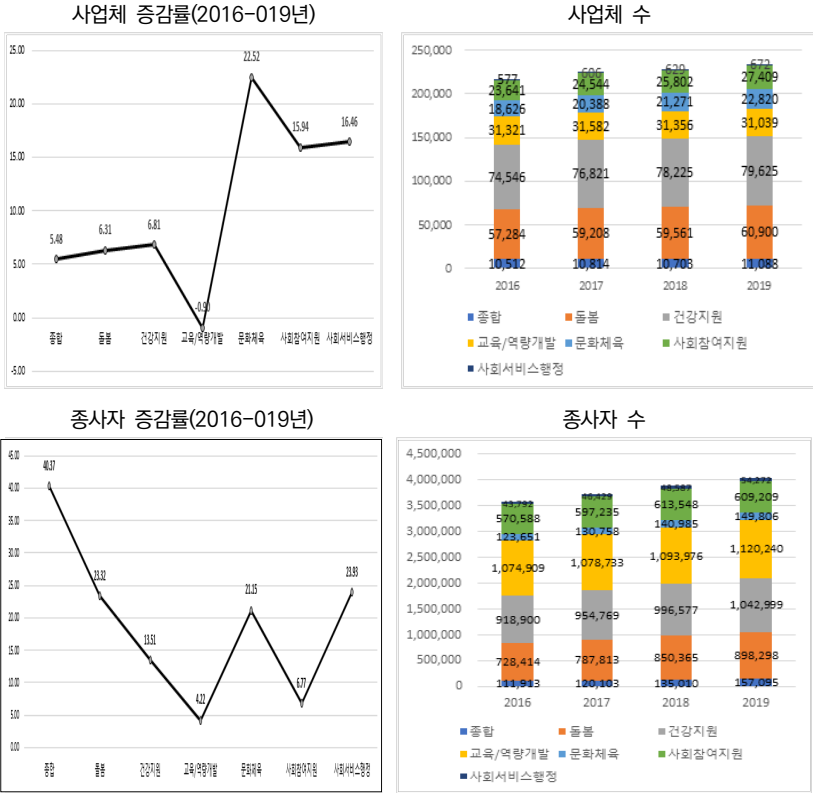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표 2-1>, <부표 2-2> 재구성. 원자료는 통계청. (2021.5.18.). 시도 산업 종사자 규모 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3&conn_path=I2)에서 2022.10.26. 인출한 자료임.

SSISC 대분류에 따른 사회서비스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변동은 [그림 6-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체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으로 22.52% 증가했고,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사업체는 0.90% 감소하였다. 동 기간 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종합 사회서비스업으로 40.37% 증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23.93%), 돌봄서비스업(23.3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감소한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의 종사자 규모는 동 기간 4.22%가 증가하였다.

[그림 6-11] 사회서비스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 명)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89-91. <부표 2-1>, <부표 2-2> 재구성. 원자료는 2016-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 파일임.

## 나. 종사자 규모별, 조직 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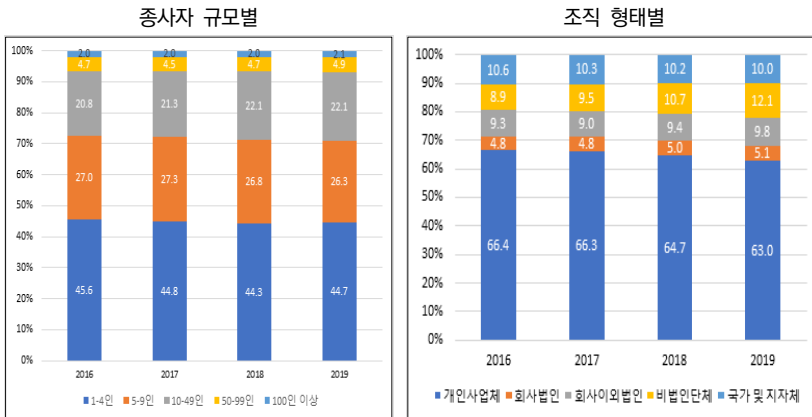
[그림 6-12]는 종사자 규모 및 조직 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중 변화를 보여준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1~4인→5~9인→10~49인→50~99인→100인 이상 순으로 적어져 소규모 사업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0인 이상의 사업체 비중이 다소 증

가하지만,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사업체의 높은 비중은 개인 사업체가 다수인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조직 형태 특성과 연관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산업에서 개인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비법인단체의 비중이 2016년 8.9%에서 2019년 12.1%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민간 영리 개인 사업체의 비중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특성은 민간 시장 활성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을 사회서비스 정책 기조로 추진해 온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12] 종사자 규모, 조직 형태별 사회서비스 사업체 비중

(단위: %)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92-107. <부표 2-3>~<부표 2-10>재구성. 원자료는 2016-2019년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 파일임.



## 2. 사회서비스 노동시장 성과

사회서비스 정책의 노동시장 성과를 진단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취업자 비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 임금수준, 근로시간을 주요 지표로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업 취업자(종사자)는 위에서 제시한 SSISC에 매칭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로 상정하였다.<sup>11)</sup>

### 가.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그림 6-13]에서 사회서비스 취업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 취업자보다 2배가량 많은 편이다. 여성 취업자 비중은 2016년 66.5%에서 2020년 67.8%로 큰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데, 2016년 39.4%에서 2020년 44.7%로 점차 증가하였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을 달성하고자 했던 사회서비스 정책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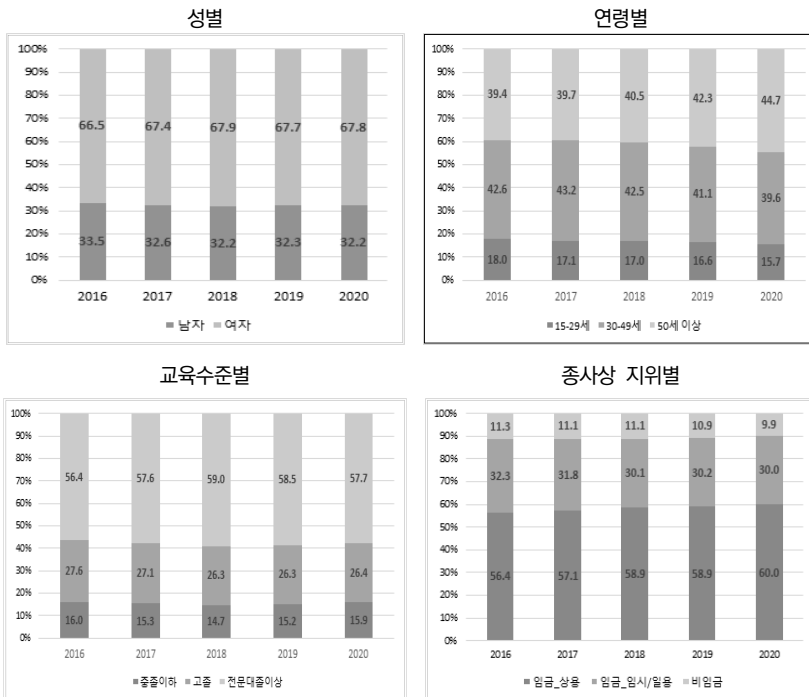
교육수준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취업자가 60%에 육박하는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큰 변동은 없으나 2018년 전후 전문대졸 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산업에 속하는 사업체에서 일하는 10대 상위 출현 직업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53.9만),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49.4만), 학교 교사(39.2만),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38.9만), 간호사(24.8만),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24.3만), 경영 관련 사무원(22.9만), 보건 의료 관련 종사자(21.8만),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17.6만),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14.2만)로 나타난다.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사무직, 단순노무직 등 간접 일자리가 혼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하반기 B형) 원자료 분석).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016년 56.4%에서 2020년 60.0%로 점차 증가하여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는 추세가 확인된다.<sup>12)</sup>

[그림 6-13] 사회서비스 취업자 특성

(단위: %)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18-140. <부표 3-2>~<부표 3-9> 재구성. 원자료는 2016-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하반기 B형) 데이터 파일임.

12) 다만, 종사상 지위별 동향은 취업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안수란, 하태정(2021)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의 핵심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간호사 등이 상위 출현 직업으로 확인되는 보건복지업 산업군에서는 상용직이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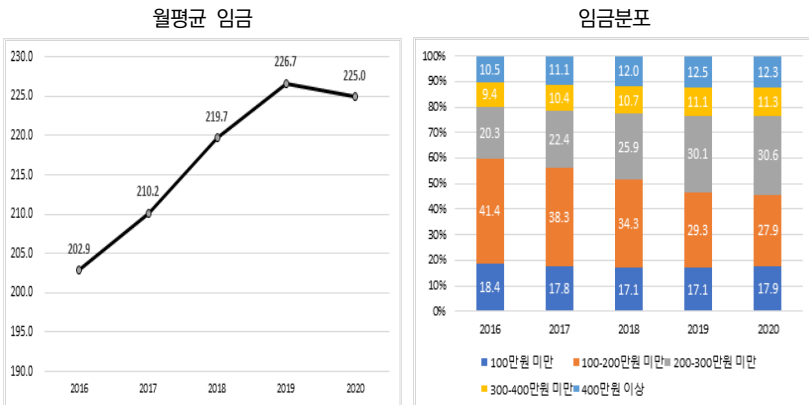
## 나. 임금수준

[그림 6-14]는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와 임금 분포 변동을 보여준다. 사회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16년 202만 3천 원에서 2019년 226만 7천 원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225만 원으로 다시 감소한다. 2020년 임금수준의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임금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200만 원 미만 구간 비중이 2016년 41.4%에서 2020년 27.9%로 급격히 감소하고, 200~300만 원 미만 구간 비중이 2016년 20.3%에서 2020년 30.6%로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6-14] 임금근로자 임금수준

(단위: 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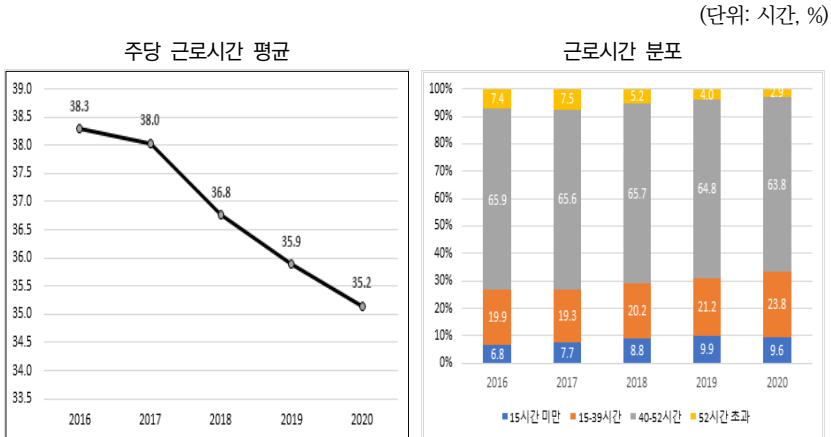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41-152. <부표 3-16>~<부표 3-19> 재구성. 원자료는 2016-2020년 지역별 고용조사(하반기 B형) 데이터 파일임.

### 다. 근로시간

[그림 6-15]는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 평균과 근로시간 분포 변동을 보여준다. 사회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2016년 38.3시간에서 2020년 35.2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5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감소(2016년 7.4% → 2020년 2.9%)함과 동시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비중도 증가(2016년 6.8% → 2020년 9.6%)했다는 점이다. 장시간 근로자 비중의 감소는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주 52시간 상한제)에 따른 제도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증가는 고용 불안정성을 높이고, 소득 감소에 따른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림 6-15]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자료: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53-161. <부표 3-16>~<부표 3-19> 재구성. 원자료는 2016-2020년 지역 고용조사(하반기 B형) 데이터 파일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7장

## 인구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제1절 인구(정태·동태)

제2절 가구

제3절 혼인·출산

제4절 돌봄·양육



# 제 7 장 인구 분야 정책 성과와 동향

## 제1절 인구(정태·동태)

### 1. 주요 집단별 인구 규모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태적 인구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 정책의 핵심성과 지표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주요집단별 인구 수이다. 실제로 인구 분야에서 인구의 수는 인구정책의 수요자로서 기본이 되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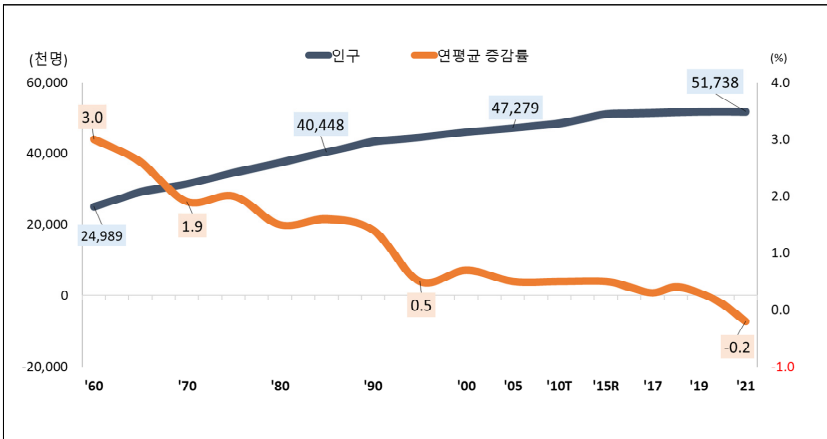
가장 최근에 인구규모를 측정한 자료는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인구가구주택의 규모와 특성,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1960년 이후 5년 주기로 수행되는 조사이다. 2015년부터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 조사 없이 통계를 생산하는 등록센서스 방식이 도입되었다. ‘인구 및 주택규모 등 기본항목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는 등록센서스 방식으로 매년, 이보다 세부적인 특성 항목은 표본조사(전국의 20% 표본가구)를 통해 5년 주기(0자, 5자 연도)로 작성하고 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2021년 11월 1일 0시 기준, 14개 기관 및 400여 대학, 25종의 행정자료(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를 통계적 목적으로 연계하고 보완하여 집계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통계청, 2022.7.28., 일러두기).

2021년 준(準)총인구는 51,738천 명으로 2020년 대비 91천 명(0.2%)

감소하였는데, 이는 센서스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일이다. 2021년 연평균 인구의 증감률(인구성장률)은 -0.2%로, 센서스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음(-)의 성장률을 보였다. 인구성장률은 1960년 3.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처음으로 음(-)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림 7-1] 총인구와 인구성장률: 1960~2021년

(단위: 천 명, %)



자료: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5.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에서 2022.10.1. 인출.

2021년 기준, 성별, 연령별 인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가 25,850천 명, 여자는 25,888천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8천 명 더 많은 수준이다.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산출되는 성비는 2021년 기준 99.9이다. 연령 집단별 인구는 50대가 8,576천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대가 8,116천 명, 60대가 7,074천 명 순으로 많다.



〈표 7-1〉 총인구 및 성별, 연령별 인구 규모: 2020~2021년

(단위: 천 명, 여자 100명당, %)

연령	2020년				2021년			
	계	남	여	성비	계	남	여	성비
계	51,829	25,915	25,914	100.0	51,738	25,850	25,888	99.9
0~9세	3,987	2,044	1,942	105.3	3,783	1,939	1,844	105.2
10~19세	4,717	2,440	2,277	107.2	4,618	2,385	2,233	106.8
20~29세	7,031	3,722	3,309	112.5	6,887	3,636	3,251	111.8
30~39세	7,107	3,713	3,394	109.4	6,955	3,637	3,317	109.7
40~49세	8,232	4,194	4,039	103.8	8,116	4,139	3,977	104.1
50~59세	8,583	4,304	4,278	100.6	8,576	4,309	4,267	101.0
60~69세	6,619	3,227	3,392	95.1	7,074	3,450	3,624	95.2
70~79세	3,629	1,631	1,998	81.6	3,674	1,661	2,013	82.5
80~89세	1,685	588	1,097	53.6	1,797	637	1,159	54.9
90세 이상	240	52	188	27.6	259	56	203	27.8
0~14세	6,254	3,213	3,041	105.7	6,087	3,126	2,962	105.5
15~64세	37,288	19,117	18,171	105.2	36,944	18,936	18,008	105.2
65세 이상	8,287	3,585	4,702	76.2	8,707	3,788	4,918	77.0

자료: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8.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에서 2022.10.1. 인출.

2021년 기준, 성별, 연령별 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소년 인구(0~14세)는 11.8%이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6.8%이다.

〈표 7-2〉 성별·연령별 구성비: 2020~2021년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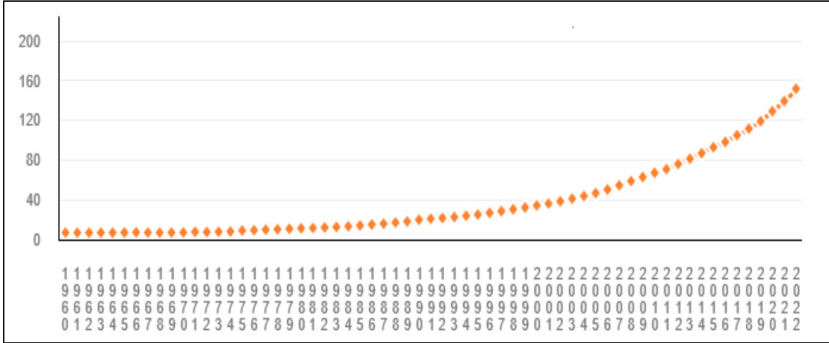
연령	2020년			2021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9세	7.7	7.9	7.5	7.3	7.5	7.1
10~19세	9.1	9.4	8.8	8.9	9.2	8.6
20~29세	13.6	14.4	12.8	13.3	14.1	12.6
30~39세	13.7	14.3	13.1	13.4	14.1	12.8
40~49세	15.9	16.2	15.6	15.7	16.0	15.4
50~59세	16.6	16.6	16.5	16.6	16.7	16.5
60~69세	12.8	12.5	13.1	13.7	13.3	14.0
70~79세	7.0	6.3	7.7	7.1	6.4	7.8
80~89세	3.3	2.3	4.2	3.5	2.5	4.5
90세 이상	0.5	0.2	0.7	0.5	0.2	0.8
0~14세	12.1	12.4	11.7	11.8	12.1	11.4
15~64세	71.9	73.8	70.1	71.4	73.3	69.6
65세 이상	16.0	13.8	18.1	16.8	14.7	19.0

주: 합계는 소수점 아랫자리에서 합산한 것으로, 산술적 합계가 100.0이 아닐 수 있음.  
 자료: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8.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에서 2022.10.1. 인출.

고령화지수 또는 노령화지수(Aging index)는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65세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대표적인 인구지표이고, 중요한 지표이다.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 낮은 수준에 있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조금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34.3에서 10년 지난 2010년에는 2배 가까이 상승(67.2)하였고, 10년간 2배 이상 상승하여 2022년에는 152.0에 이르렀다. 출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유소년 인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망의 감소로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지수는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2] 고령화지수(Aging Index): 1960~2022년

(단위: %)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2.7.13.). 고령화지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popup=Y&clasCd=2&idxCd=5064> 에서 2022. 9. 30. 인출

## 2. 인구이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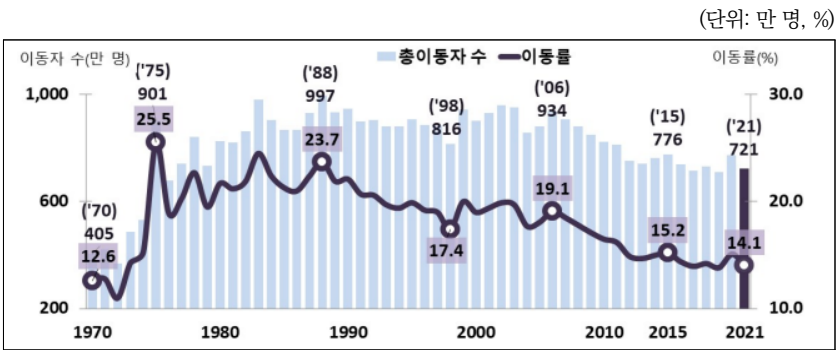
전문가 조사 결과, 동태적 인구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정책의 핵심성과 지표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인구이동 및 연령별 이동이다. 여기서는 대표 지표로서 인구이동률을 산출하고 관련된 인구이동과 연령별 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이동과 관련된 지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국내인구이동통계는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토대로 전입신고 중 읍면동 경계를 넘은 거주지 이동 건수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월간 통계는 익월 말(매 분기 월말, 분기내용 추가)에 발표되고, 연간 통계는 익년 1월 말에 발표된다.

$$\text{인구이동률} = \frac{\text{국내에서 이동한 인구}}{\text{해당기간 전체 인구}} \times 100$$

주: 이동률 분모는 「(해당기간 초 주민등록인구 + 해당기간 말 주민등록인구)/2」, 1992년까지는 추계인구, 1993년부터는 주민등록연앙인구.

인구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를 의미한다. 2021년 기준 인구이동률은 14.1%로, 전체 인구 100명당 14.1명이 2021년 한 해 동안 거주를 위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3] 국내이동률 및 이동자 수 추세: 1971~2021년



자료: 통계청. (2022.1.25.).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p.3.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 에서 2022.10.26. 인출..

2021년 기준 국내인구이동자 수는 총 721만 3천 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서 6.7%(52만 2천 명) 감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이동률은 2006년 19.1%에서 대체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14.1%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2020년 대비 1.0%p 감소한 수준이다. 2021년 현재 한국의 국내이동률은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2011~2021년까지의 국내이동률을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 2011년 11.3%에서 2021년 8.2%로 3.1%p 감소한 수준이고, 일본은 2011년 4.1%에서 2020년 3.9%로 0.1%p 감소한 것에 비해, 한국의 이동률은 2011년 16.2%에서 2021년 14.1%로 2.1%p 감소하여 차이를 보인다.

〈표 7-3〉 국내이동률 국제비교: 2011~2021년

(단위: %)

연도	한국	미국	일본
2011	16.2	11.3	4.0
2012	14.9	11.6	4.0
2013	14.7	11.4	4.0
2014	15.0	11.2	3.9
2015	15.2	11.1	4.0
2016	14.4	10.7	3.9
2017	14.0	10.6	3.9
2018	14.2	9.8	3.9
2019	13.8	9.4	4.0
2020	15.1	9.0	3.9
2021	14.1	8.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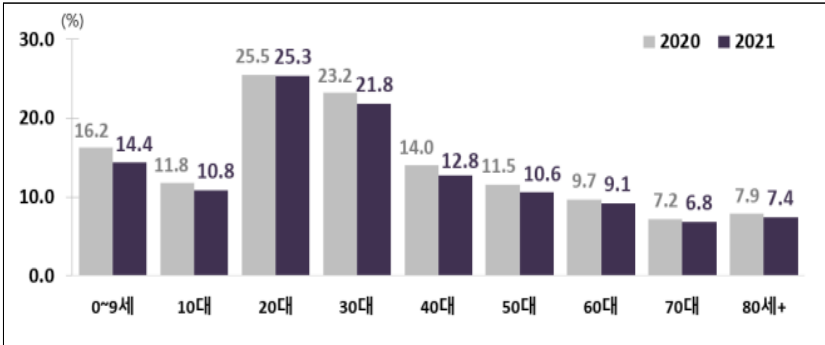
주: 국내이동은, 한국은 읍면동, 미국은 거주지, 일본은 시구정촌 경계를 이동한 것임.  
 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1948-2021; 일본 총무성 통계국, 주민기본대장인구이동보고, 2020; 통계청. (2022.1.25.). 2021년 국내인구이동 보도자료, p. 4에서 재인용.

연령별 이동률은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연령별 이동률은 20대가 25.3%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서 가장 높고, 30대가 21.8%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 이동률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낮아져서 70대가 6.8%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연령층에서 이동률은 감소하고 있다. 가장 감소폭이 큰 연령대가 10세 미만으로 1.8%p 감소하였고, 다음으로 30대에서 1.5%p 감소하였으며, 이어 40대에서 1.2%p 감소하였다.

[그림 7-4] 연령별 이동률: 2020~2021년

(단위: %)



자료: 통계청. (2022.1.25.).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p.5.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 에서 2022.10.26. 인출..

2021년 기준 연령계층별 이동률은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가 15.8%로 가장 높고, 65세 이상의 경우가 7.5%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표 7-4> 연령계층별 이동률: 2011, 2020, 2021년

(단위: %)

구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2011년	17.0	17.1	9.3
2020년	14.2	16.8	7.9
2021년	12.6	15.8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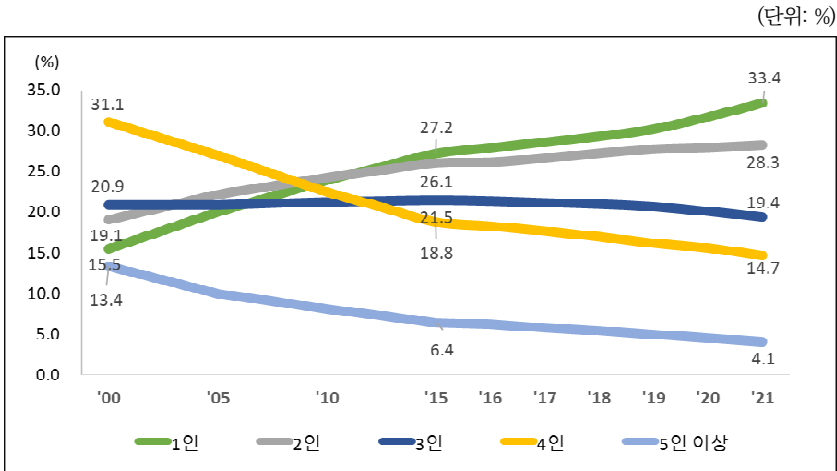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1.25.).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p.6.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 에서 2022.10.26. 인출.

## 제2절 가구

### 1. 1인 가구 비율

인구 분야 가구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핵심성과 지표로 전문가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1인 가구 비율이다. 1인 가구는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가구의 한 유형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의 비율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낮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2021년 기준 전체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유형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유형으로, 전체 가구의 33.4%에 이른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7,166천 가구로 2020년 대비 523천 가구(7.9%) 증가하였다(통계청, 2022.12.7., p.7).

[그림 7-5] 가구원 수별 가구 유형: 201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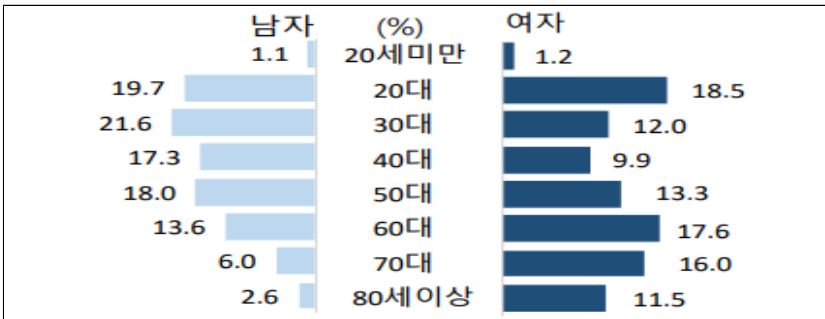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40.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예서 2022.10.1. 인출.

지난 10여 년간 주된 가구원 수별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4인 가구가 31.1%로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주된 유형이었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가 24.3%로 주된 유형이었으며, 2015년부터 가장 주된 유형은 1인 가구임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를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기준 연령별 1인 가구를 살펴보면, 20대 1인 가구가 전체 1인 가구의 19.1%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대 1인 가구(16.8%), 50대 1인 가구(15.6%), 60대 1인 가구(15.6%), 40대 1인 가구(1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1.12.18., p.6). 성별로 주된 1인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대 1인 가구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70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30대 1인 가구가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20대 1인 가구(19.7%), 50대 1인 가구(18.0%) 순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과 차이를 보인다(통계청, 2021. 12.18., p.6).

[그림 7-6] 성별, 연령별 1인 가구 비율(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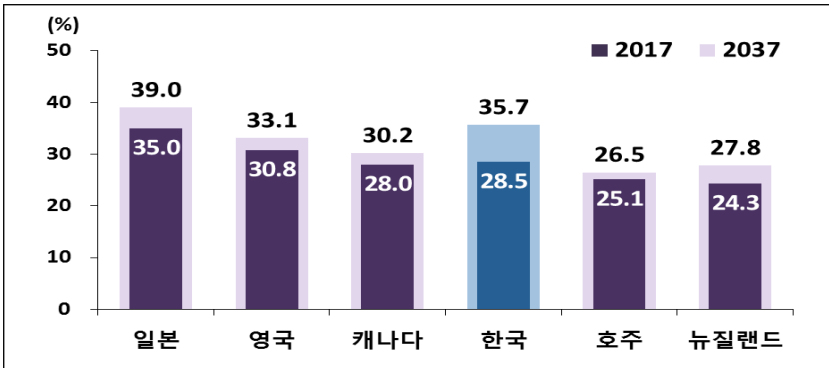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1.12.18.).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p.6.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1%EC%9D%B8%EA%B0%80%EA%B5%AC](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 에서 2022.10.1. 인출.



장래가구 추계 결과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면, 2037년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35.7%로 2037년의 일본(39.0%)보다는 낮으나, 2041년의 영국(33.1%), 2036년의 캐나다(30.2%), 2038년의 뉴질랜드(27.8%), 2037년의 호주(26.5%)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사회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7] 국가별 1인 가구 구성비: 2017, 2037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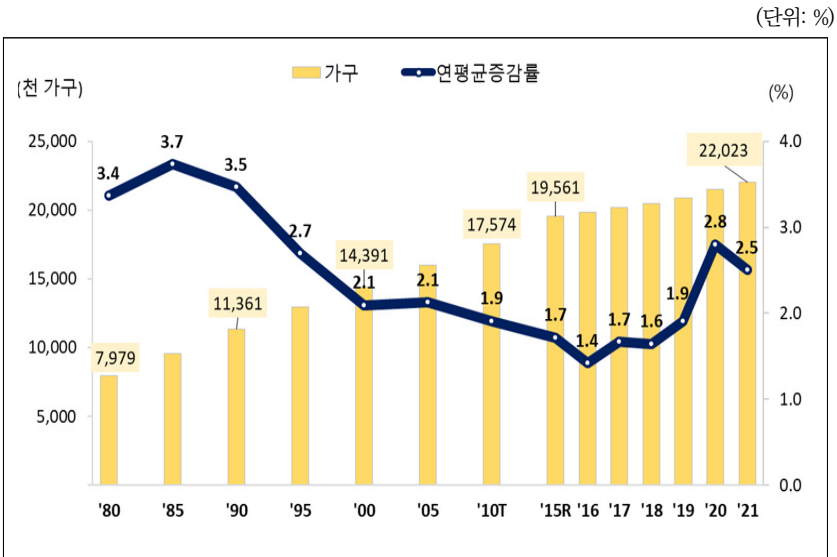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9). 장래가구추계: 2017~2047년;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18 장래가구추계; 영국 통계청. 2018 장래가구추계(2016년 및 2041년 잉글랜드 자료); 캐나다 주택담보공사. 2018 장래가구추계(2016년 및 2036년 자료); 호주 통계청. 2019 장래가구추계; 뉴질랜드 통계청. 2017 가구추계(2018년 및 2038년 자료); 통계청. (2019.12.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9314&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9314&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에서 2022.12.25. 인출한 자료에서 재인용.

## 2. 유형별 가구 비율

인구 분야 가구 영역에서 사회정책의 핵심성과 지표로, 전문가 조사 결과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유형별 가구 비율이다. 가구는 상당수의 사회정책의 정책 개입 단위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가구의 유형

을 파악하는 것은 사회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가구의 총규모를 우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가구 수는 22,023천이다. 2020년과 비교해서 538천 가구가 증가한 수준으로 연평균 변화율(증감률)은 2.5%이다. 총 가구 규모의 연도별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다.

[그림 7-8] 총 가구 규모 및 연평균 변화율: 1980~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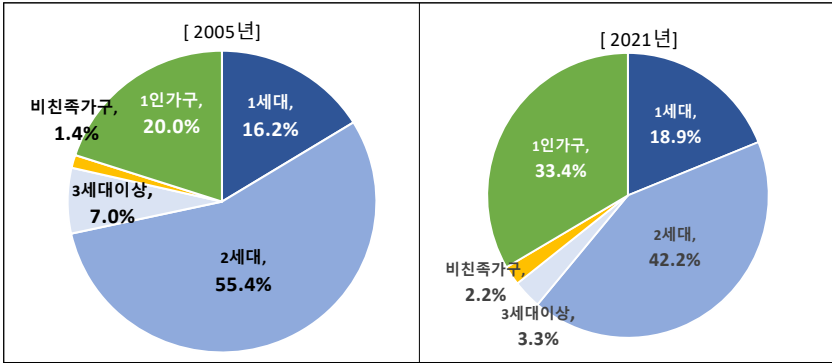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32.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예서 2022.10.1. 인출.

집단가구와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기준 전체 일반가구(21,448천 가구) 중 친족가구는 13,810천 가구이다. 이 중 1세대 친족가구는 4,054천 가구이고, 2세대 친족가구는 9,050천 가구이며, 3세대 이상 친족가구는 706천 가

구이다. 2021년 기준, 가족과 동거하는 친족가구의 비율은 전체 일반가구의 64.4%이며, 비친족가구는 473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2%이다(통계청, 2022.7.28.).

[그림 7-9] 가구 유형별 비율: 2005, 2021년



자료: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p.38.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에서 2022.10.1. 인출.

유형별 가구 비율을 2005년과 비교해 보면, 1세대 친족가구는 2.7%p 증가하였으나 2세대 친족가구와 3세대 이상 친족가구는 각각 13.2%, 3.7% 감소했다. 가구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사회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가구의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체 유형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1인 가구도 성별, 연령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구 유형을 더 세분화하여 다양한 가구 구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년 가구, 한 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맞벌이 가구, 조손가구, 다문화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 규모를 파악하고 관찰할 수 있다.

## 제3절 혼인·출산

### 1. 합계출산율

$$\text{합계출산율} = \frac{\sum(\text{ASFR})}{1,000}$$

- 연령별 출산율(ASFR) = (특정 연도의 15~49세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 해당 연도 15~49세 여성 연앙인구) × 1,000

인구 분야에서 인구의 감소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합계출산율이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한 명이 15~49세 동안 출산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연령별 출산율을 합한 결과이다. 이는 경제 발전을 이룬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저출산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비교 지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된 지정통계인 인구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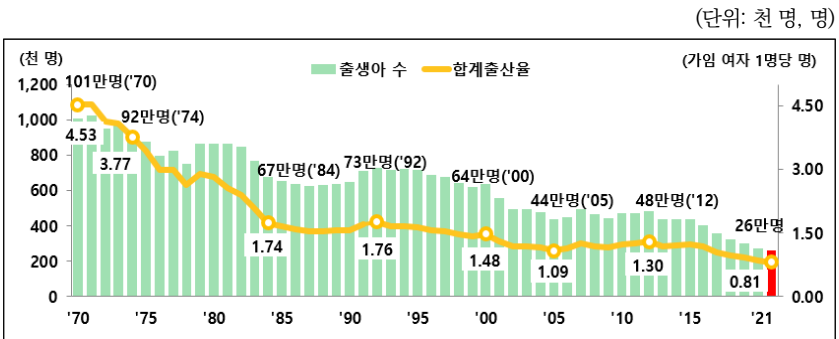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2021년도 출생아 수는 26만 6백 명으로 2020년 대비 1만 1천 8백 명(4.3%)이 감소한 수준이며,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2020년 대비 0.03명(3.4%) 감소한 수준인데,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떨어진 후 지속해서 감소하여, 2001년에는 초저출산의 기준이 되는 1.3명 이하가 되었고, 2018년 1.0명 미만으로 하락하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아래 그림에서는 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국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대에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서 평균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2019년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0 아래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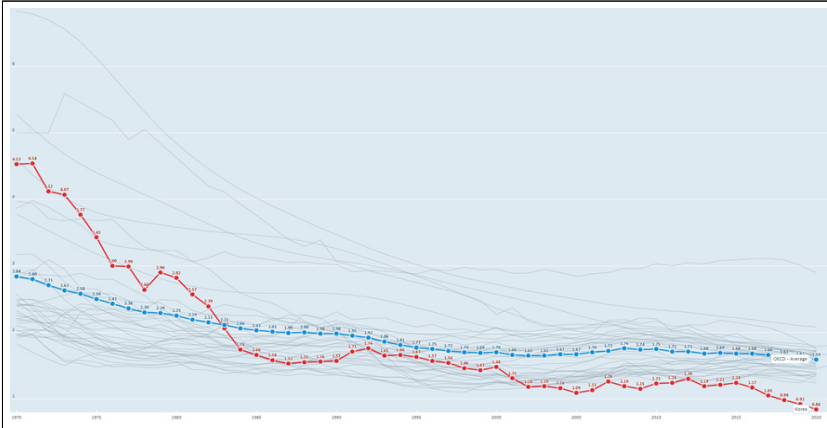
인구 분야에서 인구의 감소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변수는 합계출산율이므로 합계출산율과 세분화된 출산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인구정책의 성과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합계출산율과 함께 연령별 출산율과 유배출산율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림 7-10]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자료: 통계청. (2022.8.24.). 2021년 출생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p.4.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97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97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9.29. 인출.

[그림 7-11]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1970~2019년



자료: OECD. (2022g). Total fertility rate, family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2022.9.29.

## 2. 결혼이민자 비율

$$\text{결혼이민자 비율} = \frac{\text{국민의 배우자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수}}{\text{전체 체류외국인}} \times 100$$

- 결혼이민자는 체류외국인 중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로 F-2-1 및 F-5-2(국민의 배우자), F-6(결혼이민)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남녀를 의미한다.

체류외국인 통계는 매년 말 기준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체류외국인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7.2%씩 증가하던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1년 현재, 체류외국인은 1,956,781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3.9%(79,294명) 감소한 수준이다(법무부, 2022, p.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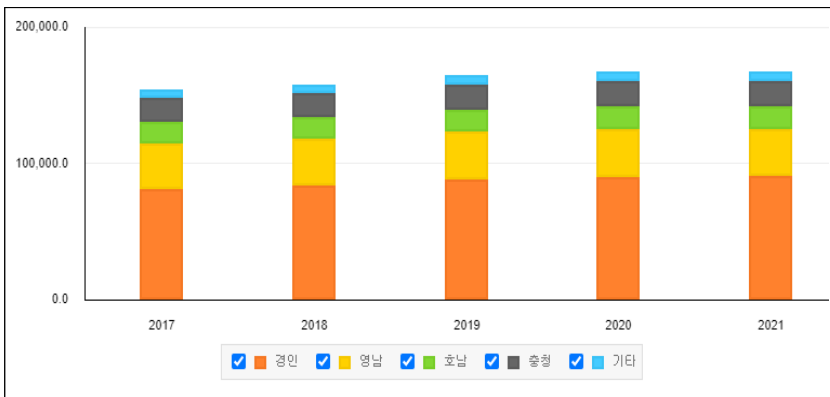
결혼이민자 현황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2014년 결혼이민(F-6) 사증발급 요건에 대한 강화조치를 실시한 후 국적

을 취득하거나 출국하는 결혼이민자보다 신규 유입되는 결혼이민자가 증가하여, 2019년까지 결혼이민자의 수는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하는 추세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이후 신규 유입이 감소하였고, 2021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168,611명으로 2020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 결혼이민자 중 여성은 136,668명으로 전체의 81.1%이며, 남성은 31,943명으로 18.9% 수준이다(법무부, 2022, p.57).

결혼이민자의 거주 지역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경기(30.8%), 서울(16.4%), 인천(6.9%) 등 수도권 거주자가 54.1%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법무부, 2022, p.60). 이러한 경향은 지난 5년간 지속되고 있다.

[그림 7-12] 결혼이민자 연도별·지역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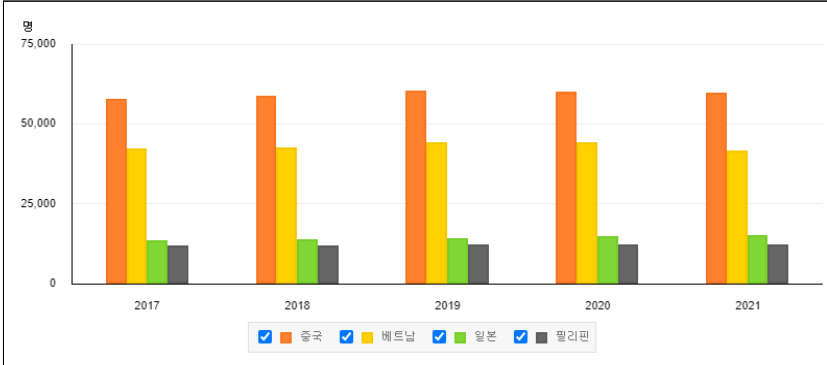
주: 경인은 서울, 경기, 인천; 영남은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호남은 광주, 전북, 전남; 충청은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기타는 강원, 제주 등을 포함함.

자료: e-나라지표. (2022.7.28.). 결혼이민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에서 2022.9.29. 인출.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중국이 35.4%로 가장 비중이 높고, 베트남이 24.6%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어 일본 8.9%, 필리핀 7.1%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13] 결혼이민자 연도별·국적별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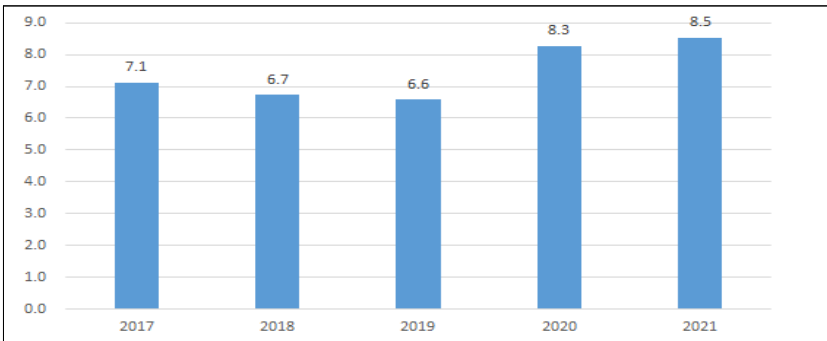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2022.7.28.). 결혼이민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에서 2022.9.29. 인출.

전체 체류외국인 대비 결혼이민자를 나타내는 결혼이민자 비율은 다음 그림과 같다. 2021년 기준 결혼이민자 비율은 8.5%로 지난 5년을 살펴볼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림 7-14] 결혼이민자 비율(2017~2021년)

(단위: %)



주: 결혼이민자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자료: e-나라지표. (2022.7.28.). 결혼이민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에서 2022.9.29. 인출.



저출산이라는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민 정책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비율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인구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비율보다는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체류 자격이 국민의 배우자로 변하는 외국인의 수와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유입된 외국인의 수로 구분하여 살펴보되, 인구동향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출산율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출산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지표로 생애비(미)혼율을 추가로 제안한다.

## 제4절 돌봄·양육

### 1. 성별 가사노동시간

전문가 조사 결과, 돌봄·양육 영역에서 인구 분야 사회정책의 핵심성과 지표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표는 성별 가사노동시간이다. 성별 가사노동시간은 5년마다 실시되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19세 이상(2014년까지 20세 이상) 기혼 남녀가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의미한다. 가사노동시간은 가정관리에 사용한 시간과 가족돌봄시간을 합하여 산출한다. 2019년도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가정관리는 가구의 가정생활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행동으로 음식준비, 세탁 등 의류관리, 청소, 집관리, 물품구입, 가정경영, 기타 집안일 등을 포함한다. 가족돌봄은 동일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원 또는 가족(직계 및 형제자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보살피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만 10세 미만 아이돌보기, 만 10세 이상 미

성년자 돌보기, 장기 돌봄 필요 성인 돌보기, 독립적인 성인 돌보기를 의미한다(통계청, 2020b).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9년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기혼 남녀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149분으로, 118분의 가정관리와 31분의 가족돌봄 시간으로 구분된다.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5분으로, 남성 가사노동시간(64분)의 약 3.5배 수준이다. 가사노동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가정관리의 경우 여성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181분으로, 남성의 가정관리 시간(48분)의 약 3.8배 수준이다. 여성이 하루 평균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은 44분으로, 남성의 가족돌봄 시간(16분)의 약 2.8배 수준이다(국가지표체계, 2022.12.2.).

맞벌이 여부에 따른 성별 가사노동 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맞벌이 가구에서도 여성의 가정관리와 가족돌봄 시간은 남성과 비교해서 2배 이상 크게 차이를 보인다. 더 나아가 아내 혼자 버는 외벌이 가구에서도 여성이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6분이 더 많다. 기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은 실정이다.

〈표 7-5〉 맞벌이 여부별 가사노동 유형별 평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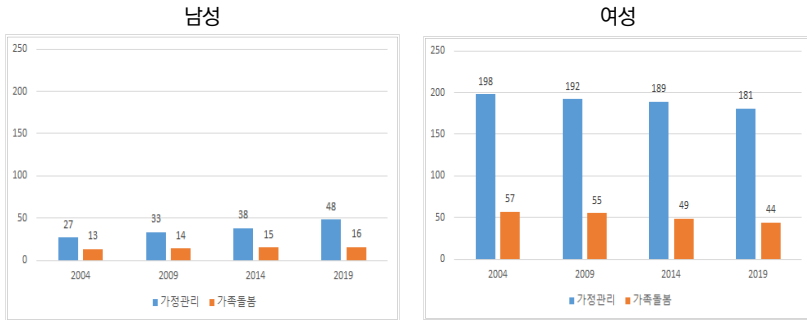
(단위: 분)

가구 유형	가사노동 유형	평균시간		
		계	남편	아내
맞벌이가구	가정관리	93	39	151
	가족돌봄	25	15	36
(남편)외벌이가구	가정관리	136	33	245
	가족돌봄	57	20	96
(아내)외벌이가구	가정관리	121	103	139
	가족돌봄	17	16	17

자료: 통계청. (2020.7.30.). 맞벌이·외벌이 가구별 평균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_1TM1A81X&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_1TM1A81X&conn_path=I2) 에서 2020.10.1. 인출.

2004, 2009, 2014, 2019년 가사노동시간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성이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은 2004년 27분에서 2019년 48분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도 2004년 13분에서 2019년 16분으로 작지만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가정관리에 사용하는 시간이 2004년 198분에서 2019년 181분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며, 가족돌봄에 사용하는 시간도 2004년 57분에서 2019년 44분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여전히 매우 커서 가사노동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15] 기혼 남녀의 가사노동 유형별 평균 시간: 2004, 2009, 2014, 2019년  
(단위: 분)



자료: 국가지표체계. (2022.12.2.). 가사노동.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2> 에서 2022.12.21. 인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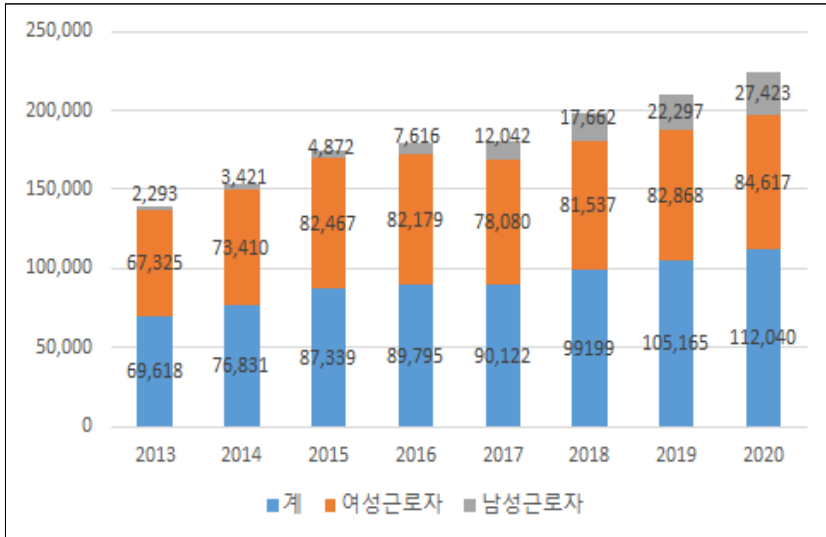
저출산이라는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의 성과와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성별 가사노동 시간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가사노동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 여성 비중, 자녀 수별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 기간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2. 성별 육아휴직자 수

돌봄·양육 영역에서 두 번째로 평균 점수가 높은 지표는 가족돌봄인구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가족돌봄인구 다음으로 높게 평가된 성별 육아휴직자 수 지표를 산출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 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은 근로자인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자 수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자료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그림 7-16] 성별 육아휴직자 수: 2013~2020년

(단위: 명)



자료: e-나라지표. (2022.8.1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에서 2022.10.1. 인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 87,339명, 2016년 89,795명, 2017년 90,122명, 2018년 99,199명, 2019년 105,165명, 2020년 112,0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으나 임금보전 등 육아휴직의 지원제도가 미비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다. 2001년 11월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 수를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육아휴직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30일 이상 휴가를 사용한 경우이며, 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이다(법제처, 2022;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7.12.1.). 저출산의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자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만 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가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n.d.). 이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나, 최근 들어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2015년 5.6%(4,872명), 2016년 8.5%(7,616명), 2017년 13.4%(12,042명), 2018년 17.8%(17,662명), 2019년 21.2%(22,297명)에서 2020년 24.5%(27,423명)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일과 생활의 균형과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위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수와 특히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8장

## 사회보장 일반 동향

제1절 행복·삶의 질

제2절 사회인식

제3절 사회보장재정

제4절 거시지표





## 제 8 장 사회보장 일반 동향

### 제1절 행복·삶의 질

#### 1. 행복

행복 = 삶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칸트릴 사다리 척도 질문에 대한 평균 점수(0~10점)

- (질문) 바닥이 0점이고 꼭대기가 10점인 사다리를 상상하세요. 사다리의 꼭대기는 당신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의미하고, 사다리의 바닥은 당신의 삶에서 최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그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문) Please imagine a ladder with steps numbered from zero at the bottom to 10 at the top. The top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best possible life for you and the bottom of the ladder represents the worst possible life for you. On which step of the ladder would you say you personally feel you stand at this time?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주요 국가 국민의 행복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하는 측정지표는 삶의 평가(Life evaluation)이다. 이 척도는 칸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로 측정하며, 최저 0점부터 최고 10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리커트 척도로서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Helliwell, Layard, & Sachs, 2022,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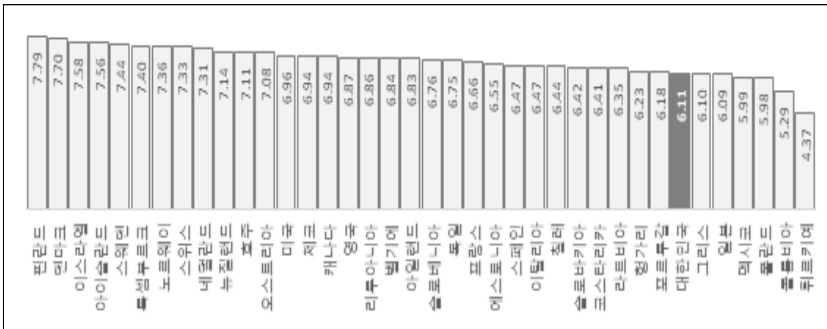
2021년 기준, 가장 높은 행복 점수를 보인 국가는 핀란드로 7.79점이고, 덴마크가 7.70점, 이스라엘이 7.58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전반적으로 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복지 선진국가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

에 포진해 있다.

보고된 한국인의 행복 수준은 0~10점 범위에서 6.11점으로 OECD 가입국 중에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한국에 비해 다소 높은 행복 점수를 보인 국가는 포르투갈(6.18점), 헝가리(6.23점, 라트비아(6.35점)이다. 한국보다 낮은 행복 점수를 보인 국가는 경제 위기 이후 부진을 이어온 그리스(6.10점)와 일본(6.09점), 멕시코(5.99점), 폴란드(5.98점), 콜롬비아(5.29점)가 있고, 내전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의 행복 점수가 4.37점으로 가장 낮다.

[그림 8-1] 주요국의 행복 수준 국제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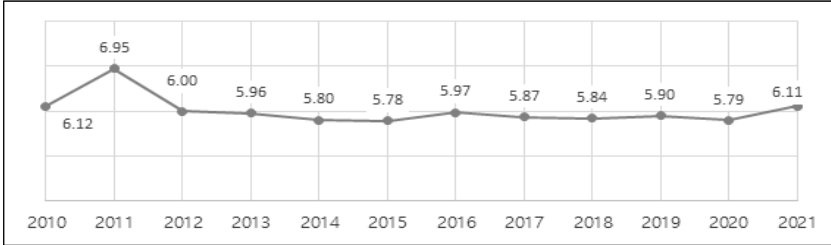


주: 2021년 기준이되, 벨기에는 2020년, 룩셈부르크는 2019년 기준임. 원자료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임.  
 자료: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Figure 2.1> 데이터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그중에서도 2010년대 한국인의 행복 점수는 2010년에 6.12점에서 시작하여 2011년 6.95점으로 특이점을 보인 이외, 5점 후반대의 수준에서 머물러왔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 5.79점으로 전년도 5.90점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가, 2021년에는 6.11점으로 이전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림 8-2] 한국인의 행복 추세

(단위: 점)



주: 원자료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임.

자료: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Table 2.1> 데이터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2. 삶의 질: OECD 웰빙(Well-Being)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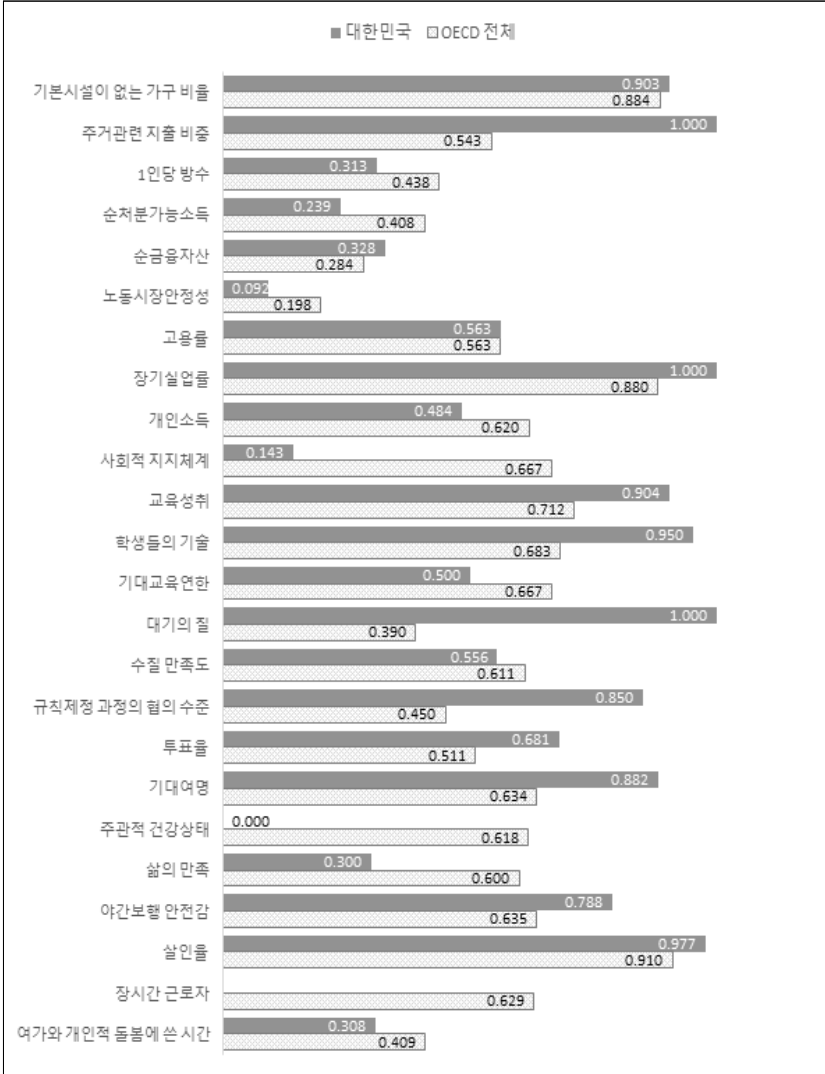
OECD에서는 다차원적 삶의 질을 국가 단위에서 비교하기 위해 주거, 소득과 부, 직업과 소득, 사회적 관계,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조화 영역에서 얻은 24개 측정지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다음 그림은 각 측정지표마다 상이한 단위를 최소-최대 정규화 방식(min-max normalization)을 이용해<sup>13)</sup> 각 지표의 상대적 수준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한국은 OECD 전체 대비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 비율, 주거 관련 지출 비중, 순금융자산, 장기실업률, 교육성취, 학생들의 기술 수준, 대기의 질, 규칙제정 과정의 합의 수준, 투표율, 기대여명, 야간보행안전감, 살인율의 지표가 양호하다. 1인당 방 수, 순처분가능소득, 노동시장안정성, 고용률, 개인소득, 사회적 지지체계, 기대 교육연한, 수질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 삶의 만족, 여가와 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 지표는 취약한 편이다.

13)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의 기술노트(technical notes)를 참고바람(UNDP, 2020).

[그림 8-3] 주요국의 웰빙 지수

(단위: 점)



주: 개별 측정지표의 정의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함.  
 자료: OECD. (2022h). How's Life? Well-Being,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b8a8569d-en> 2022.10.14.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3. 사회적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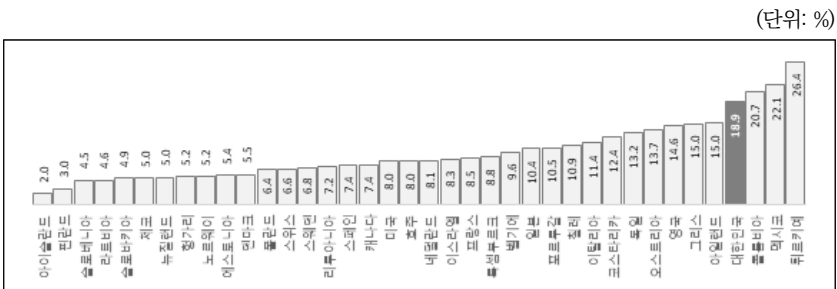
사회적 고립 =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 (질문) 곤란한 상황일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있습니까?
- (영문) If you were in trouble, do you have relatives or friends you can count on to help you whenever you need them, or not?

국제비교 시, 사회적 고립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 등 사적 지지체계가 없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김성아, 2022). 2021년 기준,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2.0%이다. 핀란드가 3.0%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슬로베니아(4.5%), 라트비아(4.6%), 슬로바키아(4.9%)도 4%대의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한국에서 보이는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은 18.9%로 OECD 가입국 중에서 높은 편이다. 이는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 규모가 한 순위 앞서는 그리스와 아일랜드의 15.0%에 비해 3.9%p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적 고립 인구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튀르키예다.

[그림 8-4]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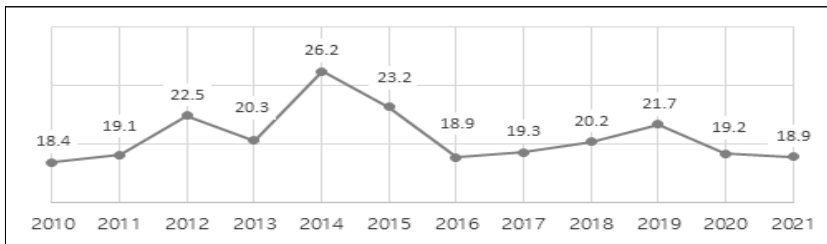


주: 2021년 기준이되, 벨기에는 2020년, 룩셈부르크는 2019년 기준임. 원자료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임.  
 자료: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Table 2.1> 데이터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최근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8.4%로 시작해 2012년 22.5%까지 증가하였다. 2013년에 20.3%로 다소 감소했다가, 세월호 비극이 있었던 2014년에는 26.2%까지 증가하였다. 2016년까지 점차 감소해 18.9% 수준을 보였지만, 2019년까지 21.7%로 다시 증가했다. 팬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었지만 전 국민이 감염병 예방과 방역에 참여한 2020년에는 19.2%로 감소하였고, 2021년에는 18.9% 수준을 보였다.

[그림 8-5] 한국인의 사회적 고립 추세

(단위: 점)



주: 원자료는 갤럽월드폴(Gallup World Poll)임.

자료: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의 <Table 2.1> 데이터 원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제2절 사회인식

### 1. 갈등 인식

-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갈등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빈곤층과 중·상층’, ‘보수와 진보’, ‘노인층과 젊은 층’, ‘남자와 여자’ 네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한국행정연구원은 매년 전국 단위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한다.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응답자에게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 항목을 통해 위 네 가지 측면의 갈등 정도를 묻는다. 이 항목의 선택지는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네 가지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회통합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를 활용하여 우리 사회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 변화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심하다는 의견은 줄어들고, 심하지 않다는 의견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에 심하지 않다는 전체 응답(‘전혀 심하지 않다’와 ‘별로 심하지 않다’ 응답 비율의 합)은 12.6%였고, 심하다는 전체 응답(‘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 응답 비율의 합)은 87.3%였다. 그러나 빈부 갈등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에는 18.8%까지 늘었고, 심하다는 의견은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 81.2%로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그 변화 양상을 보면, 대중이 느끼는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80%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빈부 갈등은 심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1〉 빈곤층과 중·상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심하지 않다	0.9	0.7	0.8	0.6	0.6	1.0	0.9	0.9	1.0
별로 심하지 않다	11.7	13.7	15.2	13.6	14.0	16.6	19.0	16.4	17.8
소계	<b>12.6</b>	<b>14.4</b>	<b>16.0</b>	<b>14.2</b>	<b>14.6</b>	<b>17.6</b>	<b>19.9</b>	<b>17.3</b>	<b>18.8</b>
약간 심하다	55.6	55.1	55.0	56.6	58.3	59.5	63.5	62.3	62.6
매우 심하다	31.7	30.5	29.0	29.3	27.2	22.9	16.6	20.4	18.6
소계	<b>87.3</b>	<b>85.6</b>	<b>84.0</b>	<b>85.9</b>	<b>85.5</b>	<b>82.4</b>	<b>80.1</b>	<b>82.7</b>	<b>81.2</b>

자료: 통계청. (2022.5.16.a). 우리 사회 갈등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12) 에서 2022.10.30. 인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과 심하다는 의견의 비중은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2021년에 그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를 나타낸다. 2013년~2020년 사이에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12~15% 사이에서 유지되었고, 심하다는 응답은 85~88%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의 합이 전년도에 비해 6.5%p 증가하여 21%로 급격히 오른 반면, 심하다는 의견의 비중은 78.9%로 떨어졌다. 특히 2021년에는 2020년보다 매우 심하다는 응답이 8.8%p나 감소하여 37.8%로 집계되었다.

〈표 8-2〉 보수와 진보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심하지 않다	1.0	1.0	0.6	1.0	0.9	1.1	2.0	1.4	1.7
별로 심하지 않다	11.1	13.8	12.6	12.8	11.2	11.7	12.9	13.1	19.3
소계	<b>12.1</b>	<b>14.8</b>	<b>13.2</b>	<b>13.8</b>	<b>12.1</b>	<b>12.8</b>	<b>14.9</b>	<b>14.5</b>	<b>21.0</b>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약간 심하다	47.9	45.2	48.9	48.2	44.9	44.6	38.8	38.8	41.1
매우 심하다	40.0	40.0	37.8	38.0	43.1	42.7	46.3	46.6	37.8
소계	<b>87.9</b>	<b>85.2</b>	<b>86.7</b>	<b>86.2</b>	<b>88.0</b>	<b>87.3</b>	<b>85.1</b>	<b>85.4</b>	<b>78.9</b>

자료: 통계청. (2022.5.16.a). 우리 사회 갈등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에 대해 사람들은 그 정도가 최근 들어 조금 줄어들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세대 간 갈등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의 합은 35.9%, 심하다는 응답의 합은 64.1%였다. 이후 심하다는 응답이 조금 늘어난 해도 있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이러한 응답은 각각 60.9%와 60.5%로 감소하였고, 특히 매우 심하다는 의견은 11%대를 기록하여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인구 10명 가운데 4명은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 8-3〉 노인층과 젊은 층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심하지 않다	2.2	2.3	2.8	2.7	2.7	3.3	2.5	2.9	3.2
별로 심하지 않다	33.7	35.4	32.1	33.4	35.0	32.2	33.5	36.2	36.3
소계	<b>35.9</b>	<b>37.7</b>	<b>34.9</b>	<b>36.1</b>	<b>37.7</b>	<b>35.5</b>	<b>36.0</b>	<b>39.1</b>	<b>39.5</b>
약간 심하다	50.2	47.9	49.9	49.3	48.6	49.7	49.7	49.8	48.7
매우 심하다	13.9	14.4	15.2	14.5	13.7	14.7	14.4	11.1	11.8
소계	<b>64.1</b>	<b>62.3</b>	<b>65.1</b>	<b>63.8</b>	<b>62.3</b>	<b>64.4</b>	<b>64.1</b>	<b>60.9</b>	<b>60.5</b>

자료: 통계청. (2022.5.16.a). 우리 사회 갈등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는 남녀 사이의 갈등에 대해 심하다는 의견과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서로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13년~2017년 사이 심하지 않다는 응답은 50%를 조금 넘었고, 심하다는 의견은 50%보

다 조금 낮았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심하다는 응답의 합이 50%를 넘었지만, 2020년에는 다시 심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2021년에는 다시 과반이 바뀌어 심하지 않다는 의견과 심하다는 의견이 각각 48.3%와 51.7%로 집계되었다.

〈표 8-4〉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갈등 정도에 관한 인식(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심하지 않다	3.9	3.8	5.1	4.6	3.7	5.0	4.2	4.8	5.6
별로 심하지 않다	49.6	48.9	49.7	45.6	47.4	43.0	40.8	46.5	42.7
소계	<b>53.5</b>	<b>52.7</b>	<b>54.8</b>	<b>50.2</b>	<b>51.1</b>	<b>48.0</b>	<b>45.0</b>	<b>51.3</b>	<b>48.3</b>
약간 심하다	39.4	41.1	37.5	42.3	40.3	40.5	43.2	40.1	41.8
매우 심하다	7.2	6.2	7.7	7.5	8.6	11.5	11.7	8.7	9.9
소계	<b>46.6</b>	<b>47.3</b>	<b>45.2</b>	<b>49.8</b>	<b>48.9</b>	<b>52.0</b>	<b>54.9</b>	<b>48.8</b>	<b>51.7</b>

자료: 통계청. (2022.5.16.a). 우리 사회 갈등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 2. 사회적 자본 인식

-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
-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정도
-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
-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 신문사에 대한 신뢰 정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하는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와 중앙정부 부처, 국회, 시민단체, 신문사에 대한 신뢰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통합실태조사는 응답자에게 “귀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응답자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별로 믿을 수 없다’, ‘약간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각 기관에 대한 신뢰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으로 “귀하는 다음 기관들이 얼마나 청렴하다고 생각하십니까?”가 사용되었고, 응답자는 기관별로 ‘전혀 믿지 않는다’, ‘별로 믿지 않는다’, ‘약간 믿는다’, ‘매우 믿는다’ 네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씩을 선택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난 9년 동안 전반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13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27.8%에 그쳤지만, 이후 그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에 49.4%까지 올라, 국민 절반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1년에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다시 40.7%로 줄었지만 2010년대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른 사람을 매우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한때 6%를 넘기도 했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1%대로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5〉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믿을 수 없다	2.5	2.9	2.2	2.1	2.5	1.9	2.5	2.4	2.5
별로 믿을 수 없다	25.3	23.5	31.5	31.9	32.3	28.9	31.3	47.0	38.2
소계	<b>27.8</b>	<b>26.4</b>	<b>33.7</b>	<b>34.0</b>	<b>34.8</b>	<b>30.8</b>	<b>33.8</b>	<b>49.4</b>	<b>40.7</b>
약간 믿을 수 있다	66.8	67.4	61.8	65.9	62.4	65.0	60.2	49.3	57.7
매우 믿을 수 있다	5.4	6.2	4.4	5.3	2.9	4.2	6.0	1.3	1.6
소계	<b>72.2</b>	<b>73.6</b>	<b>66.2</b>	<b>71.2</b>	<b>65.3</b>	<b>69.2</b>	<b>66.2</b>	<b>50.6</b>	<b>59.3</b>

자료: 통계청. (2022.5.16.b).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정도는 약간의 오르내림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졌다. 2013년 조사 결과는 대중 가운데 약 35%만이 중앙정부 부처를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앙정부 부처를 믿는다는 응답은 계속 줄어들어 24.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7년에는 반등하여 40.8%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다시 38.3%로 줄었지만 2013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56%를 기록하면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8-6〉 중앙정부 부처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믿지 않는다	13.4	19.3	17.3	29.3	11.7	8.0	12.1	8.2	7.0
별로 믿지 않는다	51.2	47.8	50.8	46.0	47.5	46.8	49.5	42.4	37.0
소계	<b>64.6</b>	<b>67.1</b>	<b>68.1</b>	<b>75.3</b>	<b>59.2</b>	<b>54.8</b>	<b>61.6</b>	<b>50.6</b>	<b>44.0</b>
약간 믿는다	33.5	31.6	30.7	22.4	39.3	42.9	36.3	46.3	49.1
매우 믿는다	1.8	1.3	1.2	2.2	1.5	2.4	2.0	3.1	6.9
소계	<b>35.3</b>	<b>32.9</b>	<b>31.9</b>	<b>24.6</b>	<b>40.8</b>	<b>45.3</b>	<b>38.3</b>	<b>49.4</b>	<b>56.0</b>

자료: 통계청. (2022.5.16.c). 기관별 신뢰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국회를 믿는다는 응답보다 믿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최근 들어 믿는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음을 사회통합실태조사가 보여준다. 2013년~2019년 사이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회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2016년에는 믿지 않는다는 의견이 87.4%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믿지 않는다는 의견이 80% 아래로 줄었고, 2021년에는 국회를 믿는다는 의견이 큰 폭으로 늘어 34.4%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에 43.9%까지 높아졌던 전혀 믿지 않는

다는 의견이 2021년에는 19.8%까지 줄어든 반면, 2017년 0.7%에 불과했던 매우 믿는다는 응답이 2021년에는 6.2%까지 늘었다. 2021년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국민 3분의 1은 국회를 신뢰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7〉 국회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믿지 않는다	30.1	34.9	33.0	43.9	31.9	30.1	32.7	30.2	19.8
별로 믿지 않는다	53.2	47.1	51.6	43.5	53.1	54.9	47.6	48.7	45.8
소계	<b>83.3</b>	<b>82.0</b>	<b>84.6</b>	<b>87.4</b>	<b>85.0</b>	<b>85.0</b>	<b>80.3</b>	<b>78.9</b>	<b>65.6</b>
약간 믿는다	16.0	15.6	14.4	11.5	14.3	13.7	17.3	18.7	28.2
매우 믿는다	0.7	2.4	0.9	1.1	0.7	1.3	2.4	2.4	6.2
소계	<b>16.7</b>	<b>18.0</b>	<b>15.3</b>	<b>12.6</b>	<b>15.0</b>	<b>15.0</b>	<b>19.7</b>	<b>21.1</b>	<b>34.4</b>

자료: 통계청. (2022.5.16.c). 기관별 신뢰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는 2014년에 50% 아래로 떨어진 다음, 2010년대 후반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20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3년 50.5%였던 시민단체를 믿는다는 의견이 2018년에 43.6%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19년에는 소폭 상승하였고,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다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4%가 시민단체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8〉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믿지 않는다	9.9	11.9	11.7	11.5	8.8	8.6	12.2	8.8	7.9
별로 믿지 않는다	39.9	39.9	43.4	41.3	44.9	47.8	43.7	44.5	38.7
소계	<b>49.8</b>	<b>51.8</b>	<b>55.1</b>	<b>52.8</b>	<b>53.7</b>	<b>56.4</b>	<b>55.9</b>	<b>53.3</b>	<b>46.6</b>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약간 믿는다	45.7	43.4	41.3	43.1	43.3	39.6	39.1	42.5	45.3
매우 믿는다	4.8	4.7	3.6	4.1	3.6	4.0	5.0	4.2	8.1
소계	<b>50.5</b>	<b>48.1</b>	<b>44.9</b>	<b>47.2</b>	<b>46.9</b>	<b>43.6</b>	<b>44.1</b>	<b>46.7</b>	<b>53.4</b>

자료: 통계청. (2022.5.16.c). 기관별 신뢰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2013년~2020년 사이에는 신문사를 믿는다는 응답 비율보다 믿지 않는다는 의견 비율이 높았지만, 2021년에는 신문사에 대한 신뢰도가 50%를 넘었다. 2013년에 45.1%였던 신문사를 믿는다는 응답이 등락을 거듭하며 2019년에는 34.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그 수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41.8%, 2021년에는 50.1%로 집계되었다.

〈표 8-9〉 신문사에 대한 신뢰 정도(2013~2021년)

(단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혀 믿지 않는다	10.4	12.7	11.6	14.2	11.3	9.9	16.3	9.7	8.1
별로 믿지 않는다	44.5	41.1	45.9	41.9	49.6	50.5	49.4	48.5	41.8
소계	<b>54.9</b>	<b>53.8</b>	<b>57.5</b>	<b>56.1</b>	<b>60.9</b>	<b>60.4</b>	<b>65.7</b>	<b>58.2</b>	<b>49.9</b>
약간 믿는다	42.7	42.4	39.0	39.7	36.8	37.1	30.8	38.9	41.9
매우 믿는다	2.4	3.9	3.5	4.2	2.2	2.6	3.4	2.9	8.2
소계	<b>45.1</b>	<b>46.3</b>	<b>42.5</b>	<b>43.9</b>	<b>39.0</b>	<b>39.7</b>	<b>34.2</b>	<b>41.8</b>	<b>50.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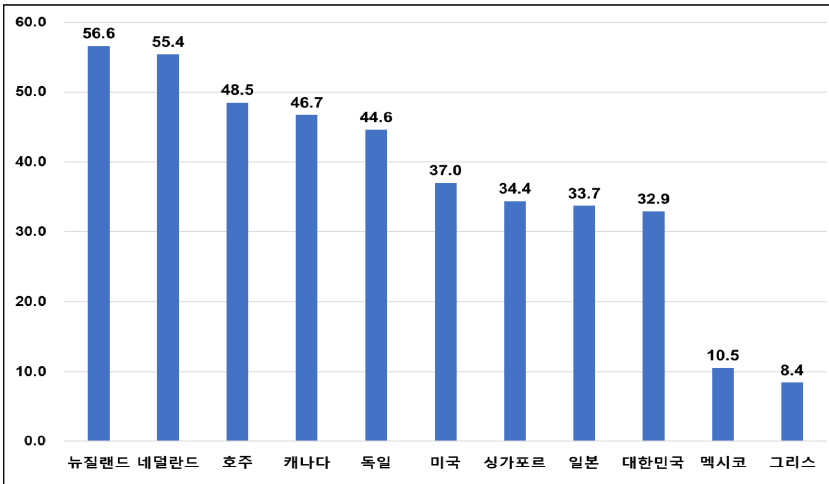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22.5.16.c). 기관별 신뢰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World Values Survey Wave 7(2017~2022)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자본 수준은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믿는지에 관한 물음에 우리나라 응답자들 가운데 32.9%만이 믿는다고 답했다. 반면 뉴질랜드와 네덜란드는 각각 56.6%와 55.4%를 보여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타인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캐나다, 독일 역시 40%를 상회했고, 미국,

싱가포르, 일본 역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멕시코와 그리스는 각각 10.5%와 8.4%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8-6] 국가별 “사람 대부분을 믿을 수 있다”는 응답 비율

(단위: %)



자료: World Values Survey. (2022).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Results in % by country weighted by w\_weight Study #WVS-2017 v5.0. Retrieved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2022.10.30.

행정부, 의회, 자선·인권 단체, 언론을 신뢰하는 대중의 비율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12.9%로 17.4%를 보인 미국보다도 낮았다. 반면, 캐나다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80.6%로 나타났다. 의회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뢰도는 14.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미국과 호주 역시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14.4%와 14.8%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캐나다 사람들은 70% 정도가 의회를 믿는다고 밝혔고, 네덜란드와 뉴질랜드는 40%를 넘는 신뢰도를 보였다. 자선·인권 단체의 경우 많은 나라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신뢰한다는 의견을 표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48.4%로 나타나 미국, 싱가포르, 독일과 함께 50%에 미치지 못했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역시 우리나라는 13.7%로 집계되어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독일은 69.4%, 캐나다는 54.9%, 멕시코는 49.5%, 네덜란드는 42.6%로 집계되어 우리나라보다 언론을 믿는 대중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8-10〉 기관에 따른 국가별 신뢰 정도

(단위: %)

구분	행정부	의회	자선·인권 단체	언론
그리스	30.3	27.6	57.4	17.4
네덜란드	46.1	44.3	60.1	42.6
뉴질랜드	44.2	42.3	62.4	36.3
대한민국	12.9	14.2	48.4	13.7
독일	39.9	31.1	31.3	69.4
멕시코	51.3	20.7	61.5	49.5
미국	17.4	14.4	46.2	26.8
싱가포르	28.3	26.4	42.0	32.5
일본	50.0	38.9	62.1	26.6
캐나다	80.6	69.6	51.0	54.9
호주	33.4	14.8	61.8	29.5

자료: World Values Survey. (2022).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Results in % by country weighted by w\_weight Study #WVS-2017 v5.0. Retrieved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2022.10.30.

### 3. 복지 확대 및 증세에 대한 인식

-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
-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해마다 시행하는 재정패널조사는 복지 확대와 증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포함한다. 이 조사는 “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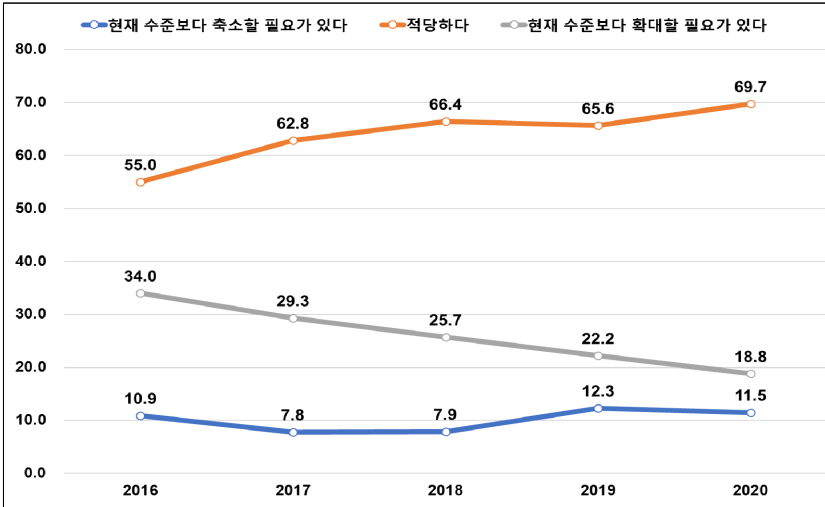


재 수준보다 축소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으로 복지 확대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을 수집한다.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는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적당하다’, ‘현재 수준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한다. 한편 복지 확대를 위한 응답자의 증세 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는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면, 귀하는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에서 추가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한다. 이 물음에 대해 응답자는 ‘추가 부담할 의향이 없음’, ‘현재 세금의 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현재 세금의 5~10% 미만 추가 부담 의향’, ‘현재 세금의 10~15% 미만 추가 부담 의향’, ‘현재 세금의 15% 이상 추가 부담 의향’ 중 하나를 골라 응답한다. 1차 연도 재정패널조사는 2008년에 시작되었지만, 위 두 가지 문항은 9차 연도 조사인 2016년부터 포함되기 시작했다.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2016년부터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음이 눈에 띈다. 2016년 복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4%였지만, 2017년에는 30% 아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18.8%까지 내려갔다. 반면 적당하다는 의견은 상승세를 보이며 2016년 55%에서 2020년 69.7%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현재 수준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10% 내외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8-7] 현재 복지 수준에 대한 인식(2016~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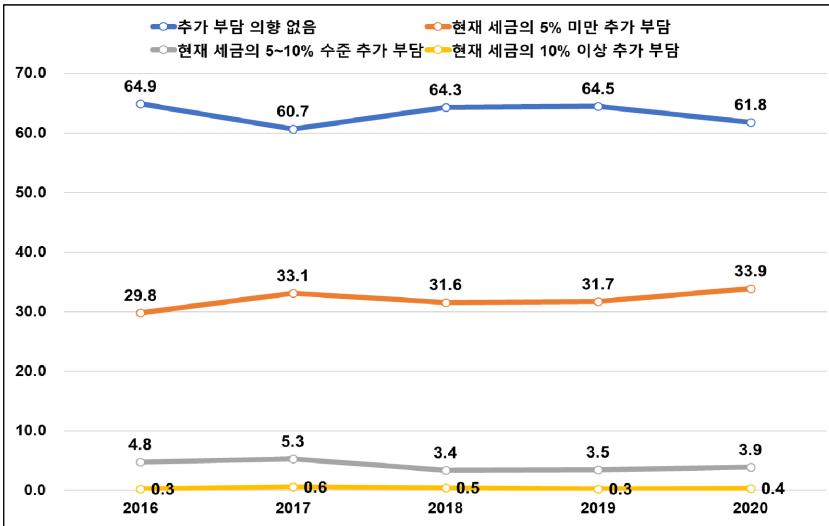
- 자료: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9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65.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71.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71.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33.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80.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낼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매년 60% 이상의 응답자가 추가 부담 의향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2020년 동안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는 의견은 60~6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반면 현재 세금의 5% 미만의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6년 이후 소폭 상승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 비율이 2016년에는 29.8%였지만, 2017년에는 33.1%까지 올랐고, 2018년과 2019년에도 31%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2020년에는 33.9%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현재 세금의 5~10% 수준을 더 내겠다는 의견은 2016년 4.8%와 2017년 5.3%에 비해 소폭 하락하여 2020년에는 3.9%로 나타났다. 현재 세금의 10%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매년 1% 미만으로 집계되어 그 수가 매우 소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8] 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 부담 의향(2017~2020년)

(단위: %)



- 자료: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9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65.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71.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71.  
 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33.  
 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80.

## 제3절 사회보장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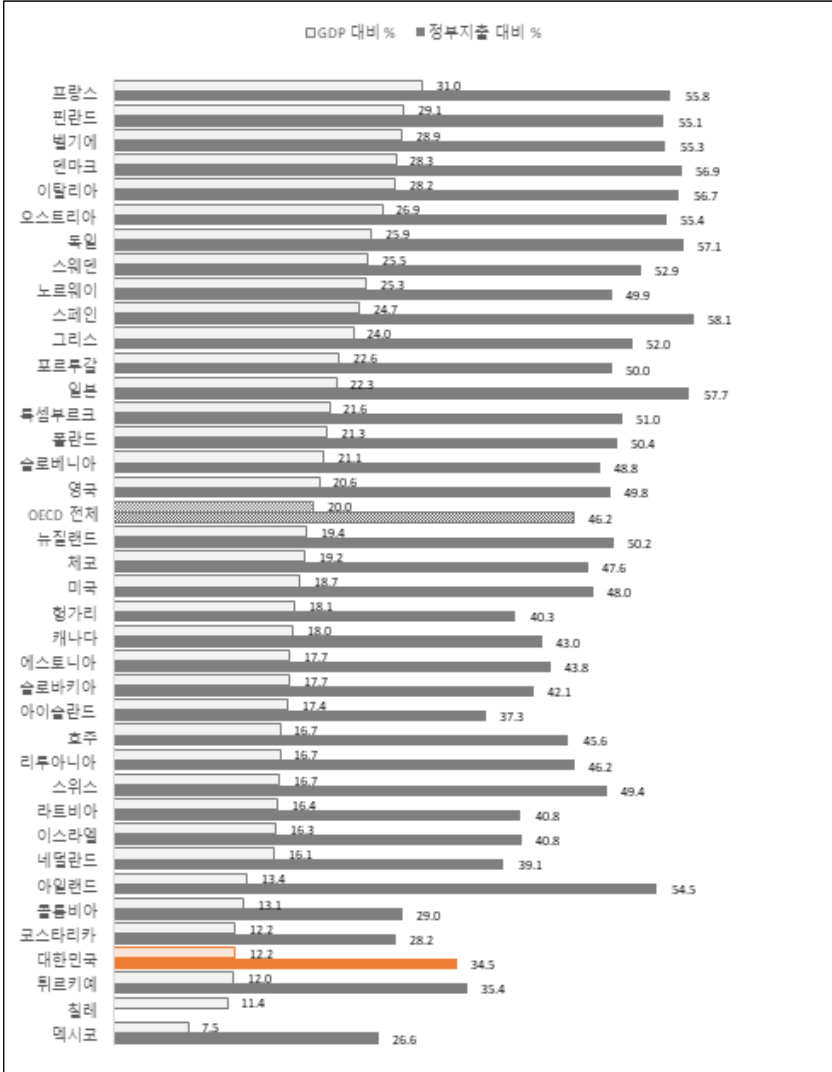
### 1. 총사회지출

OECD에서 공개하는 총사회지출은 국제비교를 위해 GDP, 총정부지출, 그리고 국민 1인당 GDP의 단위를 활용한다.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는 프랑스로 31.0%에 달한다. 핀란드와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가 각각 29.1%, 28.9%, 28.3%, 28.2% 수준으로 그 뒤를 잇는다. OECD 전체 국가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0.0% 수준인데, 한국은 12.2%로 약 60% 수준에 그친다.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12.0%), 칠레(11.4%), 멕시코(7.5%)이다.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58.1%에 달한다. 그 뒤를 일본(57.7%), 독일(57.1%), 덴마크(56.9%), 이탈리아(56.7%) 순으로 잇고 있다.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인 프랑스의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비중은 55.8%로 전체 38개 국가 중 6번째 순으로 높다. OECD 전체의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46.2% 정도 수준인 데에 비해, 한국은 34.5%로 75%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에 비해 정부지출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29.0%),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6.2%)이다.

[그림 8-9] 주요국의 사회지출

(단위: GDP 대비 %, 정부지출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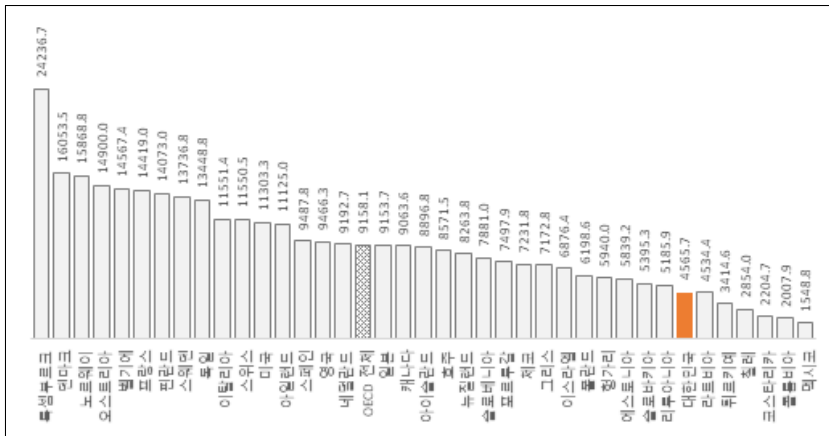
주: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함.

자료: OECD. (2022i).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data-00166-en> 2022.1 0.14.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마지막으로, 1인당 사회지출을 비교할 수 있다. 1인당 사회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24,236.7\$이다. 1인당 사회지출이 두 번째로 많은 덴마크의 16,053.5\$와 비교하면 약 8,200\$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 뒤를 노르웨이(15,868.8\$), 오스트리아(14,900.0\$), 벨기에(14,567.4\$)가 있고 있다.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프랑스의 1인당 사회지출은 14,419.0\$로 6번째 수준이다. OECD 전체의 1인당 사회지출이 9,158.1\$인 데에 비해, 한국 1인당 사회지출은 4,565.7\$ 수준으로 나타나 전체의 약 5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전체 38개 OECD 가입국 중 라트비아(4,534.4\$), 튀르키예(3,414.6\$), 칠레(2,854.0\$), 코스타리카(2,204.7\$), 콜롬비아(2,007.9\$), 멕시코(1,548.8\$)를 제외한 32번째 수준인 것이다.

[그림 8-10] 주요국의 1인당 사회지출

(단위: US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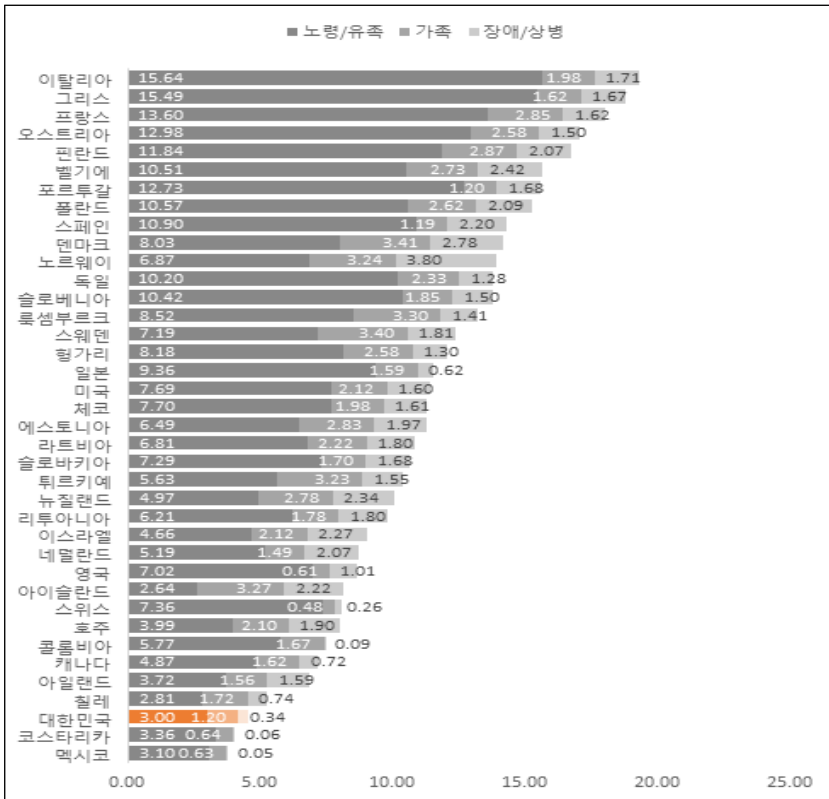
주: 현재(current prices)에 구매력평가지수(PPPs)를 반영하여 US 달러로 환산한 값임.  
 자료: OECD. (2022i).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data-00166-en> 2022.1 0.14.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2. 분야별 사회지출

다음 그림은 고령(old age)과 유족(survivors), 가족(family), 장애(disability)와 상병(sickness)의 주요 분야별 사회지출을 GDP 대비 비중으로 측정해 비교하고 있다.

[그림 8-11] 주요국의 주요 분야별 사회지출

(단위: GDP 대비 %)



주: 누적 그래프임. 각 분야별 사회지출 비중의 합이 총사회지출과 같지 않음.

자료: OECD. (2022i).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data-00166-en> 2022.1 0.14.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해당 분야 사회지출의 GDP 대비 비중 합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고령과 유족이 15.64%, 가족이 1.98%, 장애와 상병이 1.71%이다. 그 뒤를 그리스와 각각 15.49%, 1.62%, 1.67%로 잇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고령과 유족 분야 사회지출이 GDP 대비 3.00%, 가족이 1.20%, 장애와 상병이 0.34%로 전체 38개 가입국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 3. 국민부담률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 경상 GDP × 100
- 사회보장부담률 = 사회보장 기여금 / 경상 GDP × 100

국민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그중에서 사회보장부담률을 제한 나머지를 조세부담률이라고 정의한다(국가지표체계, 2022.1.11.).

OECD 가입국 중에서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46.5%에 달한다. 그중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은 0.06% 정도로, 국민부담률의 대부분이 조세부담률이다.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부담률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45.4%이다. 그중에서 사회보장 기여금은 14.9% 수준이다. 그 뒤를 벨기에(43.1%), 이탈리아(42.9%), 스웨덴(42.6%), 오스트리아(42.1%), 핀란드(41.9%)가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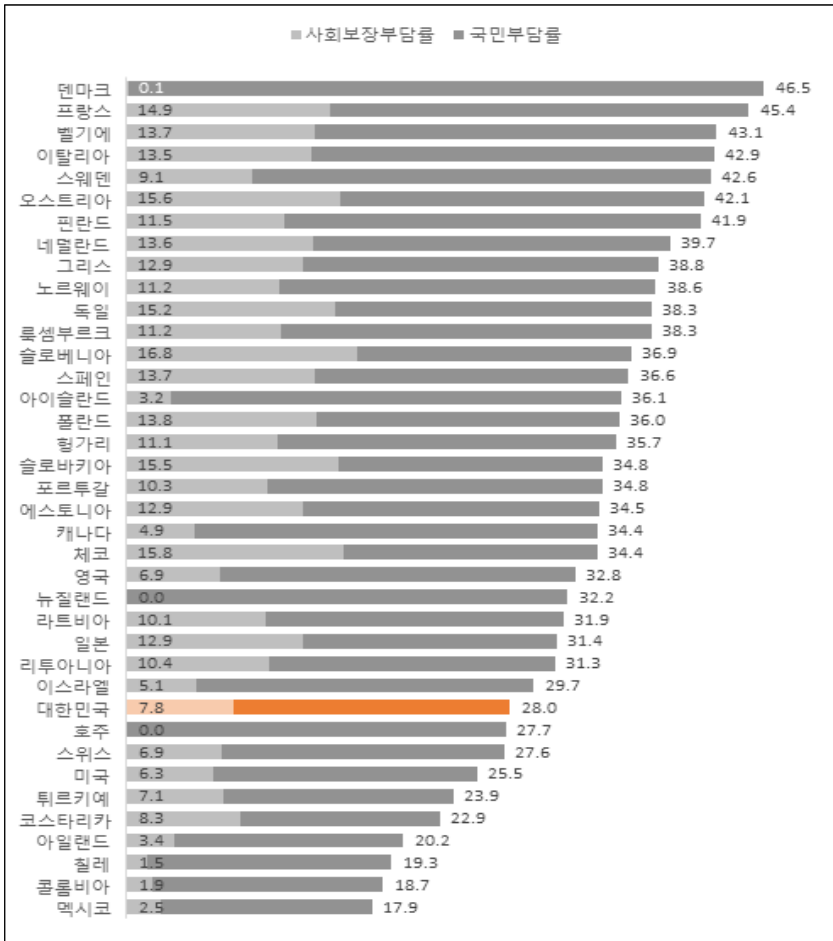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8.0%로, 38개 OECD 가입국 중 29번째 수준이다. 그중에서 사회보장부담률은 7.8%로, 전체 국민부담률의 28%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국가는 순서대로 호주(27.7%), 스위스(27.6%), 미국(25.5%), 튀르키예(23.9%), 코스타리카



(22.9%), 아일랜드(20.2%), 칠레(19.3%), 콜롬비아(18.7%), 멕시코(17.9%)이다.

[그림 8-12] 주요국의 국민부담률

(단위: GDP 대비 %)



주: 사회보장부담률은 국민부담률의 하위 요소임.

자료: OECD. (2022).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OECD Tax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data-00262-en> 2022.10.18. 인출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4.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분야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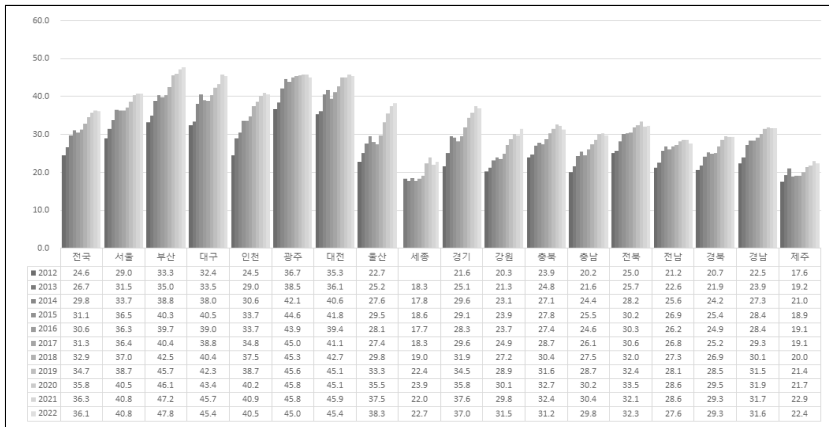
- 사회복지예산 비율 = 사회복지 분야 예산 /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 100
- 사회복지예산<sub>t</sub> 증가율 = (사회복지예산<sub>t</sub> - 사회복지예산<sub>t-1</sub>) / 사회복지예산<sub>t-1</sub> × 100

다음 그림은 최근 10년 정도 우리나라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당초 기획된 예산을 중심으로 약간의 등락은 보이지만,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 17~37% 범위에서 2022년에는 22~48% 범위를 보였다. 최종 집행된 예산을 기준으로 검토해도 지역에 따라 약간의 등락을 보이지만 2012년 16~36% 범위에서 2022년 22~46% 범위로 증가하였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특·광역시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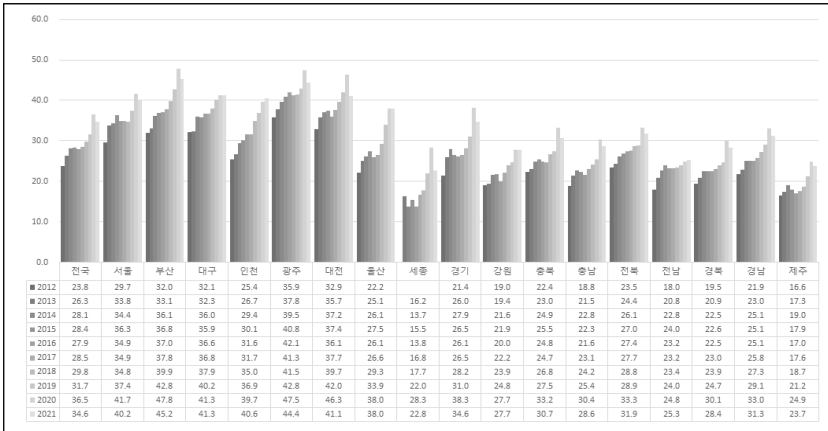
[그림 8-13] 2012~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비중

(단위: %)

< 당초 예산 >



## 〈 최종 예산 〉



주: 예산 합계액 대비 비율임.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n.d.). 통합재정개요(세출).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earch/sd001\\_cs001.xml](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earch/sd001_cs001.xml) 에서 2022.10.18. 인출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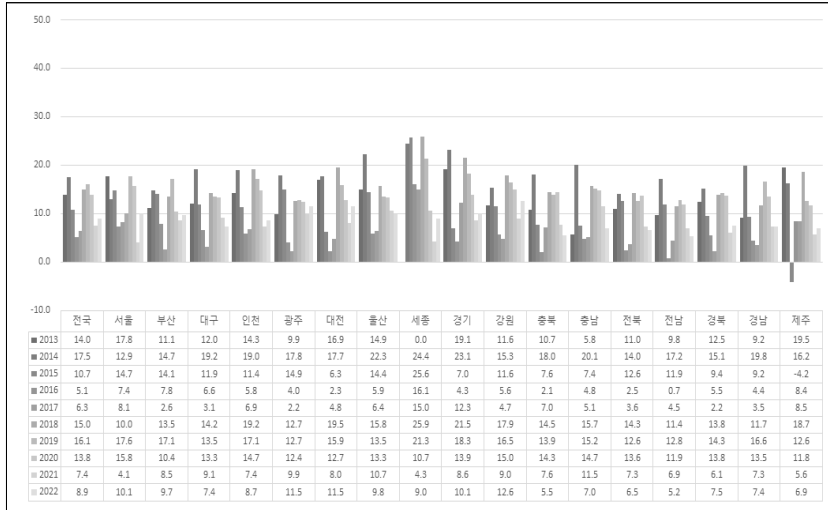
다음 [그림 8-14]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노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021년은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이 감소하였거나 음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인 2020년에 전 지구에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응해 추가 편성된 예산 집행액이 증가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실제 사회복지예산액의 감소폭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20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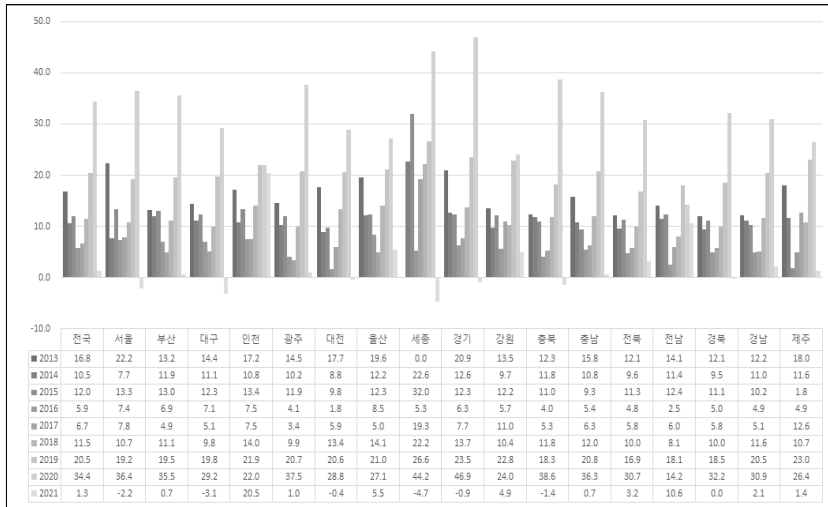
[그림 8-14] 2012~2022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단위: %)

〈 당초 예산 〉



〈 최종 예산 〉



주: 예산 합계액 대비 비율임.  
 자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n.d.). 통합재정개요(세출).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earch/sd001\\_cs001.xml](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earch/sd001_cs001.xml) 에서 2022.10.18. 인출 자료를 이용해 저자 작성.

## 제4절 거시지표

### 1.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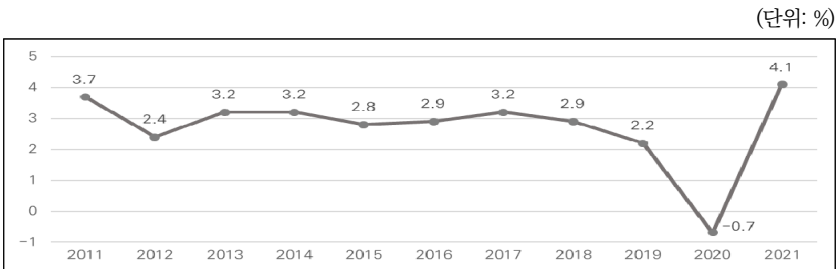
$$\text{경제성장률} = \{(\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 \div \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주요 거시지표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에 대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8-15]의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2010년대 이후 대체적으로 2~3%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다만 2020년에 -0.7%로 급하락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경향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완화되고 경기가 회복됨으로 인해 4.1%로 다시 증가했다.

[그림 8-16]은 OECD 국가의 2021년 경제성장률이다. 한국은 38개국 중에 31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아일랜드가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은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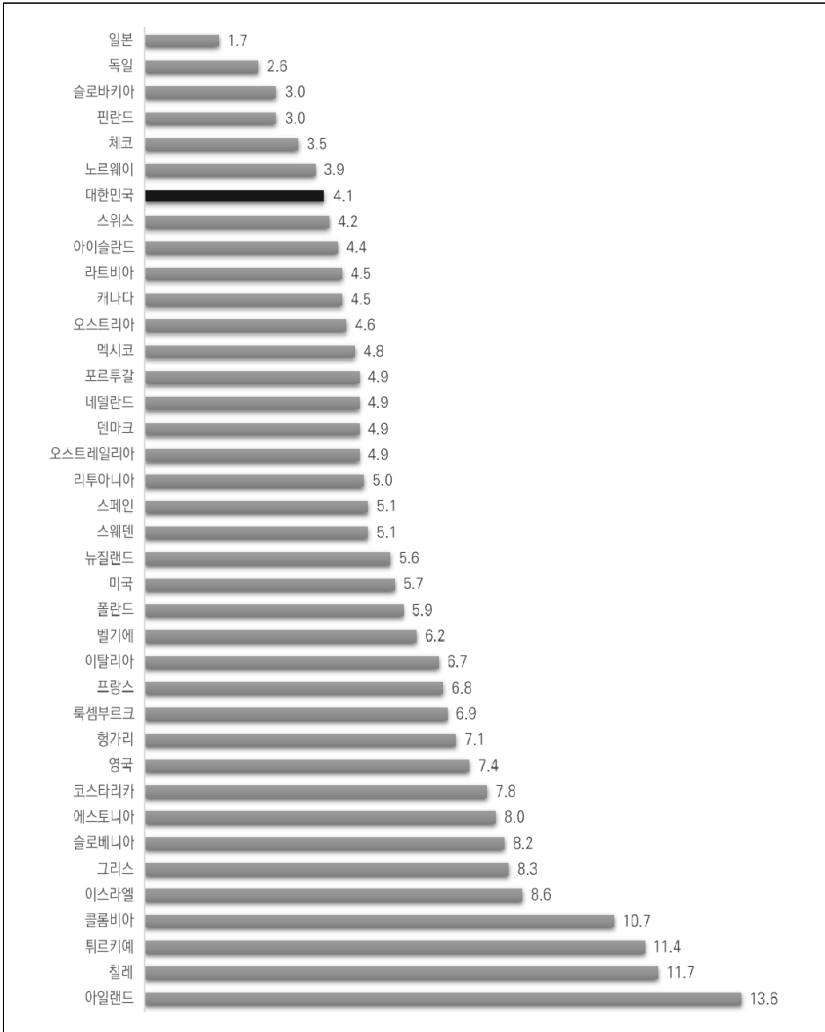
[그림 8-15]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2011~2021년)



자료: IMF. (2022. 10.). Real GDP growth,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 WORLD?year=2022](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 WORLD?year=2022) 2022. 10.28.

[그림 8-16] OECD 경제성장률(2021년)

(단위: %)



자료: IMF. (2022.10.). Real GDP growth,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year=2022](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year=2022) 2022.10.28.

## 2.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물가지수 = 2010년을 100으로,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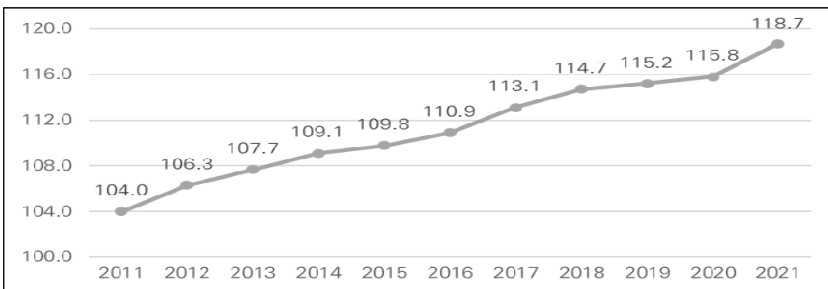
그다음은 물가상승률 지표로, IMF의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17]의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는 2011년 104, 2015년 109.8, 2021년 118.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1년도에 비해 약 14% 상승했다.

다만 국제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한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OECD 회원국 38개국 기준 24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11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 또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은 편에 해당한다. 튀르키예의 경우 2021년 소비자물가지수가 2011년도 106.5에서 314.8로 급증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국가는 스위스이며 2021년도 99.4로, 2011년도 100.2에서 감소했다.

[그림 8-17]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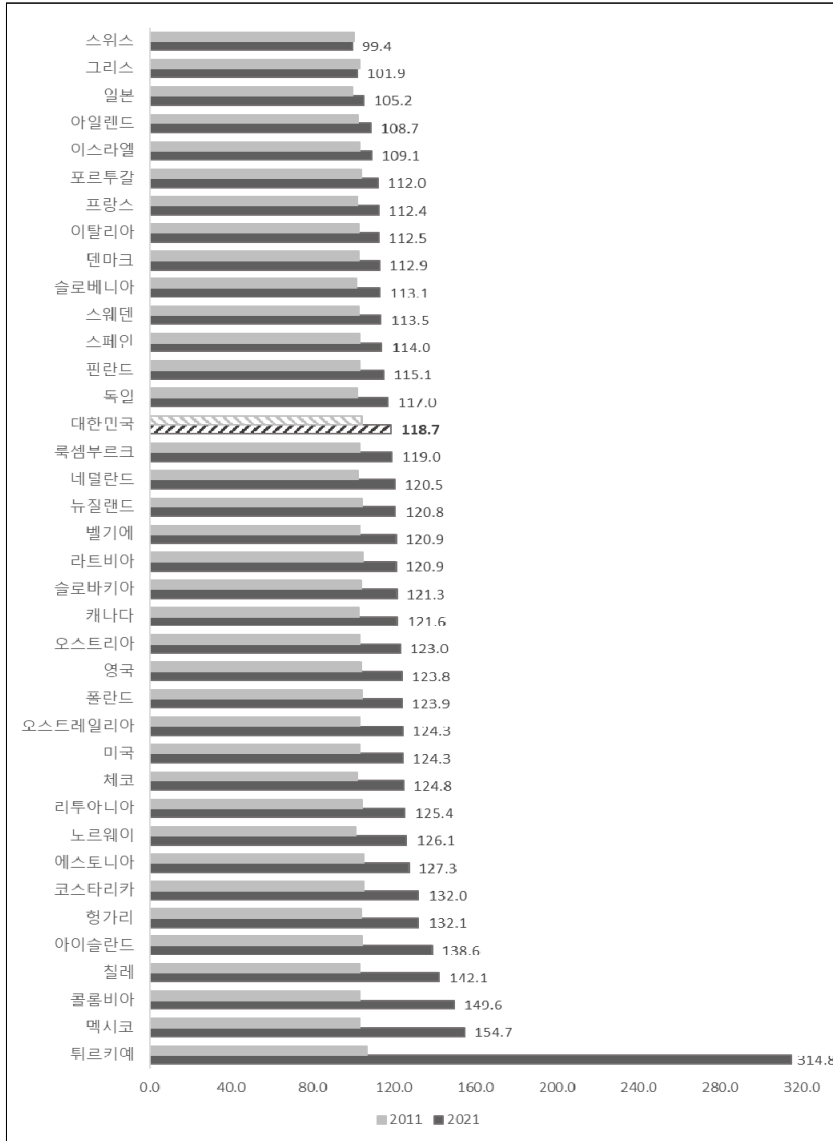
(단위: 2010=100)



자료: IMF. (2022c). Consumer Price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3087884> 2022.10.28.

[그림 8-18] OECD 소비자물가지수(2011/2021)

(단위: 2010=100)



자료: IMF, (2022c). Consumer Price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3087884> 2022. 10. 28.



### 3. 기후변화

- 이산화탄소 연평균 농도: 관측 지점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농도의 연평균
- 연평균 기온 편차 = 연평균 기온과 평년값의 차이
  - 평년값: 1991~2020년 평균 기온으로, 45개 지점 기준 12.8℃임.
-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 = 연평균 해수면 높이를 1989년의 해수면 높이 0.0cm 기준으로 변환한 값
- 연평균 해수면 온도 편차 = 연평균 해수면 온도와 평년값의 차이
  - 평년값: 1991~2020년 평균 해수면 온도로, 정선해양관측 지점 기준 17.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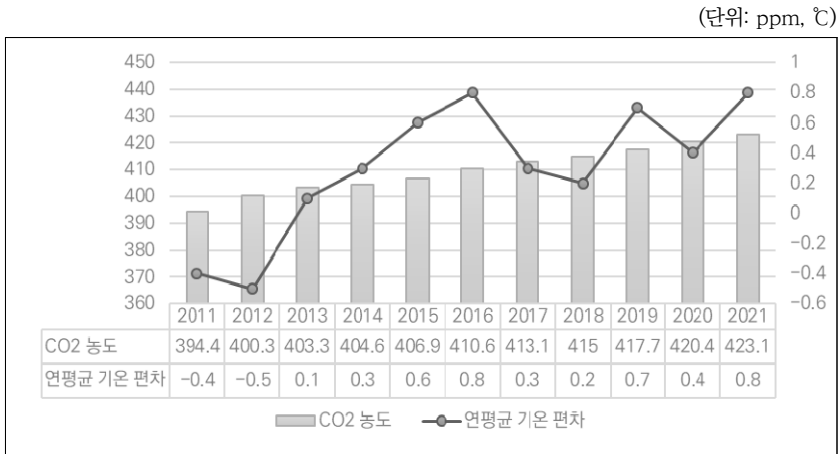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기온, 이산화탄소 농도, 해수면 지표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8-19]와 [그림 8-20]은 국내와 전 지구의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기온”은 기후시스템의 주요 변수로 기후변화 감지와 인류/자연발생 요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는 주요 인자이다(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a). 기온 편차는 연평균 기온과 평년(1991~2020년 평균)값의 차이를 나타낸 값이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온난화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국내와 전 지구 지표를 보면, 모두 전 지구의 기온 편차가 증가함에 따라 이산화탄소 농도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전 지구의 온도 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수준은 전 지구의 수치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국내의 2021년의 기온 편차는 0.8℃,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1ppm으로 2011년도에 비해 온도 편차가 1.2℃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28.7ppm 증가했다. 전 지구의 2021년의 기온 편차는 0.2℃, 2020년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2ppm으로, 2011년에 비해 각각 0.3℃, 22.1ppm 증가하였다.

[그림 8-21]의 해수면 온도 편차는 정선해양관측 지점의 연평균 온도와 평년(1991~2020년: 17.1℃)과의 차이를 계산한 것으로, 매년 해양에서의 열 흡수 정도를 보여준다. 2010년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며, 2016년도 연평균 온도 편차가 0.8℃로 최근 20년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해수면 온도의 증가는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높은 해수면 온도로 해빙이 녹아 해수면 높이를 증가시킨다.

[그림 8-21]은 국내 해수면 높이 편차와 온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국내 해수면 높이 편차는 국내 조위관측소 21개 지점의 연평균 해수면 높이를 1989년의 해수면 높이와의 차이로 계산한 것이다. 해수면 온도와 같이 증감이 반복되지만, 1989년 대비 해수면 높이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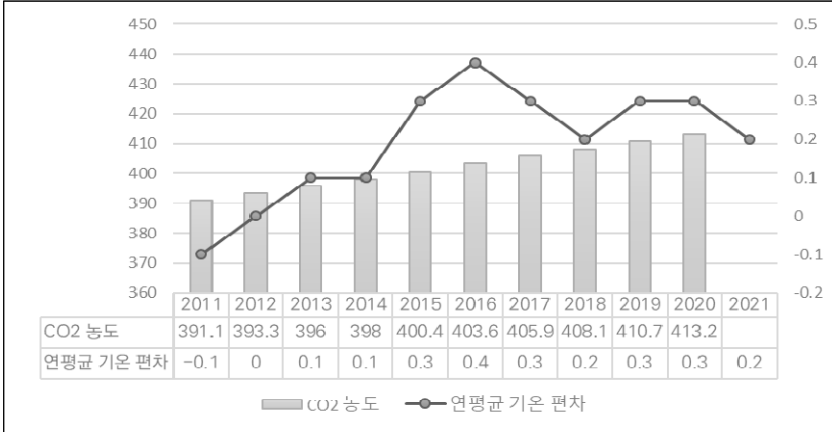
[그림 8-19] 국내 기온 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2011~2021년)



주: 1) 평균 기온 편차는 45개 지점 기준  
 2) 이산화탄소 연평균 온도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 관측치 기준  
 자료: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b). 국내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 에서 2022.10.28. 인출.

[그림 8-20] 전 지구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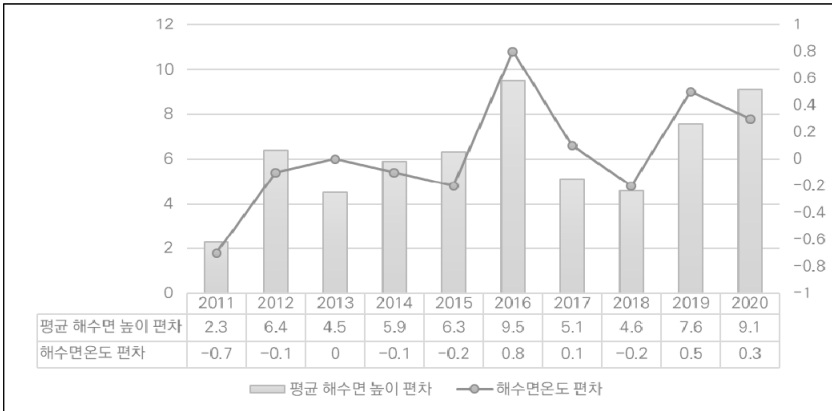
(단위: ppm, ℃)



자료: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c). 전 지구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 에서 2022.10.28. 인출.

[그림 8-21] 국내 연평균 해수면 온도와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2011~2021년)

(단위: cm, ℃)



주: 1) 연평균 해수면 높이 편차는 국내 조위관측소 21개 지점 기준

2) 해수면 온도 편차는 정선해양관측 지점 기준

자료: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d). 국내 해수면 온도와 해수면 높이, 평균기온 비교.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에서 2022.10.28. 인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9장

## 결론 및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



## 제 9 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사회정책 전반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동향 분석틀(framework)에 대한 합의와 주기적인 동향 분석은 비어 있다는 문제 의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지표로 보는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게 생산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동향 분석 관련 선행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두 차례의 전문가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 성과와 동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자료원, 사회정책 분야별 핵심성과지표로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선행연구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회정책의 관점에서 측정지표의 필요성, 활용성, 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 그리고 사회보장 일반 분야의 사회정책 성과를 분석하였다. 자료의 이용가능성 범위 내에서 최근 10년간의 시계열 추세와 최근 횡단면 국제비교를 통해 분야별 사회정책 성과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자 하였다.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발과 정책 분야별 동향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합의를 발견하였다. 첫째, OECD, IMF 등의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나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동향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지표체계의 구성이나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지표의 의미를 해석하는 활용에 있어서, 비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해 이 연구에서는 지표로 확인하는 다분야 정책 동향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지표체계를 재구조화하여 동향 분석틀을 제안하고 해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한시적으로 시도되었으므로, 제2절에서는 주기적인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하여 실천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제2절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제언

### 1. 분야별 사회정책 동향의 주기적 분석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시도하면서 동향 분석틀을 제안하고 보건의료,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인구, 사회보장 일반의 사회정책 다분야를 포괄하였다. 제4장부터 제8장까지 동향 분석을 시도하면서, 분야별 주기적 동향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범주의 광범위성, 대상별·기능별 서비스의 분절적 제공 구조로 인해 사회서비스 정책의 성과는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개인이 가진 사회서비스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서비스 공급 구조, 전달체계가 제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지표를 생산하면 수백 개의 지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성과



(outcome) 지표도 서비스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의 지표로 통일될 수 없다. 다양한 서비스 영역이 하나의 범주로 통합될 경우, 사회적 책적으로 생산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중요성이 낮아 제외될 지표가 있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는 대상별, 기능별 정책 여건 및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서 중요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제5장에서 소득보장 분야의 연간 동향을 제시하였으나, 가구의 소득 변화가 계절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경기나 개인 경제활동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측정시점을 세분화할 필요도 있었다. 분기별로 조사되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나,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의 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점하지 않은 지표는 생략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유한 개별 정책 여건을 고려하고 동향 분석의 충분성을 고려하면, 분야별 동향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OECD에서도 사회 전반, 연금, 교육, 건강, 환경 등 분야별 주요 동향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개별 정책의 전문성과 정보의 충분성을 확보하고 있다(〈표 2-4〉참조).

## 2. 2차 자료 이용가능성 제약 완화 노력

이 연구에서는 정책 분야 및 영역별 측정지표를 활용해 사회정책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통계청이나 OECD Statistics 등에서 공표한 지표값을 수집하거나 가계금융복지조사나 사회조사, 한국복지패널, 의료복지패널 등 원자료를 분석하여 지표값을 생산하였다. 그런데 자료의 이용가능

성 제약으로 인해, 사회정책의 동향을 분석,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활용하지 못한 지표들이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질환의 발생, 의료이용, 자원과 관련한 지표들이 그 예이다.

특히 행정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지표 또한 사회정책 동향 분석들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분야의 정책 성과 지표는 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실태조사(설문조사) 또는 행정자료를 토대로 생산된다. 이 중에서 실태조사는 행정자료로 포착할 수 없는 서비스의 잠재수요를 파악하기에는 용이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낮은 표본 대표성, 상대적으로 긴 조사 주기(최소 1년~최대 5년), 원자료 공시 시점의 지연 등의 문제로 최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함의를 얻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부처별·제도별로 공급과 수요 현황을 집계한 연간 통계 연보를 활용하거나, 행복e음 등 전자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행정자료를 요청하여 2차 가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서비스 정책 성과를 측정한다.

사회정책 동향 분석이 단순 정보 수집이 아닌 신규 지표 생산과 가공의 의미를 가지려면, 자료 수집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2차 자료, 특히 행정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제3장에서 생산 필요성이 높게 응답된 사회서비스 분야 탈시설화율 지표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현황 정보를 바탕으로 월 또는 연 단위 산출이 가능하지만, 지표 산출을 위한 행정자료 이용을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기적 생산이 용이하지 않다.

최소한 전자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원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지원 서비스 이용률 지표의 경우, 미등록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용률을 산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다. 2021년 6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제공 요청(제42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정책의 심의, 조정, 연구를 위한 행정데이터의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정책적 필요가 높은 지표는 사회보장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보장통계 지표로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등 최소한 연도별 지표가 가공·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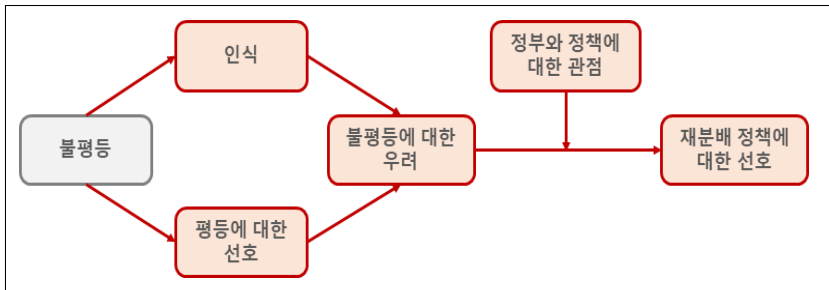
### 3. 원자료 생산 및 활용

원자료가 미생산되거나 접근성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 일반에서 국민들의 행복 수준은 국제비교를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갤럽 월드 폴(Gallup World Poll)을 원자료로 하여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값을 제시하였다. 공개된 자료는 재가공이 어렵고, 민간조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원자료에서 한국인의 표본은 연간 1,000명 정도인데도 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된다. 원자료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충분성과 재정적 제약을 고려하면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목적으로 원자료를 자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원자료를 생산하는 경우, 자료의 시의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대규모 실태조사는 법률에 의해 3~5년 주기로 시행된다. 사회보장 일반의 사회인식에서 차별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기적으로 생산되면서도 가용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체 조사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를 표적으로 하여 조사한다면 자료의 측정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국내에서 주요 여론조사는 필요에 따라 개별 조사주체에 의해 실시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관리, 공개되고 있다.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국민 인식과 여론을 시의성 있게 추적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주간 영국인의 정서를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YouGov, n.d.). 이를 통해 2020년 팬데믹이 시작할 당시 도시 봉쇄(lock-down)의 부정적 영향과 회복 추세를 즉시 확인하였다. 국민 인식과 선호는 정책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이자 동력이다([그림 9-1] 참조). 차별적이고도 시의성 있는 사회정책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 주기를 단축하여 주요 국민 인식과 정책 선호를 핵심모듈로 하고 유효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질문을 부가모듈로 하는 “사회정책 국민 인식 동향조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9-1] 국민 인식이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자료: OECD. (2021b). Does Inequality Matter?, OECD Publishing. p.18의 그림을 저자 변역.

#### 4.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선과 시의성 확보

국내외 동향분석 선례와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정책적 의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에서 자체 생산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보건의료 분야의 한국의

료패널 및 환자서비스경험조사, 소득보장 분야의 한국복지패널이 대표적이다. 한국의료패널과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미충족 의료율,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 등 대표 지표의 인포그래픽 등을 제공하고 있고, 기본적인 조사결과의 기초 통계는 주기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연구보고서 형식이므로 가독성 및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을 주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핵심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동향 분석틀을 제안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핵심성과지표를 변경하거나 필요에 따라 부가지표를 더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보장 분야의 가계 영역에서 가구 단위 소득과 지출,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제시하였다. 팬데믹 이후 양적 완화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청년과 중장년, 노인 등 성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형성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계 현황을 주요 집단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등장하고 있다.

## 5.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이 연구에서 사회정책 성과의 수준 및 격차의 시계열적 궤적을 분석하고, 국제비교 관점에서 현주소를 진단하여, 시의성 있게 생산된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 전략 수립과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초연구로서 한시적인 시도로는 동향 분석의 의의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제언을 바탕으로 개선된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2차 자료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운영하거나 사회정책 동향 분석 DB를 상시 관리하기 위한 인력

또한 필요하다.

주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전망실과 북한경제 연구실, 부동산연구팀 등을 두고 경제전망 및 경제동향, 북한경제리뷰, 부동산시장 동향 등의 동향 분석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별도의 동향분석실을 두고 분야별 고용 및 노동 분야 통계집을 발표하고 있다. 사회정책 동향 분석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 다분야별 전문 인력에 의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1. 국내 문헌

- 고경환, 장영식, 신정우, 고금지, 신지영, 진재현, 천미경. (2018).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2020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공단. (2022). 국민연금 공표 통계(2022년 6월말 기준). 전주: 국민연금공단.
- 김동일, 이주영, 안예지. (2021).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로소, 서울대학교.
- 김성아. (2022). 사회적 고립의 심리적 비용: 주요국과의 비교. 사회보장연구, 38(3), 115-152.
- 김유휘, 최미진, 홍문기, 류진아. (2019). 사회복지 의무보호서비스 제도 구축에 대한 기초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지, 최정원, 김용진, 김태용, 최효임. (2022). 2022 장애통계연보.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문신용, 윤기찬. (2008). 공공서비스의 통합적 분석: 성과분석 평가의 이해. 서울: 삼영사.
- 박은자, 송은솔, 김혜윤, 서제희, 최슬기, 이해정, ..., 윤열매. (2021). 2019년 한국의료패널기초분석보고서(II).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이윤경, 오신휘, 황남희, 임지영, 강은나, ..., 이화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마련 지원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무부. (202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과천: 법무부.
- 보건복지부. (2012). 2011 보건복지 통계 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1b). 2021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a). 통계로 본 2021년 기초연금.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2b). 2022 주요업무 참고자료. 세종: 보건복지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022). 2021년 사학연금 통계연보. 나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신정우, 고숙자, 이영숙, 이태진, 정영철, 최현수, ..., 고훈진. (2020).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0.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안수란, 이주민, 서운경, 김유휘, 어유경, 정세정, 박세경. (2021).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안수란, 하태정. (2021).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생산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현성, 신정우, 김준호, 박영택, 김희년, 백세종, ..., 최용석. (2021). 2020년 국민보건계정. 세종: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조운화, 서육영. (2018). OECD국가 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통계청. (2013.1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제정(안).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0b). 2019년도 생활시간 조사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22). 2022 고령자통계. 대전: 통계청.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9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0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11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12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13차년도 재정패널 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 해외 문헌

- Behn, Robert D., Wart, Montgomery Van., Berman, Evan., Thoenig, Jean-Claude., Birckmayer, Johanna D., Weiss, Carol H., ..., Martin, Lawrence L. (2006). 정책평가와 성과관리(이광희, 한종희, 윤수재, 강은숙, 공병천, 홍재환 역). 서울: 대영문화사.
- Foster, Vivien., & Chen, Rong. (2021.5.25.) *Measuring the quality of the enabling environment: Global Data Regulation Survey*. Washington: World Bank Group.
- Helliwell, J. F., Layard, R., Sachs, J. D., De Neve, J.-E., Aknin, L. B., & Wang, S. (Eds.). (2022). *World Happiness Report 2022*.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IMF. (2022.8.). *IMF Publications*.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n/Publications> 2022.8.23.
-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a). *Pensions at a Glance 2021*. Paris: OECD Publishing.
- OECD. (2021b). *Does Inequality Matter?*. Paris: OECD Publishing.
- Peña-Casas, R., Ghailani, D., Spasova, S., & Vanhercke, B. (2019). *In-work poverty in Europe: A study of national policies*.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 Peters, G. (1996). *The Future of Governing*. Kansas: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UNDP. (2020). *2020 HDR Technical Note*. Retrieved from <https://hdr.undp.org/system/files/documents//technical-notes-calculating-human-development-indices.pdf> 2022.10.14.

### 3. 인터넷 인출 자료

- e-나라지표. (2022).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 [https://www.index.go.kr/unit/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https://www.index.go.kr/unit/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0)에서 2022.10.28. 인출
- e-나라지표. (2022.7.28.). 결혼이민자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에서 2022.9.29. 인출.
- e-나라지표. (2022.8.1.). 기준 중위소득 추이. [https://www.index.go.kr/unit/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https://www.index.go.kr/unit/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62) 에서 2022.11.21.인출.
- e-나라지표. (2022.8.12.).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04) 에서 2022.10.1. 인출.
- e-나라지표. (2022.12.19.). 지니계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07) 에서 2022.12.20. 인출.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n.d.). 아빠육아지원(아빠넷). <https://worklife.kr/website/index/m5/bonus2.asp> 에서 2022.12.21. 인출.
- 공무원 연금공단. (2022.10.13.). 공무원연금공단\_연금수급자 추이. <https://www.data.go.kr/data/15052972/fileData.do> 에서 2022.10.25.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2.1.11.). 국민부담률. <https://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popup=Y&clasCd=2&idxCd=5015> 에서 2022.10.18.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2.7.13.). 고령화지수.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popup=Y&clasCd=2&idxCd=5064> 에서 2022. 9. 30.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2.12.2.). 가사노동.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2> 에서 2022.12.21.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2a).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14> 에서 2022.10.6. 인출.
- 국가지표체계. (2022b).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55> 에서 2022.10.6. 인출.
- 국립국어원. (2022a). 사회정책.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2.8.23. 인출.
- 국립국어원. (2022b). 성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2.8.23. 인출.
- 국립국어원. (2022c). 동향.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2.8.23. 인출.
- 국립국어원. (2022d). 시계열.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에서 2022.8.23. 인출.
- 국방부. (2022.8.9.). 군인연금 현황 : 군인연금 수급인원 현황. <https://opendata.mnd.go.kr/openinf/sheetview2.jsp?infId=OA-9534> 에서 2022.10.25. 인출.
- 법제처. (202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육아휴직). [https://easylaw.go.kr/CS/UnScRlt.laf?search\\_put=%EC%9C%A1%EC%95%84%ED%9C%B4%EC%A7%81](https://easylaw.go.kr/CS/UnScRlt.laf?search_put=%EC%9C%A1%EC%95%84%ED%9C%B4%EC%A7%81)에서 2022.12.21. 인출.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OECD Health Statistics 2021(소책자). <http://doi.org/10.23061/hs2021320>에서 2022.10.26. 인출.
- 보건복지부. (2022.7.29.).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418&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2418&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C%A4%80+%EC%A4%91%EC%9C%84%EC%86%8C%EB%93%9D) 에서 2022.11.24. 인출.
- 사회보장정보원. (n.d.). '21년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주요통계.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st>

- atistic/view.do?p\_sn=15 에서 2022.10.23. 인출.
- 오건호. (2022.2.28.).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22510010341629>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a). 기온.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meteo/temp\\_intro](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meteo/temp_intro)에서 2022.10.28. 인출.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b). 국내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에서 2022.10.28. 인출.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c). 전지구 기온편차와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에서 2022.10.28. 인출.
- 종합 기후변화감시정보. (2022d). 국내 해수면온도와 해수면높이, 평균기온 비교. [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http://www.climate.go.kr/home/09_monitoring/info/download_data)에서 2022.10.28. 인출.
-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n.d.). 통합재정개요(세출). [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earch/sd001\\_cs001.xml](https://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search/sd001_cs001.xml) 에서 2022.10.18. 인출.
- 질병관리청. (2021). 우울감 및 증상,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건강통계. <https://health.kdca.go.kr/healthinfo/biz/pblcVis/details.do?ctgrSn=65>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15). 2015 고령자통계-통계표.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A%B3%A0%EB%A0%B9%EC%9E%90](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6/1/index.board?bmode=read&bSeq=&aSeq=34856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EA%B3%A0%EB%A0%B9%EC%9E%90)에서 2022.10.28. 인출.
- 통계청. (2018.7.3.).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에서 2022.10.24. 인출.

- 통계청. (2019.12.16.).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9314&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6/index.board?bmode=read&aSeq=379314&pageNo=&rowNum=10&amSeq=&sTarget=&sTxt=) 에서 2022.12.25. 인출
- 통계청. (2020.7.30.). 맞벌이·외벌이 가구별 평균시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_1TM1A81X&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019_058_1TM1A81X&conn_path=I2) 에서 2020.10.1. 인출.
- 통계청. (2021.4.21.a.). 성별 18세 이상 성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4&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4&conn_path=I2) 에서 2022.10.24. 인출.
- 통계청. (2021.4.21.b.). 연간 가구총소득분위별 18세 이상 성인 가구의 미충족 의료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12345N_056&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 통계청. (2021.5.18.). 시도 산업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3&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K52C03&conn_path=I2)에서 2022.10.26. 인출.
- 통계청. (2021.12.1.).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6&conn_path=I3) 에서 2022.12.24. 인출.
- 통계청. (2021.12.9.).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생산연령인구, 고령인구 등) / 전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BPA00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mode=tab&orgId=101&tblId=DT_1BPA003)에서 2022.10.23. 인출.
- 통계청. (2021.12.18.).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1%EC%9D%B8%EA%B0%80%EA%B5%AC](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544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 에서 2022.10.1. 인출
- 통계청. (2021a). 통계설명자료-생명표. <https://www.narastat.kr/metascv/i>

- ndex.do?orgId=101&confmNo=101035&kosisYn=Y 에서 2022.10.24. 인출.
- 통계청. (2022.1.25.). 2021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4/index.board?bmode=read&aSeq=416482) 에서 2022.10.26. 인출.
- 통계청. (2022.4.12.a). 주관적 건강인지를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21&conn_path=I3)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4.12.b). 현재 흡연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01&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4.12.c). 매일 흡연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3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235&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4.12.d). 연간 음주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1&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4.12.e). 고위험 음주율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8&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018&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4.12.f). 비만 유병률(체질량지수 기준)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77&tblId=DT_11702_N101&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4.25.a). 전국 연령별,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3)에서 2022.10.23. 인출
- 통계청. (2022.4.25.b). 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vw_cd=)

- MT\_ZTITLE&list\_id=G\_22&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에서 2022.10.23. 인출.
- 통계청. (2022.5.16.a). 우리 사회 갈등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9&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 통계청. (2022.5.16.b).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6&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 통계청. (2022.5.16.c). 기관별 신뢰 정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38&conn_path=I2) 에서 2022.10.30. 인출.
- 통계청. (2022.7.2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총괄(일반, 시설)-시도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1&conn_path=I3) 에서 2022.10.28. 인출.
- 통계청.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2/2/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536&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10.1. 인출.
- 통계청. (2022.8.23.). 연령별 자격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3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6_N032) 에서 2022.10.23. 인출.
- 통계청. (2022.8.24.). 2021년 출생통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97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19974&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에서 2022.9.29. 인출.
- 통계청. (2022.8.30.).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학대 피해 노인 성별 분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_200)

- 9\_H5037&vw\_cd=MT\_ZTITLE&list\_id=C\_8\_001\_00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2.10.23. 인출.
- 통계청. (2022.9.1.).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4&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9.6.). 기능별-재원별 의료비 지출규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8_2009NN3&conn_path=I3) 에서 2022.10.25. 인출.
- 통계청. (2022.9.27.). 사망원인(104항목)/성/연령(5세)별 사망자 수, 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conn_path=I3) 에서 2022.10.24. 인출.
- 통계청. (2022.9.29.). 실업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35&conn\\_path=I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KAA335&conn_path=I2) 에서 2022.10.24. 인출.
- 통계청. (2022.10.11.). 피해아동 발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vw_cd=MT_ZTITLE&list_id=117_11764_00B&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에서 2022.10.23. 인출.
- 통계청. (2022.11.7.). 피해장애인 주장매유형.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8\\_C003&vw\\_cd=MT\\_ZTITLE&list\\_id=G\\_002\\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08_C003&vw_cd=MT_ZTITLE&list_id=G_002_005&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에서 2022.11.26. 인출.
- 통계청. (2022.11.11.).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 추이.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02&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32S0102&vw_cd=&list_id=&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에서 2022.11.26. 인출.
- 통계청. (2022.12.1.).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 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에서 2022.12.10. 인출.
- 통계청. (2022.12.6.). 완전생명표(1세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2&conn_path=I3) 에서 2022.12.14. 인출.
- 통계청. (2022.12.7.).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보도자료.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2214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1%EC%9D%B8%EA%B0%80%EA%B5%AC](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422143&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rch&sTarget=title&sTxt=1%EC%9D%B8%EA%B0%80%EA%B5%AC) 에서 2022.12.25.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a). 가구 생활비 분위별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한국의료패널.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7](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7) 에서 2022.10.26. 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b).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 비율, 한국의료패널. [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6](https://www.khp.re.kr:444/web/research/board/surveyresult_view.do?&bbsid=61&seq=16) 에서 2022.10.26. 인출.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17.12.1.). 노동-육아휴직.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939&pageFlag=&sitePage=> 에서 2022.12.21. 인출.
- IMF. (2022.10.). *Real GDP growth,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2)*.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year=2022](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_RPCH@WEO/OEMDC/ADVEC/WEOWORLD?year=2022) 2022.10.28.
- IMF. (2022a). *GDP per capita, current prices*. Retrieved from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NGDPDPC@WEO/OEMDC/ADVEC/WEOWORLD> 2022.12.22.
- IMF. (2022b). *GDP, current prices*. Retrieved from <https://www.imf.or>

- g/external/datamapper/NGDPD@WEO/OEMDC/ADVEC/WEOWORLD 2022.12.22.
- IMF. (2022c). *Consumer Prices,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s://data.imf.org/regular.aspx?key=63087884> 2022.10.28.
- OECD. (2022a). *OECD Health Statistics 2022*.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HEALTH_STAT#) 2022.10.24.
- OECD. (2022b). *Health Status : Maternal and infant mortalit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health-data-en&doi=data-00540-en#](https://stats.oecd.org/BrandedView.aspx?oecd_bv_id=health-data-en&doi=data-00540-en#) 2022.10.25.
- OECD. (2022c). *Health expenditure and financing*.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9> 2022.10.26.
- OECD. (2022d). *Poverty rate (indicator)*. Retrieved from doi: 10.1787/0fe1315d-en 2022.8.22.
- OECD. (2022e).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 Incidence of low pay*.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EC_I) 2022.10.30.
- OECD. (2022f). *Incidence of unemployment by duration*.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DUR_D) 2022.10.30.
- OECD. (2022g). Total fertility rate, *family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FAMILY> 2022.9.29.
- OECD. (2022h). How's Life? Well-Being,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b8a8569d-en> 2022.10.14.
- OECD. (2022i).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b8a8569d-en>

- 1787/data-00166-en 2022.10.14.
- OECD. (2022j). Revenue Statistics: Comparative tables, *OECD Tax Statistics (database)*.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787/data-00262-en> 2022.10.18.
- OECD. (n.d.a).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Retrived from <https://stats.oecd.org/#> 2022.3.21. 및 <https://www.oecd.org/social/expenditure.htm> 2022.12.22.에서 각각 추출.
- OECD. (n.d.b). Better Life Index.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Data]*. Retrieved from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1111111111> 2022.3.21.
- OECD iLibrary. (n.d.). Retrieved from <https://www.oecd-ilibrary.org> 2022.8.25.
- YouGov. (n.d.). *Britain's mood, measured weekly*. Retrieved from <https://yougov.co.uk/topics/science/trackers/britains-mood-measured-weekly> 2022.10.29.

#### 4.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2021).
- 최저주거기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20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관 (2021).
- 한국은행법, 법률 제15427호 (2018).

## 5. 데이터 베이스

보건복지부. (2021a). 국민보건계정 [데이터].

질병관리청. (2020).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

질병관리청. (각 연도). 지역사회건강조사[데이터].

통계청. (2020a). 생명표 [데이터].

통계청. (2021b). 사망원인통계[데이터].

통계청.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데이터].

통계청. (각 연도). 지역별 고용조사(하반기 B형) [데이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 한국의료패널조사 [데이터].

World Values Survey. (2022). *World Values Survey Wave 7 (2017-2022)*  
*Results in % by country weighted by w\_weight Study #WVS-2017*  
*v5.0*. Retrieved from <https://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7.jsp> 2022.10.30.



## [부록 1] 사회정책 동향 분석틀 개발을 위한 전문가조사표

### 1. (1차)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작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작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연구책임자: 김성아 부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작성을 위한 전문가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석틀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 DB 구축 및 정기적인 간행물 발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및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김성아 부연구위원

연구 관련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노현주 연구원

□ 귀하는 사회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산·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표를 생산·수집할 수 있는 자료원은 무엇입니까?

※ 모든 항목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Q1. 보건의료 분야

지표	자료원
(예시) 자살률	사망원인통계

○ Q2. 소득보장 분야

지표	자료원
(예시) 상대빈곤율, 빈곤갭, 지니계수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계동향조사

○ Q3. 사회서비스 분야

지표	자료원
(예시) 분야별 사회서비스 일자리 규모	지역별 고용조사

## ○ Q4. 인구정책 분야

지표	자료원
(예시) 1인 가구 비율, 구성비	인구총조사

## ○ Q5. 사회보장 일반 (국민인식, 재정, 보건복지 이슈 등)

지표	자료원
(예시) 평균 행복(삶의 만족) 점수	한국복지패널, 사회통합실태조사, 사회조사
(예시) GDP 대비 사회지출 비율	OECD SOCX

##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소속기관: \_\_\_\_\_

○ 전공: ① 보건의료분야    ② 사회과학분야    ③ 기타(\_\_\_\_\_)

## 2. (2차)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작성을 위한 전문가 심층 조사 조사표

###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작성을 위한 전문가 심층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인구·사회·경제 상황을 조사하고 연구·분석하며, 사회정책 및 사회보장제도를 수립·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국가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연구책임자: 김성아 부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틀 작성을 위한 전문가 심층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차 조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 성과와 동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생산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취합하였습니다.

이번 심층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취합한 지표 목록을 바탕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정책 주요 분야별로 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생산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성과지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는 향후 사회정책 분야별 성과와 동향 DB 구축 및 정기적인 간행물 발간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응답은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조사 참여에 따른 위험 및 손실은 없습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연락처, 소속기관 등)는 응답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는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응답하기 불편한 내용은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7.

연구 책임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김 성 아 부연구위원

연구 관련 문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 노 현 주 연구원



□ 1차 전문가조사를 통해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를 정책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습니다.

□ Q. 귀하께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정책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생산하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책 분야에 따라 다음의 각 지표가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Q1. 보건의료 분야

건강수준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기대여명	①	②	③	④
2. 건강수명	①	②	③	④
3. 주관적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4. 노인, 장애인 등 ADL/IADL 제약 비율	①	②	③	④
5. 암, 뇌졸중, 고혈압 등 주요 질환 발생률	①	②	③	④
6. 10대 사망원인별 사망률 및 구성비	①	②	③	④
7. 저체중아 발생률	①	②	③	④
8. 영아 사망률	①	②	③	④
9. 치매 검진율, 발생률, 유병률	①	②	③	④

정신건강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자살률 및 주요 집단별 자살률	①	②	③	④
2. 정신질환 유병률 및 주요 집단별 정신질환 유병률	①	②	③	④
3. 우울감 경험률	①	②	③	④
4. 스트레스 인지율	①	②	③	④
5. 자살생각 비율	①	②	③	④
6. 중독률(약물, 인터넷 등)	①	②	③	④

건강행태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건강정보 문해력	①	②	③	④
2. 흡연을	①	②	③	④
3. 음주를	①	②	③	④
4. 비만을	①	②	③	④
5. 신체활동 실천율	①	②	③	④
6. 업무 관련 건강상 문제 발생 인구 규모	①	②	③	④
7. 프리젠템증(아파도 참고 근로한 인구) 규모	①	②	③	④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의료서비스 이용률	①	②	③	④
2.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평균 입원기간, 내원 횟수 등)	①	②	③	④
3. 미충족의료 경험률 및 주요 집단별 미충족의료 경험률	①	②	③	④
4. 예방접종률	①	②	③	④
5. 회피가능 사망률	①	②	③	④
6. 호스피스 이용률	①	②	③	④

정책 수요 및 공급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가구의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	①	②	③	④
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①	②	③	④
3. 건강보험 체납률	①	②	③	④
4. 민간보험 가입률	①	②	③	④
5.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①	②	③	④
6.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과부담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7. 공공의료기관 비율	①	②	③	④
8.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인력, 병상 등)	①	②	③	④
9.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①	②	③	④

Q1-1. 위에 **제시된** 지표 중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예)

Q1-2. 위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핵심지표가 있을까요?

(예)

### ○ Q2. 소득보장 분야

소득분배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상대)빈곤율	①	②	③	④
2. 연령집단별 빈곤율(아동, 청년, 중장년, 노인 등)	①	②	③	④
3. 주요 가구 유형별 빈곤율(장애인, 여성, 한부모 등)	①	②	③	④
4. 지니계수(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①	②	③	④
5. 분위배율(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①	②	③	④
6. 빈곤갭(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①	②	③	④
7. 자산 분배지표	①	②	③	④
8. 경제적 박탈 경험률	①	②	③	④
9.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 감소 효과	①	②	③	④

가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시장소득, 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및 요소별 소득 수준(평균, 중위) 및 구성비	①	②	③	④
2. 가계 총지출 및 요소별 지출 수준 및 구성비	①	②	③	④
3. 가계 총자산 및 요소별 자산 수준 및 구성비	①	②	③	④
4. 가계 총부채 및 요소별 부채 수준 및 구성비	①	②	③	④
5. 소득집단별 소득, 자산, 부채 수준 및 구성비	①	②	③	④
6. 노후생활 준비 및 조달방법	①	②	③	④
7. 주요 취약집단 소득, 자산, 부채 수준(장애인 등)	①	②	③	④
8. 소득 만족도	①	②	③	④

경제활동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경제활동참가율	①	②	③	④
2. 고용률 및 주요 집단별 고용률	①	②	③	④
3. 실업률 및 주요 집단별 실업률	①	②	③	④
4. 공공일자리 참여율(노인일자리 등)	①	②	③	④
5. 비정규직 비율	①	②	③	④
6. 저임금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7. 니트(NEET) 비율	①	②	③	④
8. 평균 노동시간	①	②	③	④
9. 장시간 근로자 비율	①	②	③	④
10. 자활근로자 수	①	②	③	④

정책 수요 및 공급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기준중위소득	①	②	③	④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①	②	③	④
3. 주요 소득보장제도 수급률(공적연금,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등)	①	②	③	④
4. 사회보험 추가입률 및 주요 집단별 가입률	①	②	③	④
5.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①	②	③	④

주거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규모 및 비율	①	②	③	④
2. 임대료 부담률	①	②	③	④
3. 주거접유형태	①	②	③	④
4. 공공임대주택 이용률	①	②	③	④
5. 거주지역 만족도(범죄위험, 인프라 등)	①	②	③	④
6. 노숙인 수	①	②	③	④

Q2-1. 위에 제시된 지표 중 소득보장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예) 상대빈곤율 및 연령집단별 빈곤율 계산 시 중위소득 40%, 50%, 60% 빈곤선 고려

Q2-2. 위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소득보장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핵심지표가 있을까요?

(예)

○ Q3. 사회서비스 분야

(대상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①	②	③	④
2.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주요 돌봄제공기관 (방과후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	①	②	③	④
3. 보육교사 1인당 영유아 비율	①	②	③	④
4. 아동복지시설 수	①	②	③	④
5. 보호아동 수 (가정위탁보호 등)	①	②	③	④
6. 학대 발생률	①	②	③	④
7. 폭력 피해 경험률	①	②	③	④
8. 학교 밖 청소년 수	①	②	③	④

(대상별) 장애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장애 유형별 장애출현율	①	②	③	④
2. 장애인시설 수	①	②	③	④
3. 탈시설화율	①	②	③	④
4. 학대 발생률	①	②	③	④
5. 장애인 활동 현황 (지난 1개월 동안 외출하지 않는 장애인 비율 등)	①	②	③	④
6. 장애인 활동지원 이용자 및 종사자 수	①	②	③	④
7. 장애인 지원서비스 이용률	①	②	③	④

(대상별) 노인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독거노인보호율	①	②	③	④
2. 노인 장기요양 수급률	①	②	③	④
3. 장기요양기관 인력 수급 현황	①	②	③	④
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율	①	②	③	④
5. 노인학대 경험률 및 신고율	①	②	③	④
6. 노인복지시설 수	①	②	③	④
7. 학대 발생률	①	②	③	④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사회서비스 이용률	①	②	③	④
2. 사회서비스 종사자 현황 (종사자 수, 저임금근로자 수, 장시간/초단시간 근로자 수, 종사상 지위별 근로자 수 등)	①	②	③	④
3.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 수	①	②	③	④
4. 사회서비스 필요율	①	②	③	④
5. 사회서비스 만족도	①	②	③	④
6. 사회서비스 인지도	①	②	③	④
7. 공급주체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구성 비율	①	②	③	④

Q3-1. 위에 **제시된** 지표 중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예) 사회서비스 이용률을 주요 사회서비스 분야별 이용률로 세분화

Q3-2. 위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회서비스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핵심지표**가 있을까요?

(예)

## ○ Q4. 인구·가족 분야

인구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총인구(세대) 수 및 지역별 인구(세대) 수	①	②	③	④
2. 주요 집단별 인구수(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성비 등)	①	②	③	④
3. 생산가능 인구수 및 평균 연령	①	②	③	④
4. 지역별 인구수	①	②	③	④
5. 혼인율 및 연령별 혼인율	①	②	③	④
6. 합계출산율	①	②	③	④
7. 모의 연령별 출산율	①	②	③	④
8. 노인인구 비율(고령화지수)	①	②	③	④
9. 부양비(아동, 노인)	①	②	③	④
10. 수도권 등 지역별 인구 구성비	①	②	③	④
11. 사망률 및 지역별 사망률	①	②	③	④

인구이동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인구이동 및 연령별 이동	①	②	③	④
2. 지역별 전출입 비율 및 사유	①	②	③	④
3. 지방소멸지수	①	②	③	④

가족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가구원 수별 가구 수	①	②	③	④
2. 가구원 수 및 주요 가구 유형별 가구 구성률	①	②	③	④
3. 1인 가구 전체 비율 및 구성비(청년, 노인, 지역 등)	①	②	③	④
4. 주요 유형별 가구 비율(청년, 노인 등)	①	②	③	④
5. 미혼인구 비율	①	②	③	④
6. 미혼부모 가족 비율	①	②	③	④
7. 조이혼률	①	②	③	④
8. 다양한 가족 출현율(노인, 한부모, 다문화 등)	①	②	③	④
9. 임신중절 경험률	①	②	③	④

250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일-가정 양립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성별 가사노동시간	①	②	③	④
2. 가족돌봄인구 비율	①	②	③	④
3. 성별 육아휴직자 수	①	②	③	④
4. 출산 전후 모의 취업률	①	②	③	④
5. 자녀 연령별 여성의 평균 취업시간	①	②	③	④
6. 지역별 맞벌이 가구 비율	①	②	③	④

인구·가족 분야 국민인식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결혼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2. 출산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3. 가족관계 만족도	①	②	③	④
4. 노인연령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이주배경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이주민 규모(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①	②	③	④

Q4-1. 위에 **제시된** 지표 중 인구·가족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예)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고려

Q4-2. 위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인구·가족정책 분야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핵심지표**가 있을까요?



## ○ Q5. 사회보장 일반

행복, 삶의 질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전체 인구 및 주요 집단별 행복 수준	①	②	③	④
2. OECD Better Life Index	①	②	③	④
3. 사회적 고립 인구 비율 및 주요 집단별 비율	①	②	③	④

사회인식 및 행태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갈등 및 차별 인식(성별, 장애 등)	①	②	③	④
2. 불평등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3. 복지 확대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4. 보편적 복지 및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5. 증세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6. 사회보장 재정부담 주체에 대한 인식	①	②	③	④
7. 사회이동가능성	①	②	③	④
8. 사회적 자본(일반 및 기관신뢰 등)	①	②	③	④
9. 공정성 인식	①	②	③	④
10. 부패 인식	①	②	③	④
11. 기부 및 자원봉사 인식 및 경험률	①	②	③	④
12.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인식(국민연금 등)	①	②	③	④

재정 및 정책 일반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GDP 대비 총사회지출 및 분야별 사회지출	①	②	③	④
2. 정부예산 대비 사회보장지출	①	②	③	④
3. 1인당 사회지출	①	②	③	④
4. 급여형태별 사회지출	①	②	③	④
5.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①	②	③	④
6. 지방자치단체 총사회복지지출 및 분야별 사회복지지출	①	②	③	④
7. 생애주기별 수혜율	①	②	③	④
8. 1인당 공무원 수	①	②	③	④

거시지표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1. 경제성장률	①	②	③	④
2. 물가상승률	①	②	③	④
3. 기후변화	①	②	③	④
4. 보건복지 이슈	①	②	③	④

Q5-1. 위에 **제시된** 지표 중 사회보장 일반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지표**가 있을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예) Better Life Index의 영역(domain)별 구성 지표값 국제비교

Q5-2. 위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 일반의 주요 성과를 측정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핵심지표**가 있을까요?

(예)

인구사회학적 특성

소속기관: \_\_\_\_\_

전공: ① 보건의료분야    ② 사회과학분야    ③ 기타(\_\_\_\_\_)

## [부록 2]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체계

(부록 표 2-1)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수정 체계

코드	항목명	KSIC 분류코드	KSIC 분류명
<b>1. 종합 사회서비스업</b>			
1-1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업		
1-1-1	종합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1-2	그 외 기타 복지서비스업		
1-2-1	그 외 비거주 복지서비스업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서비스업
<b>2. 돌봄서비스업</b>			
2-1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		
2-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2-1-2	요양병원 운영업	86105*	요양병원
2-1-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2-1-4	보육시설 운영업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2-1-5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2-2	주거보호서비스업		
2-2-1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2-2-2	아동·청소년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2-3	한부모·가정폭력 피해자 등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2-4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1	신체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2-5	그 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b>3. 건강지원 서비스업</b>			
3-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병·의원		
3-1-1	병원	86101	종합병원
		86102	일반병원
		86103	치과병원
		86104	한방병원

코드	항목명	KSIC 분류코드	KSIC 분류명
		86105*	요양병원
3-1-2	의원	86201	일반의원
		86202	치과의원
		86203	한의원
		86204	방사선 진단 및 병리 검사 의원
3-2	공공보건 및 기타 보건업		
3-2-1	공중 보건 의료업	86300	공중 보건 의료업
3-2-2	그 외 기타 보건업	86901	앰블런스 서비스업
		86902	유사의료업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3-3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		
3-3-1	상담 및 재활서비스업	87294	사회복지 상담서비스 제공업
<b>4.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b>			
4-1	교육 관련 서비스업		
4-1-1	초등 교육기관	85110	유아 교육기관
		85120	초등학교
4-1-2	중등 교육기관	85211	중학교
		85212	일반고등학교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4-1-3	고등 교육기관	85301	전문대학
		85302	대학교
		85303	대학원
4-1-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10	특수학교
		85420	외국인학교
		85430	대안학교
4-2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		
4-2-1	사회교육시설	85640	사회교육시설
4-2-2	직원훈련기관	85650	직원훈련기관
4-2-3	그 외 분류 안 된 역량개발 관련 서비스업	85614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코드	항목명	KSIC 분류코드	KSIC 분류명
<b>5.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b>			
5-1	문화 관련 사회서비스업		
5-1-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90221	박물관 운영업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90290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5-1-2	창작 및 예술 관련 공공서비스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예술가
		90132	비공연예술가
		90191	공연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5-2	체육 활동 관련 사회서비스업		
5-2-1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 서비스업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91133	수영장 운영업
5-2-2	체육공원 이용 지원 서비스업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b>6.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업</b>			
6-1	고용지원서비스업		
6-1-1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75110	고용알선업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5122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서비스업
6-1-2	직업재활 서비스업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6-1-3	직업훈련원	8566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
<b>7. 사회서비스 관련 행정</b>			
7-1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7-1-1	교육 행정	84211	교육 행정

256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

코드	항목명	KSIC 분류코드	KSIC 분류명
7-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7-1-3	환경 행정	84213	환경 행정
7-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7-1-5	노동 행정	84221	노동 행정
7-1-6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7-2	사회보장 행정		
7-2-0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행정

주: \* 표시는 2개 이상의 대분류 항목에 중복되는 항목을 의미함.